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경제학박사학위논문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와 효과에 관한 연구



2015년 8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류태건



<목 차>

I. 서론	1
II. 사회자본 이론 분석	3
1. 사회자본의 주요 이론	3
1) 부르디외(Pierre Bourdieu)	3
2) 콜만(James Coleman)	5
3) 퍼트남(Robert Putnam)	8
4) 린(Nan Lin)	11
5) 종합적 논의	16
2. 사회자본 구성요소 분석	20
1) 사회적 네트워크	21
(1) 네트워크의 강도와 크기	21
(2) 네트워크의 폐쇄성과 개방성	24
2) 시민참여	26
(1) 자원결사체	27
가. 개념	27
나. 종류	27
다. 기능	29
(2) 정치참여	31
가. 개념	31
나. 종류	32
다. 기능	32
3) 호혜성	34
(1) 개념	34

(2) 종류	35
(3) 기능	37
4) 신뢰	42
(1) 개념	42
(2) 종류	45
(3) 기능	48
3. 사회자본의 효과	52
1) 경제적 효과	52
2) 정치적 효과	54
3) 사회적 효과	55
4) 개인적(육체적, 정신적) 효과	57
5) 사회자본의 부정적 효과	59
III. 조사연구방법	62
1. 조사연구 주제	62
2. 측정방법	63
1) 사회적 네트워크	64
2) 시민참여	64
3) 호혜성	66
4) 신뢰	67
3. 자료수집방법	70
4. 분석방법	71
1) 분석방법	71
2) 요인분석	71
IV. 분석결과	77

1. 사회자본 현황	77
1) 사회적 네트워크 현황	77
2) 시민참여 현황	78
(1) 자원결사체 참여	78
(2) 정치참여	80
3) 일반화된 호혜성 현황	81
4) 신뢰 현황	82
(1) 대인신뢰	83
(2) 제도신뢰	83
2. 집단 간 차이 분석	87
1) 사회적 네트워크	87
2) 시민참여	89
3) 일반화된 호혜성	93
4) 신뢰	95
3. 사회자본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	99
1) 사회적 네트워크가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	100
(1) 자원결사체참여에 미치는 영향	101
(2)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102
(3) 일반화된 호혜성에 미치는 영향	102
(4) 신뢰에 미치는 영향	103
2) 시민참여가 호혜성 및 신뢰에 미치는 영향	105
(1) 일반화된 호혜성에 미치는 영향	106
(2) 신뢰에 미치는 영향	109
3) 일반화된 호혜성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	113
4. 사회자본 효과	115
1) 사회적 네트워크의 효과	117

2) 시민참여의 효과	118
3) 신뢰의 효과	119
V. 결론	120
참고문헌	124
부록 : 설문지	138



I. 서론

본 연구는 사회자본 관련 이론과 쟁점을 검토한 후, 우리나라의 한 지역(부산시)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그 이론적 내용과 쟁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자본론은 경제적 행위를 포함해서 인간의 모든 행위는 진행 중인 사회관계에 배태되어 있으며 그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신경제사회학(new economic sociology)의 접근법을 공유하고 있다(Woolcock 1998: 155, 각주 10). 나아가 사회자본론은 사회관계 속에는 개인이나 집단 혹은 더 넓은 사회를 위해 유용한 어떤 생산적인 요소 즉 사회자본 요소가 존재한다고 보며, 이러한 사회자본 요소의 종류, 특성, 기능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연구과제로 한다. 물질자본이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도구나 기계 등의 생산설비이고, 인적자본이 개인이 습득하는 지식과 기술이라면, 사회자본은 개인의 사회관계에 배태되어 있는 생산적인 자원이다. 사회자본론에서는 물질·인적자본이 생산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것처럼 이러한 사회자본 역시 그와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본다. 이리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자본은 경제성장과 사회적 안정, 정부의 효율성 내지 민주주의발전, 그리고 나아가 개인의 경제활동이나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긍정적 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분석된다(Putnam 1993a; 2000; Coleman 1988; Knack & Keefer 1997; La Porta et al. 1997; Berkman and Kawachi 2000; Baum et al. 2000; Veenstra 2000; Donovan and Halpern 2003). 결국, 사회자본론은 생산적인 사회관계와 사회발전에 대한 학문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사회자본론은 국가나 지역의 발전과 그 연구를 위한 하나의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있다.

사회자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사회자본론은 이론적, 경험적으로 많은 연구성과를 축적해왔으나, 연구가 진행되면서 또한 여러 가지 쟁점들이 부각되고 있다. 사회자본이 사회관계에 배태된 생산적 요소라고 한다면, 이러한 요소들 즉 사회자본 구성요소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이들은 상호 어떠한 관계에 있으며, 또한 이들의 생산

적 효과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사회자본의 근원을 사회관계로 보는 데에는 연구자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만(Portes 1998: 7; Lin 2001: 24), 사회관계에 들어있는 사회자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다. 예를 들어, 사회적 네트워크와 이에 연계된 타인의 자원을 사회자본 구성요소로 간주하기도 하고; 사회적 네트워크와 이를 통해 조장되는 시민참여, 호혜성의 규범 그리고 신뢰를 사회자본 구성요소로 한정시키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Putnam 1993a; 2000); 범위를 넓혀 국가제도, 법의 지배 및 거버넌스를 사회자본 구성요소에 포함시키기도 한다(Grootaert & Van Bastelaer 2002). 또한, 사회관계 내지 사회적 네트워크(“구조적 사회자본”)와 규범이나 신뢰 등의 행태적 가치(“인지적 사회자본”)(Grootaert & Van Bastelaer 2002: 3)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전자를 원인으로 후자를 결과로 보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Putnam 1993a; 2000; Coleman 1988), 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도 있다(Newton 1997). 나아가 사회자본의 다양한 기능적 효과에 대해서도 여러 실증연구들 사이에서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기도 한다.

이러한 쟁점들에 접해, 먼저 아래 제II장에서는 사회자본 이론의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몇몇 연구자들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하고 여타 관련 연구자들로 논의를 확대하면서 사회자본의 개념, 사회자본 구성요소,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 사회자본의 기능적 효과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제III장과 제IV장에서는 부산시를 모집단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이러한 이론적 논의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시행한다. 부산시를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한 까닭은 단순히 본 연구자의 거주지역 발전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우선 제III장에서는 실증연구를 위한 방법을 소개한다.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자본 구성요소를 어떤 방법으로 측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수집된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분석할 것인가에 대해 언급한다. 그리고 제IV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소개한다. 분석내용은 부산시민의 사회자본 현황, 사회자본 현황의 사회집단별 차이, 사회자본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 사회자본의 기능적 효과 등이 포함된다. 특히, 사회자본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와 사회자본의 기능적 효과에 대한 분석은 이와 관련된 쟁점들을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자본의 증진방안을 모색해보기 위함이다. 마지막 제V장에서는 연구를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는다.

II. 사회자본 이론 분석

1. 사회자본의 주요 이론

사회자본의 이론적 근원은 뒤르케임이나 마르크스 등의 고전적인 사회학에서 찾을 수 있으나 사회자본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분석은 부르디외(Bourdieu)에 의해 이루어졌다(Portes 1998: 3). 그리고 사회자본에 대한 체계적인 개념화 작업은 콜만(Coleman)을 필두로 하고, 사회자본 연구의 보편화는 퍼트남(Putnam)을 계기로 한다(Ostrom & Ahn 2003: xi). 이를 반영하듯, 필드(Field 2008: 1-2)는 부르디외, 콜만 및 퍼트남을 사회자본의 기본이론을 정립한 세 사람으로 꼽는다. 한편 스톨(Stolle 2009: 656)은 콜만, 퍼트남 그리고 린(Lin)을 사회자본의 개념화에 가장 중요한 공헌을 한 연구자로 간주하기도 한다. 이러한 견해들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부르디외, 콜만, 퍼트남 및 린의 사회자본 이론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하고 여타 관련 연구자들로 논의를 확대하면서 사회자본의 이론과 쟁점들을 검토해나가기로 한다.

1) 부르디외(Pierre Bourdieu)

부르디외(Bourdieu 1986: 241-243)에게 있어서 ‘자본’이란 물질적 형태나 체화된(embodied, 몸과 일체화된) 형태로 축적된 노동이고, 이는 상호 전환될 수 있는 다음의 세 가지 기본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즉,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돈으로 전환되며 재산권의 형태로 제도화되는 경제자본,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경제자본으로 전환되며 정신과 신체의 성향으로 체화되고 교육적 성취의 형태로 제도화되는 문화자

본¹⁾,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경제자본으로 전환되며 사회적 의무로 구성되어 있고 신분적 호칭과 같은 형태로 제도화되는 사회자본이 그것이다. 이처럼 자본은 물질적인 모습으로 뿐만 아니라 사고와 행동의 성향으로 체화된 문화적 모습이나 지위나 신분과 같은 사회적인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또한 상호 전환될 수 있으므로, 부르디외는 경제학 이론에서 인식하는 경제자본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형태의 자본까지 고려하지 않고는 사회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런데도 경제학 이론은 교환의 영역을 상업적 교환의 세계로 축소시킴으로써 다른 형태의 교환들은 비경제적인 것 즉 이해관계와 무관한 것으로 간주해왔고, 물질적 자본이 비물질적 형태의 문화자본이나 사회자본의 형태로 변환되거나 혹은 그 반대의 경우로 변환이 일어나는 교환의 형태들은 이해관계와 무관한 것으로 보아왔다고 비판한다.

그는 특히 사회자본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사회자본이란 상호 간의 면식과 인정(mutual acquaintance and recognition)이 다소간 제도화된 관계들의 지속적인 네트워크의 소유에 -혹은 다른 말로, 어떤 집단의 구성원에게- 연계된 실제적인 혹은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으로서, 사회자본은 구성원들 각자에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집단 소유 자본의 후원 즉 구성원에 대한 ‘신용장’을 제공해준다...이 관계들은 가족, 계급, 부족, 학교, 정당 등 공통의 명칭을 적용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제도화되며 보증된다...특정한 행위자가 소유한 사회자본의 양은 그가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크기와 그와 연결된 각각의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본(경제적, 문화적, 상징적 자본)의 양에 달려있다”(Bourdieu 1986: 248-249). 부르디외에게서 사회자본은 ‘상호 간의 면식과 인정이 다소간 제도화된 관계들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즉 다소간 제도화된 집단이 소유한 집합적 자산인 동시에 그 집단 구성원이 개인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자원이다. 따라서 특정 행위자가 소유하고 있는 사회자본의 양은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크기와 이에 연결된 각각의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문화적 자원 등의 양에 달려있다.

한편, 사회자본은 지속적인 사회관계로부터 생기기 때문에, 사회자본의 획득과 재생산은 끊임없이 서로를 확인하고 재확인함으로써 인정을 받는 일련의 지속적인 교

1) 문화자본은 상이한 계급이나 계급분파들 간에 차별되는 교육이나 교양 혹은 습관 등으로 체화된 자산이라는 의미(Bourdieu 1986: 243)에서 개인이 가진 지식과 기술을 의미하는 인적자본과 다르다.

환이라고 할 수 있는 사교행위의 노력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사회자본은 유용한 사회관계나 사회관계의 네트워크를 생산하거나 재생산하려는 개인이나 집단의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투자전략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자본은 다른 모든 형태의 자본의 근간을 이루기는 하나, 경제자본이 사회자본으로 전환되는 데에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교환의 단순히 금전적인 의미나 교환 자체의 의미를 변환시키는 효과가 있는 시간, 관심, 배려 등을 지출하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협의의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런 노력은 순전히 소모적인 일로만 보일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교환이라는 논리에서 볼 때 이것은 명백한 투자행위이며, 장기적으로는 금전이나 다른 형태로 이윤을 가져다준다. 아울러, 대등한 교환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제적 교환의 투명성과는 대조적으로, 사회적 교환의 본질적인 모호성은 시간의 경제를 필요조건으로 한다. 왜냐하면 단순한 부채가 은혜라는 보다 일반적인 마음의 부채로 변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얼마간 시간이 지난 후에야 사용할 수 있는 의무(obligation)의 형태로 된 사회자본을 생산하는 교환(예를 들어 선물, 서비스, 방문 등의 교환)의 경우에는 계산과 보증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보증되지 않은 채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배신의 위험을 수반한다. 사회자본에 대한 부르디외의 연구는 이러한 개념적 분석에 그치고 사회자본의 경험적 분석을 시도한 바는 없다(황익주 2012: 280).

2) 콜만(James Coleman)

다음으로, 콜만의 입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콜만(Coleman 1988)은 우선 사회적 행위를 설명하는 두 가지 큰 지적 경향을 구분한다. 하나는 행위를 사회적 맥락 속에서 규범과 규칙 그리고 의무에 의해 지배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회학적 경향이고, 다른 하나는 행위를 사회적 맥락에서 벗어나 자신의 이기적 이해관계에 따라 효용극대화를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제학적 경향이다. 그런데 사회학적 경향은 ‘인간을 과잉사회화한 개념(oversocialized concept of man)’(Wrong 1961)으로서 인간의 행위를 주체적인 목적이나 의도와 같은 내적 근거가 없이 사회적 환경에 따라 형성되는 것으로 보는 반면, 경제학적 경향은 ‘인간을 과소사회화한

개념(undersocialized concept of man)'으로서 인간의 행위가 사회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고 변화하며 제약을 받는 경험적인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리하여 콜만은 합리적 행위의 과정에 사회적 맥락의 요소를 접목시키고자 하며, 이를 위한 개념적 도구로서 사회자본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개별 행위자를 특정 자원을 이용함으로써 이해를 추구할 수 있는 합리적 행위자로 볼 때, 사회자본은 행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특수한 형태의 자원으로서 다만 이는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구조 안에 내재되어 있다. 다시 말해, 인적자본이나 물적자본과는 달리 사회자본은 행위자 자체에 혹은 물리적 생산도구 속에 존재하지 않고 행위자들 사이의 사회관계에 배태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자본은 어떤 사회관계구조가 수행하는 기능을 통해 그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 이리하여 콜만은 사회자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사회자본은 그것의 기능에 의해서 정의된다. 그것은 단 하나의 실체(entity)가 아니라 다음의 두 가지 요소를 공통으로 가진 다양하고 서로 다른 실체들이다. 즉 이 실체들은 모두 어떤 양상의 사회구조들로 이루어지고, 그 구조에 속하는 행위자들-개인이나 집단-의 특정한 행위를 조장한다. 사회자본은 다른 형태의 자본과 마찬가지로 생산적이다. 그것이 없으면 이룩하기 힘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준다”(Coleman 1988: S98). 즉, 그에게서 사회자본은 행위자들에게 유용한(“생산적”) 행위를 조장하는 사회구조적 요소들이다. 그는 이러한 사회구조적 요소 즉 사회자본으로서 다음의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환경의 신뢰성에 기반하여 존재하는 의무와 기대, 사회구조의 정보유통능력, 그리고 효과적인 제재를 동반하는 규범.”

신뢰성에 기반한 의무와 기대의 경우, 사회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하여 상대방에게는 보답의 의무(obligation)가 발생하고 제공자에게는 상대방의 의무 이행에 대한 기대(expectation)가 형성될 때, 이때 제공자는 일종의 신용장과 같은 사회자본을 소유하게 된다. 이러한 형태의 사회자본의 형성은 두 가지 요소에 의존하는데, 하나는 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환경의 신뢰성(trustworthiness) 정도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의무가 이행되는 정도이다. 이들 두 가지 측면에서 사회구조들은 서로 다르며, 같은 사회구조에 속한 행위자들 사이에서도 의무 이행의 정도에서 서로 다르다. 다시 말해 의무 이행의 정도는 거시적으로 개인이 속한 사회구조 혹은

사회환경의 신뢰성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고, 미시적으로 개인의 신뢰성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

다음으로, 사회자본의 또 하나의 중요한 형태는 사회구조의 정보유통능력과 개인의 이에 대한 접근성이다. 정보는 행위의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지만 정보의 획득에는 비용이 들고 정보는 항상 불충분하게 공급된다. 그런데 가족, 친구, 동료 혹은 여타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는 이러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보통로로서의 사회관계 역시 사회자본이 된다.

끝으로, 규범이 존재하고 또한 제재력이 있을 정도로 효과적이면 그것은 강력한 사회자본을 구성한다. 사회관계에서 효과적인 규범들은 특정 행동을 촉진시키기도 하고 어떤 행동을 제약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범죄를 제약하는 효과적인 규범은 밤중에 홀로 다니는 것을 가능케 한다. 특히 공동체 내에서 중요한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규범 중의 하나는 개인의 이기심을 억제하고 공동체 전체의 목표를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규범이다. 이러한 종류의 규범은 일반적으로 공공선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을 키워내고 공공재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콜만에게 있어서 사회자본이란 사회적 네트워크(사회구조)가 조장하는 신뢰성에 기반한 의무-기대, 정보유통능력 및 규범을 말한다. 부르디외에게서 사회자본은 사회적 네트워크에 연계된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이지만, 콜만에게서 사회자본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조장하는 특정한 행태들(의무-기대, 정보유통, 규범)이다.

콜만에 따르면 “모든 사회관계와 사회구조는 어떤 형태의 사회자본을 조장한다. 행위자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한 그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그렇지만 특정한 사회구조는 어떤 형태의 사회자본을 조장하는데 특별히 중요하다”(Coleman 1988: S105). 콜만은 특히 폐쇄적 사회구조 및 자원결사체(voluntary organization)가 사회자본을 조장하는데 특별히 중요하다고 본다.

우선, 사회구조의 폐쇄성(closure)은 규범이나 신뢰를 조장한다. 폐쇄적인 사회구조 혹은 네트워크에서는 어떤 일탈자가 생길 경우 구성원들이 연합하여 일탈자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어 효과적인 사회 규범을 형성하게 한다. 또한 네트워크의 폐쇄

성은 의무감과 평판에 바탕한 사회적 신뢰의 형성에 있어서도 효과적이다. 개방된 네트워크에서는 평판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의무를 저버리는 사람에 대한 제재도 오직 그 의무 대상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러나 네트워크가 폐쇄적이라면 의무를 저버리는 사람에 대해서 네트워크 내에 나쁜 평판이 형성되고 나아가 집합적 제재도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의무 이행에 더욱 구속되고 이를 바탕으로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 콜만은 이러한 폐쇄적 사회구조가 인적자본의 형성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Coleman 1988; Coleman and Hoffer 1987).

또한, 자원결사체 역시 가입자들의 특정한 목적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 결성된 조직들은 개별 구성원들에게 어떤 도움을 제공할 수도 있고 또한 집단행동을 위한 자원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개인은 하나 이상의 자원결사체나 여타 네트워크에 연계되어 있을 수 있는바, 이 경우에는 하나의 사회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원을 다른 사회관계에까지 활용하도록 한다. 이러한 자원은 정보일수도 있고 의무일수도 있는바, 예를 들어 어떤 X관계에서 획득한 정보를 다른 Y관계에서 활용하거나, X관계에서 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Y관계를 통해서 의무 이행자의 행동을 제재할 수 있다.

3) 퍼트남(Robert Putnam)

이제 퍼트남의 사회자본 이론을 살펴본다. 그의 사회자본 관련 문제의식의 핵심은 집합행동의 딜레마에 있다(Putnam 1993a: 163; 1993b: 35). 즉, 정치영역이건 경제영역이건 모든 사회활동에서 사람들이 협력을 하면 상호이익을 달성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유지의 비극’, ‘공공재의 문제’, ‘집합행동에서의 무임승차’, ‘죄수의 딜레마’ 등의 상황에서 보듯이 합리적 판단에 따라 집합행동에서 이탈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당사자나 사회에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가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흡스적인 제3자 강제개입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강제적 집행에는 비용이 들며 또한 모든 문제를 강제력에 의존하는 사회는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강제력 자체의 중립성과 신뢰성의 문제를 야기한다. 그렇다면 제3자 강제개입이 없이 집합행동의 딜레마를 극복

하게 하여 사회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상호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사회적 요소는 있는가? 그는 이러한 사회적 요소로서 네트워크, 규범(특히 호혜성 규범) 및 신뢰를 거론하고, 이를 사회자본으로 간주한다. 이리하여 그는 사회자본을 “협력적 행위를 촉진하여 사회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신뢰, 규범, 그리고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성들”(Putnam 1993a: 167), 혹은 “개인들 사이의 연계, 그리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호혜성의 규범과 신뢰성”(Putnam 2000: 19)으로 규정한다. 이제 이들 3가지 사회자본 구성요소들에 대한 퍼트남의 견해를 검토해본다.

우선, 사회자본의 발생 근원은 ‘개인들 사이의 연계’ 즉 사회관계이다. 따라서 그는 사회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과 교환관계의 네트워크를 가장 기본적인 사회자본 요소로 간주한다: “사회자본 이론의 핵심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다...시민적 덕성은 호혜적 사회관계의 촘촘한 네트워크 속에 배태되어 있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에 ‘사회자본’은 주목한다”(Putnam 2000: 19). 초기 연구에서 그는 네트워크를 수평적인 것과 수직적인 것으로 구분했다(Putnam 1993a: 89-91, 171-176). 현실 세계에서 거의 모든 네트워크는 수직적인 요소와 수평적인 요소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 정도의 차이는 있다. 수직적 네트워크는 동등하지 않은 행위자들을 위계와 종속의 비대칭 관계로 연결시키고, 수평적 네트워크는 동등한 행위자들을 대등한 관계로 연결시킨다. 집단 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수직적 사회관계에서는 흡스적인 강제적 해결책이 지배적 양식이 되나 수평적 사회관계에서는 호혜성의 규범이 지배적 양식이고 이는 자발적 협력을 유도하는 데에 더욱 효과적이다. 그런데 후속 연구에서 퍼트남(Putnam 2000: 20-24, 362-363)은 네트워크를 수직-수평으로 구분하는 것에서 벗어나, 네트워크 자체를 사회자본이라 칭하며 이를 연계형과 결속형으로 구분한다. 네트워크의 연계형과 결속형 역시 -수직형과 수평형처럼-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지만, 대체로 연계형 네트워크(연계형 사회자본)는 유대관계가 약한 일반 사람들과의 연결망을 말하고, 결속형 네트워크(결속형 사회자본)는 유대관계가 강한 친밀한 사람들과의 연결망을 말한다. 연계형 네트워크는 외부지향적이고 광범위한 정체성과 호혜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반면, 결속형 네트워크는 내부지향적이며 배타적 정체성과 동질성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리하여 연계형 네트워크는 사회적 윤희유의 역할

을 하고, 결속형 네트워크는 사회적 접착제의 역할을 한다. 사회 내에는 이들 두 가지 종류의 네트워크가 많게건 적게건 모두 존재하며, 각각의 필요성은 어떤 사회나 집단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다. 다만, 대규모의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오늘날의 지역사회나 국가 차원에서는 수평적, 연계형 네트워크가 보다 더 필요하다. 그는 이러한 네트워크의 전형으로서 ‘시민참여의 네트워크(networks of civic engagement)’를 거론하며, 이를 지역사회나 국가의 주요한 사회자본으로 간주한다(Putnam 1993a; 2000).

한편, 여러 가지 사회규범들(예를 들어, 정직, 준법정신 등) 중 호혜성(reciprocity)의 규범을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간주하면서 퍼트남(Putnam 1993a: 171-172; 2000: 20-21, 134-136)은 관련 연구들²⁾을 근거로 호혜성을 균형적(balanced, specific)인 것과 일반화된(generalized, diffuse) 것으로 나눈다. 균형적 호혜성은 경제적 거래에서 보듯이 등가물의 동시 교환을 말한다. 균형적 호혜성은 모든 교환관계에서 중요한 규범이긴 하지만 교환관계가 협조하고 한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일반화된 호혜성은 어느 특정 시기에 동시적으로는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 가치가 다를 수가 있는 지속적인 교환관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것은 내가 오늘 베푼 혜택이 미래에 보상받으리라는 기대를 함축하고 있다. 그는 일반화된 호혜성의 규범을 “사회자본의 시금석”(2000: 134)으로 보고, 오스트롬(Ostrom 1990: 200, 211)을 참고하여, 이 규범이 통용되는 공동체에서는 기회주의를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고 집합행동의 딜레마도 해소할 수 있다고 한다.

신뢰(trust)에 대해서, 퍼트남(Putnam 1993a: 170-172)은 이를 사회적 협력을 조장하는 요인으로 간주한다. 모든 거래관계에서 명시적인 계약과 감시는 비용이 많이 들고 제3자 강제개입을 통한 거래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우나,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거래나 교환관계가 용이하게 지속되고 상호 협력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다만 신뢰가 아무렇게나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신뢰는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예측을 포함한다. 즉, 상대방의 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성향과 능력 등을 알고 있어서, 상대방이 당신이 원하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신뢰는 형성된다. 작고 조밀한 공동체에서는 이러한 기대가 소위 ‘깊은 신뢰’에 기초하고 있다. 깊은 신뢰는 친밀

2) Sahlins(1972), Keohane(1986), Gouldner(1960).

한 유대관계에 기반한 기대를 말한다. 하지만 크고 복잡한 상황에서는 보다 비대면적이거나 간접적인 신뢰의 형태가 요구된다. 후속 연구에서 퍼트남(Putnam 2000: 136-137)은 이들 신뢰를 ‘두터운 신뢰(thick trust)’와 ‘얇은 신뢰(thin trust)’³⁾로 칭한다. 두터운 신뢰란 오랫동안 알고지내는 사람들 사이의 밀접하고 빈번한 개인적인 관계에 배태된 신뢰를 말하고, 얇은 신뢰란 잘 모르는 ‘일반화된 타자’에 대한 신뢰를 말한다. 얇은 신뢰는 두터운 신뢰 보다 사회적으로 더욱 유용한데, 개인적으로 알고지내는 사람들을 벗어나 신뢰의 반경을 확장하기 때문이다.

4) 린(Nan Lin)

끝으로, 린(Lin)의 사회자본 이론을 살펴본다. 그는 우선 ‘자본’을 “시장에서 어떠한 대가를 기대하고 투자된 자원”(2001: 3)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사회자본’에 대해서는 “어떤 행위를 위해 행위자에 의해 접근되고 사용되는 사회적 네트워크에 배태된 자원”(Lin 2001: 25)이라고 조작적 정의를 내린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사회자본에 대한 이 개념 정의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이 개념이 개인 보다는 사회관계에 배태된 자원을 의미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자원에 대한 접근과 사용은 개별 행위자에게 달려있다는 것이다. 즉 사회자본은 사회관계에 내재된 자원으로서, 사회관계에 접근하여 그 자원을 사용하는 것은 개별 행위자에게 달려있다. 따라서 개인들 간의 사회자본의 양은 각자의 사회관계적 역량에 따라 다르다.

사회자본을 이처럼 어떤 목적 지향적 행위를 위해 행위자에 의해 접근되고 사용되는 사회구조(사회적 네트워크)에 배태된 자원이라고 개념정의 할 때, 이 개념을 형성하는 3가지 핵심적인 요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Lin 2001: 29). 이들 개념 요소는 곧 자원, 자원을 배태하고 있는 사회구조, 그리고 행위이다.

우선, 자원은 사회자본 이론의 기본 개념인 바 이는 물질적 내지 상징적 재화로 정의된다(Lin 2001: 29-33). 개인과 집단은 인간의 삶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물질적 자원 이외에도 권력이나 지위와 같은 정치적 자원, 교육이나 명예와 같은 상징적 자원에 대해서도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다. 린은 이러한 자원들의

3) 이를 다른 연구자들은 통상 ‘특수신뢰’와 ‘일반신뢰’라고 칭한다.

의미나 가치와 관련해서 다음의 3가지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어떠한 인간 집단이나 공동체에서든 구성원들의 동의나 영향력에 의해 자원들에 대한 차별적인 가치가 부여되며, 이는 자원들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나타낸다. 둘째, 기회만 주어진다면 모든 행위자들은 가치 있는 자원들을 유지하고 획득함으로써 자기의 이익을 증진시키려는 행위를 취할 것이라고 가정된다. 셋째, 가치 있는 자원들을 유지하거나 획득하는 것이 대다수 행위의 두 가지 주요 동기이며, 이때 자원을 유지하는 것이 획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가정된다. 그 이유는 현존하는 자원이 안전하게 확보될 때에만 행위자는 가치 있는 자원을 추가적으로 획득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분석할 사회자본의 개념적 구성요소는 자원을 배태하고 있는 사회구조이다. 린(Lin 2001: 33-40)에 따르면, 사회구조의 문제는 (1) 사회구조의 본질, (2) 사회구조의 위계성, (3) 위계구조의 피라미드 형태, 그리고 (4) 복잡한 사회구조들과 자원거래 등 4가지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1)의 '사회구조의 본질'과 관련해서, 사회구조는 일련의 사회적 지위들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지위들은 첫째, 서로 다른 양의 가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둘째, 자원에 대한 통제와 접근과 관련된 권위에 비례하여 위계적인 관계를 이루고, 셋째, 자원의 사용과 관련된 어떤 규칙과 절차를 공유하고, 넷째, 이러한 규칙과 절차에 따라 행위하는 지위 점유자('구조상의 행위 대행자')에게 맡겨져 있다. 이상의 지위, 권위, 규칙 그리고 지위 점유자를 포함하는 4가지 요소는 가치 있는 자원의 유지나 획득을 위한 조정 체계이며, 이는 사회의 거시적 구조를 규정한다. (2)의 '사회구조의 위계성'과 관련해서, 대체로 사회구조들은 자원, 지위, 권위, 규칙 및 지위 점유자와 같은 요소들에 대한 차별을 명시화하는 정도에 따라 구별된다. 이러한 차별은 하나의 위계구조를 이루고, 이를 명시화하는 정도에 따라 사회구조의 공식화 정도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사회구조는 기업이나 기관과 같은 매우 공식적인 조직으로부터 자원결사체나 비공식적인 사회적 네트워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3)의 '위계구조의 피라미드 형태'와 관련해서, 자원의 거시구조에 관한 또 다른 가정은 위계구조가 지위 분포에 따라 피라미드 형태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위계구조에서 상위로 갈수록 지위와 점유자의 수는 적어진다. 최상위에서는 극소수의 지위와 점유자들만이 가치 있는 자원의 절대적, 상대적 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최고의 권위를 행사한다. (4)의 '복잡한 사회구조들과 자

원거래'와 관련해서, 현존하는 모든 사회구조는 가치 있는 상이한 자원에 대한 복잡한 위계구조를 반영한다. 사회자본 이론은 가치 있는 자원들의 불균등한 분포가 위계구조의 기초를 형성하고, 각각의 가치 있는 자원은 특정한 위계를 규정하며, 위계적 지위의 점유자들은 그들이 소유한 자원을 서로 교환하는 경향이 있다고 가정한다. 예컨대 위계구조 상의 상위에 위치한 정치적 지위 점유자와 경제적 지위 점유자는 그들끼리 서로 권력과 부라는 자원을 교환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석할 사회자본의 개념적 구성요소는 행위이다. 린(Lin 2001: 41-77)에 따르면, 사회자본 이론은 두 가지의 주요 동기가 개인 행위의 대부분을 설명한다고 가정하는데, 하나는 가치 있는 자원을 유지하려는 동기이고 다른 하나는 가치 있는 자원을 획득하려는 동기이다. 전자는 사회관계에서 자신의 소유 자원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인지 또는 정서적 공감을 얻으려는 표출적 행위를 유발하고, 후자는 사회관계에서 더 많은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유도하는 도구적 행위를 유발한다. 표출적 행위는 행위 그 자체를 위해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행위가 수단이고 목적이며 이 둘은 통합되어 분리할 수 없다. 도구적 행위는 어떤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취해진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의 주요한 특징은 수단과 목적이 명백히 분절된다는 사실이다. 두 가지의 행위동기가 있는 까닭에, 개인의 행위를 사회구조와 연결시키려는 사회자본 이론은 첫째, 행위의 두 가지 유형인 도구적 행위와 표출적 행위를 구분해야 하고, 둘째, 행위와 상호작용 사이의 일치성이나 긴장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표출적 행위는 자신의 소유 자원에 대한 다른 사람의 동정적·호의적 이해나 조언과 같은 기대된 보답을 획득하기 위해 개인으로 하여금 유사한 특성과 생활양식을 가진 사람을 찾아 상호 교류하도록 동기화시키며, 정서나 친밀감 혹은 유사한 생활양식에 기반하여 상호간의 강한 유대를 형성하게 한다. 그리고 표출적 행위의 이러한 동질적 상호작용은 노력과 기대된 보답 사이에 조화가 있다. 반대로, 도구적 행위는 어떤 정보에 접근하거나 더 많거나 더 나은 자원이라는 기대된 보답을 획득하려고 개인으로 하여금 유사하지 않은 특성과 생활양식을 가진 사람을 찾아 상호 교류하도록 동기화시키며, 상호간의 약한 유대를 형성하게 한다. 도구적 행위의 이러한 이질적 상호작용에서는 노력과 기대된 보답 사이에 잠재적인 부조화나 긴장이 생긴다. 다시 말해 노력에 비례하여 보답이 획득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상의 린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자본이란 사회구조(사회적 네트워크)에 배태된 가치 있는 물질적 내지 상징적 자원인바, 사회구조는 일련의 사회적 지위들의 피라미드 형 위계구조를 이루어 위계구조 상의 상위로 갈수록 더 많은 자원을 배태하고 있으며, 개별 행위자는 이러한 위계적 사회구조 상의 어떤 자신의 위치에서 표출적 혹은 도구적 행위를 통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을 유지하거나 더 많은 자원을 획득하려고 한다. 따라서 사회자본론에서는 이러한 자원, 사회구조 및 행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한편, 린(Lin 2001: 21-22)에 따르면 사회자본은 유용한 효과를 초래하는바, 이러한 사회자본 효과는 그 발생 대상에 따라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개인이 사회적 네트워크에 배태된 자원에 접근하고 사용하여 개인에게 효과가 발생하는 측면이다. 다른 하나는 어떤 집단이 집단적 자산으로서의 사회자본을 발전시키고 유지함으로써, 그러한 집단적 자산이 집단 구성원의 삶을 향상시키는 측면이다. 다시 말해 사회자본은 개인적 자산이라는 측면과 집단적 자산이라는 측면 두 가지를 가진다. 구체적으로, 사회자본 효과는 다음의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Lin 2001: 19-20). 첫째, 정보의 흐름이 촉진된다는 것이다. 사회적 유대관계는 사회적 유대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기회와 선택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둘째, 사회적 유대관계를 통해 고용이나 진급과 같은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행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사회적 유대나 공인된 관계는 개인에게 사회적 신임(social credential)을 보증해준다. 그리고 사회적 신임은 그 사회적 유대나 공인된 관계에 배태된 자원에 대한 개인의 접근성을 반영한다. 넷째, 유대관계는 정체성과 인정(認定)을 재강화시킨다. 개인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감정적 지지뿐만 아니라 특정 자원에 대한 접근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이는 경제자본이나 인적자본과 같은 유형의 개인적 자본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사회적 행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사회자본이 유용한 이유를 말해준다. 다섯째,⁴⁾ 개인은 네트워크(사회구조)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정보, 영향력 혹은 사회적 신임에 대해 상이한 통제력을 가진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린(Lin 2001: 55-77)은 사회자본 이론에서 제시하고자 하

4) Lin 2001: 27, 각주 1 참조.

는 행위와 사회자본과의 관계에 대한 다음의 7가지 주요 명제를 정립한다.

1. 사회자본 명제(The social-capital proposition): 행위의 성공은 사회자본과 긍정적인 관계에 있다. 즉, 더 나은 사회자본에의 접근과 사용이 더욱 성공적인 행위를 이끈다.
2. 지위의 강함 명제(The strength-of-position proposition): 귀속적이거나 획득한 지위가 더 나을수록, 행위자가 더 나은 사회자본에 접근하고 사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3. 강한 유대의 강함 명제(The strength-of-strong-tie proposition). 유대가 강할수록, 접근된 사회자본이 표출적 행위의 성공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4. 약한 유대의 강함 명제(The strength-of-weak-tie proposition). 유대가 약할수록, 개인은 도구적 행위를 위한 더 나은 사회자본에 접근할 것이다.
5. 위치의 강함 명제(The strength-of-location proposition).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다리(bridge)에 가까이 위치한 개인일수록, 도구적 행위를 위한 더 나은 사회자본에 접근할 것이다. (필자 주: 서로 유대가 없는 두 집단 사이에서 각 집단의 구성원 한 명씩이 서로 유대를 맺으면 이 두 명은 두 집단의 다리이다. 그리고 이들 두 명과 가까운 구성원들은 다리에 가까이 위치한 개인들이다.)
6. 위치 대 지위 명제(The location-by-position proposition). 도구적 행위를 위한 위치의 강함은 다리에 따라 차별적인 자원에 접근된다. (필자 주: 다리에 위치한 행위자이더라도 위계구조 상 더 높거나 낮은 집단, 즉 자원을 더 많이 갖거나 적게 가진 집단을 연결하는 다리에 위치할 때에는 각각 접근하게 되는 자원의 차이가 난다.)
7. 구조적 조건성 명제(The structural contingency proposition). 위계구조의 꼭대기나 바닥에 가깝게 위치한 행위자에게는 유대와 위치에 따른 네트워크 형성의 효과가 제한된다. (필자 주: 피라미드 형 위계구조의 조건에 따라, 꼭대기에서는 상향적인 수직적 네트워크의 형성이 제한되는 한편 바닥에서는 낮은 지위의 수많은 점유자들끼리 동질적인 수평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역시 상향적인 수직적 네트워크의 형성이 제한된다는 의미이다.)

5) 종합적 논의

이들 네 연구자의 사회자본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이제 이들의 견해를 비교 분석하면서 본 연구자의 이해를 정리하기로 한다.

사회자본의 근원: 사회관계

우선, 이들은 공통적으로 사회자본의 근원을 사회관계로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포르테스(Portes 1998: 7)나 린(Lin 2001: 24)이 지적하듯이, 여타 모든 사회자본론자들에게 공통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회자본론의 접근법은, 경제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인간행위는 개인이 맺고 있는 사회관계에 배태되어(embedded) 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는 소위 신경제사회학(new economic sociology)의 접근법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Granovetter 1985; Portes 1998; 공유식 외 1994). 예를 들어 그라노베타(Granovetter 1985)는 신경제사회학의 관점에서 인간의 경제행위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분석을 ‘인간을 과소사회화’한 입장이라고 비판하고, 인간행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대를 형성시키고 규범을 만들거나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구체적인 사회관계와 관계들의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인간 행위자는 사회적 진공상태에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다른 행위자와의 관계라는 사회관계에 배태되어 있는 존재로서 사회관계 속에서 행위하고 또한 행위는 진행 중인 사회관계에 구속되기(constrained by ongoing social relations) 때문이다(Granovetter 1985: 482).

그런데 사회관계가 사회자본의 근원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종류의 사회관계가 사회자본의 근원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회)자본이라는 용어 자체에는 이미 생산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바, 예를 들어 사람들 사이의 일회성의 사회관계가 어떤 생산적인 결과를 산출할 수도 없을 뿐더러, 사회관계에는 갈등이나 착취 등 비생산적인 관계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회관계가 사회자본의 근원이 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사회관계로서 부르디외는 상호 간의 면식과 인정이 다소간 제도화된 관계들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거론하고, 린은 어떤 목적 지향

적 행위를 위해 행위자에 의해 접근되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거론하며, 콜만은 모든 사회구조가 어떤 형태의 사회자본을 조장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폐쇄적 사회구조가 중요하다고 보며, 그리고 퍼트남은 연계형 및 결속형 사회적 네트워크를 거론한다. 본 연구자는, 표현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 네 연구자들이 거론하는 사회관계들은 연계형 및 결속형 사회적 네트워크로 수렴된다고 판단한다. 즉, ‘상호 간의 면식과 인정이 다소간 제도화된 관계들의 지속적인 네트워크’(Bourdieu) 혹은 ‘어떤 목적 지향적 행위를 위해 행위자에 의해 접근되는 사회적 네트워크’(Lin)는 대별하여 ‘연계형 네트워크(개방적 사회구조)와 결속형 네트워크(폐쇄적 사회구조)’로 구분할 수 있고, 네트워크란 사회관계의 패턴 즉 ‘사회구조’(Coleman)의 일종이기 때문이다.⁵⁾ 말하자면 사회자본의 근원은 연계형 혹은 결속형 네트워크이고, 이러한 네트워크들은 상호 간의 면식과 인정이 다소간 제도화된 사회관계들을 통해 형성되거나 혹은 행위자들의 어떤 목적지향적 행위를 위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자본 구성요소

이들의 사회자본 개념과 관련해서 검토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사회관계를 근원으로 하여 형성되는 사회자본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부르디외와 린은 사회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네트워크와 이러한 네트워크에 연계된(linked) 다른 구성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활용 가능한 자원을; 콜만과 퍼트남은 사회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네트워크와 이러한 네트워크가 조장하거나(facilitate) 생성하는(arise) 의무와 기대, 신뢰, 정보유통, 규범 등을 거론한다. 말하자면 부르디외와 린에게 있어서는 네트워크 및 네트워크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고, 콜만과 퍼트남에게서는 네트워크 및 네트워크에 의해 조장 혹은 생성되는 자원인 것이다. 그렇다면 두 가지 유형 중 어느 것이 사회자본인가?

사실상 사회자본 연구들은 이 두 가지 모두를 사회자본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부르디외와 린, 그리고 콜만과 퍼트남의 입장을 모두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5) 사회 내에서 사람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며, 이런 상호작용은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되면서 행위자들 사이의 특정한 사회적 관계에 따라 일정한 유형을 갖게 된다. 이처럼 유형화된 상호작용이 곧 사회구조의 개념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사회구조를 ‘어느 정도 지속적인 사회관계의 양식(pattern)’으로 이해하는 한편, 사회적 네트워크는 이러한 사회구조의 일종으로 간주한다.

즉, 개인의 네트워크를 통해 유지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자원을 사회자본으로 간주하기도 하고(Bourdieu 1986; Burt 1992; Lin 2001; Aguilera 2003), 네트워크에 의해 조장 혹은 발생하는 신뢰나 규범 혹은 시민참여활동 등의 행태적 현상을 사회자본으로 간주하기도 한다(Coleman 1988; Putnam 1993a; 2000; Fukuyama 1995; Inglehart 1999b; Paxton 1999; Anheier & Kendal 2002; Stoll 1998). 이처럼 두 가지 유형 모두를 사회자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구조적 사회자본(structural social capital) 그리고 규범이나 신뢰 등 행태적 요소를 인지적 사회자본(cognitive social capital)이라 칭하기도 한다(Uphoff 2000; Grootaert & Van Bastelaer 2002). 이리하여,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에서는 네트워크의 크기나 강도, 네트워크에 연계된 정보혜택이나 네트워크 상의 지위관계를 주로 분석하고; 행태적 분석에서는 네트워크 참여, 신뢰나 규범의 현황이나 효과를 주로 분석하고 있다. 결국, 사회자본은 사회관계가 형성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자체,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에 연계된 타인의 부, 권력, 정보, 명성, 정서적 공감 등의 물질적 내지 상징적 자원이기도 하고 사회적 네트워크가 조장하는 참여활동, 신뢰, 규범 등의 행태적 자원이기도 하다.

한편, 사회관계에 배태된 어떤 가치 있는 자원을 사회자본이라고 한다면, 사회관계에 배태된 법적·정치적 제도⁶⁾도 사회자본 구성요소라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어떤 연구자들은 국가제도, 법의 지배 및 거버넌스를 사회자본 구성요소에 포함시키기도 하고(Grootaert & Van Bastelaer 2002), 사회자본은 공식적 정치제도에 배태되고 연계될 때 더욱 풍성해진다고 주장하기도 한다(Levi 1998; Rothstein 2005; Tarrow 1996).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부르디외, 린, 콜만과 퍼트남은 국가(법적·정치적 영역)나 시장 영역이 아니라 시민사회 영역에 분석의 초점을 맞춘다. 다시 말해 법적·정치적 제도가 아니라 시민사회 내의 자율적 사회관계에 관심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후자의 입장을 따르기로 한다.

사회자본 구성요소들의 관계

한편 사회자본 구성요소들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사회자본의 근원

6) 제도란 사회적 행위규범의 체계를 말한다.

으로 그리고 참여활동, 신뢰, 규범 등의 행태적 자원을 그 결과로 보는 인과적 관점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예를 들어 뉴턴(Newton 1997: 577)은 애초에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회적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는 건지 이해하기 힘들며, 사회과학은 이러한 닭과 달걀 사이의 선후 문제와 같은 논쟁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적어도 동일한 개념정의 안에서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는 입장에서 서면 곤란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팩스톤(Paxton 2007: 50, 54)은 대부분의 관련 연구들의 이론 구성은 인과관계를 주로 네트워크로부터 신뢰나 규범의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그 타당성은 대부분의 경험적 연구를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양자는 두 가지 형태의 사회자본(“구조적 사회자본”과 “인지적 사회자본”)으로서, 비록 서로를 강화시키기는 하나 서로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Grootaert & Van Bastelaer 2002: 3).

돌이켜 보면, 부르디외, 콜만, 퍼트남 및 린의 사회자본 개념정의는 모두 사회적 네트워크(사회구조)를 사회자본의 근원으로, 그리고 이에 연계된 자원이나 이에 의해 조장되는 호혜성이나 신뢰 등을 그 결과로 간주하는 논리구조를 취하고 있다. 즉, 네트워크를 원인으로, 이에 배태된 자원을 결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뉴턴(Newton)이 지적한 양자 사이의 닭과 달걀과 같은 관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사회적 현상에서는 원인이 결과를 낳고 그 결과가 다시 원인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굳이 발생의 선후를 따지자면 사회관계나 사회적 네트워크가 앞선다고 해야 할 것이다. 신뢰나 호혜성은 사회관계적 개념으로서, 사회관계가 없으면 신뢰나 호혜성이 생성될 수도 없고 또한 존재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애초에 신뢰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 사이의 교류관계가 형성된다고 말한다면, 신뢰를 사회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관계적 현상이 아니라 마치 개인의 선천적인 본성으로 간주하는 격이 된다. 게다가 사회관계가 어떤 생산적인 요소 즉 사회자본 구성요소를 조장 내지 생성하지 못한다면 사회자본론은 그 학문적 토대조차도 흔들리게 될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 사람들 간의 사회관계가 없으면 사회자본도 없고 로빈슨 크루소는 사회자본을 생성시킬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 연구자들의 대체적인 관점에 따라 일단 사회관계와 사회관계의 네트워크를 원인변수로, 신뢰나 규범 등의 행태적 자원을 결과변수로 간주하고 연구를 진행해나가기로 한다.

사회자본의 성격

사회자본론은 사회자본을 사회관계에 배태된 그러나 개인이 활용가능한 자원이라고 본다. 즉 사회자본은 공유재와 사유재의 성격 두 가지를 함께 가진다(Esser 2008: 23-25). 부르디외에게 있어서 사회자본은 어떤 집단이 소유한 집합적 자산인 동시에 그 집단에 속한 구성원이 개인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자원이다. 콜만에게 있어서 사회자본은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구조 안에 내재되어 있으며, 개별 행위자들의 어떤 행위를 촉진시키는 자원이다. 퍼트남(Putnam 2000: 20) 역시 “사회자본은 개인적 측면과 집단적 측면 혹은 사적 얼굴과 공적 얼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린(Lin 2001: 26)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회자본이 집단 재화이면서 동시에 개인 재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한다고 한다. 말하자면 사회자본은 네트워크에 배태된 공유재이기도 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사유재이기도 한 것이다.

2. 사회자본 구성요소 분석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회자본 구성요소는 사회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네트워크 자체,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에 연계된 활용 가능한 물질적·상징적 자원이거나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시민참여활동, 사회적 네트워크가 조장하는 신뢰성에 기반한 의무와 기대, 신뢰, 규범 등이다. 그런데 개인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연계된 타인의 물질적·상징적 자원은 상호간의 신뢰나 호혜성의 규범 등이 없으면 활용할 수가 없는 까닭에, 본 연구자는 신뢰나 규범을 사회적 네트워크에 연계된 물질적·상징적 자원 보다 더욱 근본적인 사회자본 구성요소로 간주한다. 한편 콜만이 거론하는 ‘신뢰성에 기반한 의무와 기대’는 한 마디로 신뢰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신뢰란 상대방의 의무 이행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규범이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지켜야 할 행위 규칙을 말하는데,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가장 기본적인 행위

규칙은 호혜성의 규범이라 할 수 있다. 호혜성은 사회적 교환관계의 기초이고, 사회적 교환관계는 사회적 안정과 유대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자는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적 네트워크의 특수한 형태로서의 ‘시민참여 네트워크’ 혹은 시민참여, 호혜성의 규범 및 신뢰를 사회자본의 근본적인 구성요소로 간주하고 이들의 특성을 중점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1)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란 “보다 큰 사회구조(혹은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 내에서 행위자들을 연결시키는 특수한 내용(예를 들어 의사소통관계, 권력관계, 정서적 관계, 교환관계)을 가진 사회적 관계들의 여러 가지 가능한 집합체들 중의 하나”(Emirbayer & Goodwin 1994: 1417), 또는 “사회적 행위자들이 서로 맺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관계들”(Scott 2000: 3)이라고 정의된다. 즉 사회적 네트워크란 개인 혹은 집단 간의 지속적인 연결망으로서, 그 형태나 특성은 다양하다. 따라서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은 네트워크의 크기, 강도, 목적, 연결기간 등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네트워크 자체의 특성이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단위의 행위를 설명하고자 한다(김용학 2011: 5, 61-85). 그리고 이는 그라노베터(Granovetter) 등이 주장하는 신경제사회학의 분석방법이기도 하다(유홍준·정태인 2011: 138-148).

아래에서는 사회적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그 크기와 강도, 개방성과 폐쇄성에 대해 논의한다.

(1) 네트워크의 강도와 크기

사람들은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생활 과정에서 많게건 적게건 혹은 강하게건 약하게건 다른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간다. 사회자본은 사람들 사이의 유대관계에 배태된 자원이므로 유대관계가 많을수록 즉 네트워크의 크기가 클수록 개인은 어떤 형태의 사회자본이건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Burt 1992: 12). 그렇다면 유대관계의 강도는 어떤 효과를 가져 오는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라노베터

(Granovetter)의 연구가 사회자본론에서 중요한 분석틀로 활용되고 있어 이를 살펴 보고자 한다.

그라노베터(Granovetter 1973: 1361)는 대인관계에서의 유대의 강도(strength of a tie)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유대의 강도란 시간의 양, 감정의 깊이, 친밀도(상호 신뢰성) 및 유대를 특징짓는 상호봉사의 (아마도 선형적인) 조합이다.”⁷⁾ 즉 유대의 강도는 상호간의 교류 기간과 빈도, 감정적 애착, 친밀도, 상호봉사 등 4가지 요소들의 조합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 그 크기에 따라 유대관계는 강한 유대(strong tie), 약한 유대(weak tie), 그리고 유대의 결여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친구(friend)관계는 이들 4가지 요소들이 많이 조합된 강한 유대이고, 지인(acquaintance)관계는 약한 유대이며, 전혀 교류관계가 없거나 그저 목 인사 정도를 하는 관계는 유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라노베터의 연구는 특히 강한 유대와 약한 유대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기와 유사한 사람들끼리 관계를 발전시키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혈연, 직업, 사회계층, 이해관계, 취미 등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유유상종(homophily)하는 경향이 있다. 유유상종하는 사람들은 그들끼리의 강한 유대를 통해 다양한 결속집단(clique)들을 형성한다. 이렇게 형성된 결속집단은 작고 폐쇄된 사회적 단위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으나, 구성원들 사이의 높은 수준의 소속감, 친밀감, 협동관계 등을 특징으로 한다.

그런데, 아무런 유대관계가 없는 두 개의 독립적인 결속집단 A, B가 있다고 치자. 이때 만일 A 집단의 구성원 a1이 B 집단의 구성원 b1과 유대관계를 맺는다면, 이들 a1과 b1의 유대관계는 자신의 결속집단 구성원과의 관계 보다는 상대적으로 강도가 덜한 약한 유대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a1과 b1의 약한 유대는 다리(bridge)가 되어 A, B 두 집단 사이에 연계가 이루어진다. 강한 유대는 네트워크 내부로 결속하지만, 약한 유대는 이처럼 네트워크 외부로의 다리가 될 수 있다. 만일 A 집단 내에서 어떤 정보가 유통된다면, 다리가 없는 경우에 이 정보는 A 집단 내부에 머물지만 다리가 있는 경우에는 B 집단으로 확산된다. 같은 논리로, 무수한 독립적인 결속집단 내지

7) 이들 4가지 요소들 전체 사이에는 분명히 높은 내적 상관성이 있을 것이나, 그들 각각은 어느 정도 독립적이다(Granovetter 1973: 1361).

네트워크들이 있을 때 이들 사이에 약한 유대의 다리들이 놓여있다면 다양한 정보들이 더욱 널리 확산될 수 있다. 개인의 차원에서 볼 때, 개인은 약한 유대관계를 많이 형성할수록 여러 정보 소스로부터 다양한 정보나 지식을 획득할 수 있어 상황적응에 유리하다. 그리고 사회와 같이 보다 넓은 공동체의 차원에서 볼 때, 강한 유대로 맺어진 결속집단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에는 사회가 파편화되나, 약한 유대를 통해 결속집단들이 서로 연계될 때 개인이나 결속집단은 더 넓은 공동체로 통합된다. 이것이 ‘약한 유대의 강함’이다. 즉 약한 유대는 강한 유대 보다 유용한 정보나 지식을 더욱 많이 획득하게 하고 더욱 널리 확산시키며, 아울러 사회통합에도 기여한다. 그라노베터(Granovetter 1973)는 특히 정보나 지식의 획득과 관련해서 약한 유대의 강함의 명제를 실증하고 있다.

버트(Burt 1992)의 연구는 그라노베터의 논리를 확장시킨다. 그라노베터는 유대관계의 강약에 따른 효과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반면, 버트는 유대관계의 크기와 다양성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고 있다.

버트에 따르면 네트워크 효과는 정보혜택과 통제혜택 두 가지로 대별된다. 여타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크고 다양한 연결망이 유용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최고의 보장책이다. 다시 말해 크고 다양한 네트워크가 작고 동질적인 네트워크 보다 정보와 관련된 혜택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 다만, 다양성을 무시한 채 네트워크의 크기만 커진다면 그 네트워크는 별 효과가 없다. 네트워크가 크더라도 동질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네트워크에서는 동일한 정보만 유통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동질적 사람들과 연결될수록 네트워크는 중복적이다. 중요한 것은 비중복적 연결(nonredundant contacts)의 숫자이다. 문제는 기회비용으로서, 한정된 시간과 노력을 사용해서 강한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은 약한 네트워크를 통해 더욱 많고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기회를 놓치게 한다. 비중복적 연결의 부재가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인데, 개인은 구조적 공백의 다리가 될수록 정보혜택이나 정보통제혜택이 커진다.

구조적 공백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네트워크 결속성(cohesion)과 구조적 등위성(structural equivalence)이 있다. 네트워크 결속성은 직접적 연결(1차적 연결)의 중복성을 나타낸다. 하나의 집단 A가 있다고 치자. 그 집단 구성원인 a_1 , a_2 및 a_3 가

a1-a2, a1-a3 및 a2-a3 끼리 서로서로 모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구조적 공백이 없다. 그런데 만일 a2와 a3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구조적 공백이다. 이러한 구조적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 a1은 a2 및 a3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a2 및 a3 보다 정보혜택이 클 뿐만 아니라 a2 및 a3에 대한 영향력('통제혜택')도 크다.

한편, 구조적 등위성은 간접적으로 서로 같은 유형의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A 집단 이외에 B 집단이 있고, B 집단의 구성원 b1, b2 및 b3가 모두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치자. 이때 A 집단 내에서 서로 연결되지 않은 a2와 a3가 B 집단의 b1과 동시에 연결된다면 구조적 등위성이 있다. 즉 a2와 a3는 구조적으로 같은 위치(등위)를 차지한다. 구조적 등위성은 간접적 연결(2차적 연결)의 중복성을 나타낸다. 유대관계의 강약은 구조적 공백 논리에서 지엽적인 문제로서, 정보혜택은 중복적 유대와 비중복적 유대 사이에서 달라진다. 유대관계가 강하건 약하건 구조적 공백의 다리가 되면 정보혜택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전체 연결망 내에서 직접적 연결에서건 간접적 연결에서건 중복적 연결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대한의 네트워크 효과를 가져온다. 버트(Burt 1992)는 이러한 네트워크의 소유자가 승진을 더 빨리 하고 더 좋은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유유상종하기 보다 다양한 사람들과 널리 교류하는 것이 보다 유용하다!

그라노베터나 버트의 연구는 개인의 미시적인 관계의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즉 개인의 약한 유대관계나 비중복적인 유대관계가 개인의 정보혜택 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차원의 정보소통이나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아래에서 살펴볼 콜만이나 퍼트남의 연구는 거시적 네트워크의 특성이 미시적으로 개인의 태도나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 네트워크의 폐쇄성과 개방성

앞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콜만(Coleman 1988)에 따르면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인 규범이나 신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사회관계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폐쇄성(closure)이다. 이에 대한 논리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3명의 행위자 A, B, C가 있고, 이들 3명이 A-B, A-C, B-C 끼리 모두 연결되어 네트워크가 폐쇄되어 있

는 경우와 A-B, A-C 사이만 연결되고 B와 C 사이에는 연결되지 않고 네트워크가 개방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치자. 만일 A가 B와 C에게 어떤 부정적인 행위를 저지른다면 후자의 경우에 B와 C는 각자 따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각자가 A에 대응할 힘이 없다면 A의 부정적 행위는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에는 B와 C는 연합하여 A에게 집단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고 부정행위에 대한 보상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이리하여 네트워크의 폐쇄성은 부정적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회 규범을 형성하게 한다. 또한 네트워크의 폐쇄성은 의무감과 평판에 바탕한 사회적 신뢰의 형성에 있어서도 효과적이다. 개방된 네트워크에서는 평판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의무를 저버리는 사람에 대한 제재도 오직 그 의무 대상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러나 네트워크가 폐쇄적이라면 의무를 저버리는 사람에 대해서 네트워크 내에 나쁜 평판이 형성되고 나아가 집합적 제재도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의무 이행에 더욱 구속되고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 사이의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의무감이나 평판에 기반한 사회적 신뢰는 폐쇄적인 네트워크에서 생성된다고 할 수 있다. 폐쇄적 네트워크는 구성원 사이의 유대관계가 강한, 예를 들어, 가족집단이나 친구집단 등에서 나타나고, 개방적 네트워크는 구성원 사이의 유대관계가 약한 여러 가지 이차집단들이나 더 넓은 사회에서 나타난다.

한편, 퍼트남에게 있어서도 사회적 네트워크는 그 자체가 사회자본인 동시에 여타 사회자본의 근원이다. 퍼트남(Putnam 2000: 22)은 “사회자본의 다양한 형태를 구분하는 모든 차원 중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연계형(bridging)’과 ‘결속형(bonding)’의 구분”이라고 한다. 용어상의 차이일 뿐, 연계형-결속형의 구분은 콜만의 개방형-폐쇄형의 구분과 내용상 별반 차이가 없다. 결속형 네트워크는 내부 지향적이며, 동질성과 배타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결속형 네트워크는 자기 집단에 대한 강한 충성심을 창출함으로써 집단 외부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형성할 수도 있다. 그 예로는 같은 인종에게만 자선과 구호사업을 벌이는 단체, 소속 회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컨트리클럽 등이 있다. 연계형 네트워크는 외부 지향적이며 다양한 사회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된 것으로, 청년봉사단체나 초교파적 종교단체 등이 그 예이다. 퍼트남은, 그라노베타(Granovetter 1973)의 논리에 의거, 결속형 네트워크는 집단연대성이나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에 효과적인 반면 연계형 네트워크는 외

부 자원과의 연결이나 정보확산 혹은 광범위한 집단정체성의 확립에 보다 유용하다고 본다. 이처럼 결속형과 연계형 사회자본은 효과를 발휘하는 분야가 다르며, 집단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자본은 그 집단이 직면하는 문제의 성격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어린이들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네트워크로서는 결속형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회공동체 차원에서는 ‘비도덕적’이라도 어느 정도의 ‘가족주의’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반면에 공립학교의 개선을 위해서는 공동체 차원에서 연계형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보아 결속형과 연계형 사회자본은 모두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수많은 사회집단들은 각각이 위치한 사회적 차원에서 자신의 구성원들을 결속시키는 동시에 다른 집단의 구성원들과 서로 연계되기 때문이다. 특히 퍼트남은 민주적 시민사회에 유용한 네트워크로서 ‘시민참여의 네트워크’를 강조하는바,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본다.

2) 시민참여

사회적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퍼트남은 특히 ‘시민참여 네트워크(networks of civic engagement)’ 혹은, 간단히 말해, 시민참여를 ‘시민공동체(civic community)’의 핵심적인 사회자본으로 간주한다. 시민참여 네트워크란 시민사회 내의 이웃모임, 동호회, 종교단체, 스포츠클럽, 합창단 등등의 각종 자원결사체 참여, 그리고 정당활동, 정치집회, 투표, 정치향의 등등의 정치참여를 뜻한다(Putnam 1993a: 171-173; 2000: 31-182). 그리고 시민공동체란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공공정신, 호혜주의, 관용과 신뢰 등의 시민적 덕성에 바탕한 공화주의적인 시민사회를 말한다(Putnam 1993a: 86-91). 시민참여 네트워크들은 그 자체가 사회자본이기도 하고 다른 형태의 사회자본 즉 신뢰나 호혜성의 규범을 창출하는 근원이기도 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시민참여 네트워크 혹은 시민참여는 시민공동체 형성의 기반이다 (Putnam 2000: 20-21). 아래에서는 시민참여의 두 가지 유형인 자원결사체참여 및 정치참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에 앞서, 용어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시민참여, 정치참여 및 사회참여의 의미를 명확히 해두고자 한다. 이들 세 용어는 서로 혼용되는 경향이 있는바, 퍼트남의 용

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의미를 규정해둔다. 시민참여, 사회참여 및 정치참여라는 용어는 국가, 시장, 시민사회를 구분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때 국가는 정부부문, 시장은 영리부문, 시민사회는 비정부·비영리부문으로 특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비정부·비영리부문인 시민사회가 국가 혹은 정부부문에 관여하는 것을 정치참여라 하고, 시장에 관여하는 것(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구, 시민단체의 기업활동 감시·비판 등)을 경제참여라 칭하며, 시민사회 자체 내에서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활동하는 것을 사회참여라 칭하고, 이러한 정치참여, 경제참여, 사회참여를 통칭하여 시민참여라 한다.

(1) 자원결사체

가. 개념

자원결사체(자발적 결사체, voluntary association)는 여타 사회집단과 구분되는 특성을 가진다. 김석준(1985)에 따르면, 자원결사체는 (정부 혹은 공공기관과는 달리) 사적인 조직이며, (가족, 씨족, 민족, 국가 등의 귀속적 집단과는 달리)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가입여부가 결정되고, (일반기업체와는 구별되는) 비영리적 무보수성을 띠어 직접적인 생계유지와 무관하고, 어디까지나 시간이 허락할 때 부분적으로만 (part-time) 참여하는 사회조직체이다. 즉 자원결사체는 정부나 시장 영역과 구분되는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조직된 비정부·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나. 종류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는 일반적으로 무수한 자원결사체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매우 다양한 형태와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까닭에 자원결사체 연구의 일차적인 과제는 이에 대한 체계적 분류라 할 수 있다. 자원결사체들의 가장 일반적인 분류는 활동영역에 따른 분류인바, 그 분류체계 몇 가지를 살펴본다. 샐러몬과 안하이어(Salamon & Anheier 1997: 69-81)는 국가 간 비교연구가 가능하도록 여러 국제기구나 국가기구의 분류체계를 검토해서 '비영리조직체 국제적 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s, ICNPO)'를 시도했는데, 여기에서는 문화와 오락, 교

육과 연구, 건강, 사회서비스, 환경, 발전과 주거, 법률서비스·권익보호·정치조직, 자선·자원봉사, 국제활동, 종교, 직업단체와 노조, 기타 등 12개 종류로 분류한다. 한편 세계가치조사에서는 세계 각국의 자원결사체 활동을 조사하기 위해 이를 1990-1991 조사주기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종교·교회단체, 교육·예술·문화활동, 노조, 정당이나 정치단체, 지역공동체활동, 인권과 제3세계발전, 환경·생태단체, 직업 단체, 청년 활동(스카웃, 청년 클럽 등), 스포츠·오락활동, 여성단체, 평화운동, 동물보호, 건강관련 자원조직체, 기타 등 16개 종류로 분류하고; 2005-2006 조사주기에서는 종교·교회단체, 체육·오락단체, 예술·교육단체, 노조, 정당, 환경단체, 직업단체, 인도주의·자선단체, 소비자단체, 기타 등 10개 종류로 분류하여 조사하기도 했다. 그리고 한국의 통계청에서는 ‘사회단체’라는 명목 하에 친목 및 사교단체, 종교단체, 취미·스포츠 및 레저단체, 시민사회단체, 학술단체, 이익단체, 정치단체 등 7가지 종류로 분류해서 조사한다. 이처럼 자원결사체의 활동영역에 따른 분류체계들은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거꾸로, 존재하는 모든 자원결사체들을 일관성 있게 분류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활동영역에 따른 분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연구자들은 자원결사체들의 잠재적 구조에 따른 분류를 시도한다. 예를 들어 Wessels(1997)는 1990-1991 세계가치조사에서 구분한 16개 활동영역의 자원결사체를 이론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조직체(복지, 종교, 지역공동체, 청년, 스포츠, 여성, 건강 및 교육 단체), 전통적 정치조직체(노조, 직업단체, 정당) 그리고 신 정치조직체(환경, 평화, 동물보호 및 제3세계 단체)로 대별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든과 밥척(Gordon & Babchuk 1959)의 구조적 분류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해 좀 더 살펴본다.

고든과 밥척(Gordon & Babchuk 1959)은 활동영역에 따라 분류한 자원결사체들을 그 기능적 특성에 비추어 표출적, 도구적, 도구-표출적 결사체의 3가지 유형으로 대별한다. 표출적 결사체란 그 조직 자체 내에서의 자기만족적인 활동을 통해 회원들의 직접적인 흥미나 만족을 추구하는 결사체를 말한다. 즉, 회원들은 조직 내부의 활동 그 자체를 통해 즉각적인 만족을 느끼며, 이러한 활동은 조직 내에 제한되고 독립적이다. 취미나 친목단체가 이러한 결사체의 전형이다. 도구적 결사체는, 그 조직활동이 회원들의 표출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수도 있으나, 조직활동을 수단으로 하여 조

직 외부로 대상으로 어떤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결사체를 말한다. 즉, 조직활동을 통해 조직 외부의 어떤 대상이나 상황의 변화(혹은 유지)를 초래함으로써 조직이 추구하는 어떤 이익이나 가치를 달성하고자 하며, 회원들은 이러한 목표추구를 통해 만족을 느끼지만 만족은 종종 지연된다. 전문직 단체나 이익집단이 그 예이다. 그리고 도구-표출적 결사체는 이러한 두 가지 기능을 함께 가진 결사체이다. 예를 들어 금주단체나 재향군인회 등이 이에 속한다.

다. 기능

자원결사체는 참여자 자신에게는 내부효과 그리고 외부 환경에 대해서는 어떤 외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워렌(Warren 2001: 60-93)은 자원결사체의 기능을 개인계발효과, 공중영역효과, 제도적 효과 등 3가지로 대별한다. 첫째, 개인계발효과란 개인의 민주적 역량과 성향을 발전시키는 것을 말하며, 자원결사체는 개인들에게 (정치)효능감, 정보, 정치적 기술, 숙의적 판단능력 및 시민적 덕성을 증진시킨다. 즉 자원결사체는 집단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집단활동을 수행할 자신감이나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고(효능감);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며(정보); 대화술과 자기표현력, 대화와 토론을 통한 조정과 제휴능력, 문제해결능력(숙의적 판단능력 및 정치적 기술) 등을 계발시킨다. 특히 자원결사체의 가장 중요하고 지속적인 효과는 시민들의 협력성향을 길러주는 것이다. 거의 모든 자원결사체는 공동의 이해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해 성원들이 서로 책임을 공유하는 조직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상호기대에 기반한 호혜성을 경험하게 한다. 이러한 호혜성의 경험은 신뢰와 상호존중과 같은 시민적 덕성을 낳는다. 호혜성, 신뢰 및 상호존중은 결사체를 통해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민적 덕성이다. 둘째, 공중영역효과란 공중영역이란 시민사회의 정보와 관점을 소통하는 네트워크이자 공적 판단의 영역으로서 국가나 시장과 구별된다. 공중영역 효과란 시민사회의 결사체 네트워크가 시민들의 집단적 판단과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효과를 말한다. 셋째, 제도적 효과란 통치제도에 대한 효과를 말한다. 결사체의 제도적 효과는 구체적으로 시민들의 가치나 이익의 대변, 정부의 투명성과 반응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집단행동, 정부기능의 보완, 정치과정 참여를 통한 정치적 정당성 제고 등이 있다. 다만 워렌은 모든 자원결사체가 이러한 효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며, 이

러한 효과를 가능케 하는 결사체 유형들의 조합을 찾는 것이 과제라고 한다.

사회자본론에서 가정하는 자원결사체의 기능 역시 워렌의 입장과 거의 동일하다. 퍼트남(Putnam 1993a: 89-91, 171-176; 2000: 336-349)에 따르면 자원결사체는 내부적으로 회원들 간에 협동의 습관과 참여, 신뢰, 호혜성과 같은 시민적 품성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며, 외부적으로는 이익표출과 이익집약을 향상시켜 민주적 정부의 효율성에 공헌한다. 그라노베터(Granovetter 1973)가 주장하듯이,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일차집단에서의 강한 유대(strong ties) 보다 자원결사체와 같은 이차집단에서의 약한 유대(weak ties)가 공동체의 응집력을 유지하고 호혜성의 규범을 조장하는데 훨씬 더 중요하다. 특정집단 내부로만 응집되는 강한 유대 보다, 약한 유대는 다른 집단의 성원들과 더욱 잘 연결시켜 주기 때문이다. 다양한 사회적 균열을 가로지르는 약한 유대의 자원결사체들은 보다 넓은 범위의 협력을 촉진시키고, 이는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특히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결사체는 내부적으로 회원들 간에 협동의 습관과 정치참여, 신뢰, 호혜성과 같은 시민적 품성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고 심의의 장소로 기여할 수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이익표출과 이익집약을 향상시켜 민주적 정부의 효율성과 안정성에 공헌한다. 다만 퍼트남(Putnam 2000: 337-341)은 자원결사체의 민주적 효과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자원결사체들 중에는 민주주의에 적대적인 결사체도 있고, 이익단체들이 정부의 정책결정을 왜곡할 수 있고, 조직력이 강한 상층계급의 이익을 강화시킬 수 있고, 이데올로기적 극단주의와 연계되어 정치적 양극화를 초래해서 정부의 문제해결능력을 약화시키고 시민참여에 대한 냉소주의를 불러올 수도 있다. 게다가 자원결사체에 참여한다고 모든 사람들의 덕성이 다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는 하나, 다양한 자원결사체가 없다면 정치는 균형을 잃고 이데올로기적 극단주의로 치우치거나, '힘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거나, 일종의 국민투표 민주주의의 형태를 취할지도 모른다.

어쨌든, 자원결사체의 효과에 대한 퍼트남 류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또 다른 반론들도 있다. 첫째, 사회자본은 시민사회의 결사체 보다 공식적 정치제도에 배태되고 연계될 때 더욱 풍성해진다(Levi 1998; Rothstein 2005; Tarrow 1996). 둘째, 참여가 신뢰를 발생시킨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Uslander 2002;

Stolle 2001; Delhey and Newton 2005). 셋째, 수평적 네트워크가 낯선 사람들에 대한 일반신뢰를 높이나(Inglehart 1999b; Paxton 1999), 군대와 같은 수직적 조직이 효율적인 사회자본을 형성하기도 한다(Berman 1997a). 넷째, 규모가 크고 다원화된 현대사회에는 약한 유대 혹은 연계형 네트워크가 사회자본의 생성에 유용하나(Granovetter 1973; Burt 1992), 강한 유대 혹은 결속형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사회자본이 출현하는 데 필수조건이다(Coleman 1988; Lin 2001).

이러한 주장과 반론을 고려해볼 때, 자원결사체의 효과는 결사체의 성격이나 사회적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보아 이론적·경험적 모호성 속에 있다. 추후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를 대상으로 하는 실증조사를 통해 자원결사체(및 정치참여)가 호혜성 및 신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2) 정치참여

가. 개념

정치참여(political participation)는 어의 상 모든 사람의, 그리고 모든 종류의 정치활동을 포괄해야한다. 그런데 학술적 용어로서의 정치참여는 직업 정치인이나 공직자를 제외한 일반시민의 정치활동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연구자들 사이에 별 이견이 없고, 다만 이러한 정치활동의 외연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인다.

우선 정치참여의 개념정의 몇 가지를 소개하면, “정부 공직자의 선출이나 이들의 행위에 다소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려고 하는 일반 시민들의 활동”(Verba & Nie 1972, 2) 또는 “정부 공직자의 선출이나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고 행해지는 일반시민의 합법적인 행동”(Verba, Nie & Kim 1978, 1); “일반시민이...공공정책의 형성, 결정 및 집행의 과정에 관여하는 것”(Parry, Moyser & Day 1992, 16-17);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의도하는 일반시민들의 행위”(Huntington & Nelson 1976, 3-15) 등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들 개념정의를 종합해보면, 정치참여는 ‘일반시민이 정부의 구성(공직자의 선출)이나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활동의 범위에서 버바(Verba) 등은 불법적이거나 의례적 활동, 지지활동이나 동원된 활동은 제외하나, 페리·모이저·데이(Parry, Moyser &

Day) 그리고 헌팅턴과 넬슨(Huntington & Nelson)은 모두 포함시킨다. 이 경우, 전자를 협의의 정치참여 후자를 광의의 정치참여로 볼 수 있다(이승종 1993: 76-77). 본 연구에서는 광의의 입장을 따른다. 즉 정치참여란, 의례성·자발성·합법성을 불문하고, 일반시민이 정부의 구성이나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활동이라고 이해한다.

나. 종류

시민의 정치참여는 현실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까닭에, 연구자들은 정치참여형태들의 유형분류를 시도해왔으며 이는 연역적 분류와 귀납적 분류로 대별할 수 있다. 연역적 분류의 경우, 반즈·카스 외(Barnes, Kaase et al. 1979: 57-60)는 참여활동의 관습화 정도를 기준으로 관습적(conventional) 참여와 비관습적(unconventional) 참여로 분류하고, 김병준(1994: 446)은 참여활동의 제도화 여부를 기준으로 제도적 참여와 비제도적 참여로 대별한다. 그리고 뮐러(Muller 1982: 이승종 1993: 84-85 참조)는 참여활동의 합법성을 기준으로 합법적 참여와 비합법적 참여로 나눈 뒤, 합법적 참여는 다시 관습적 참여와 비관습적 참여로 나눈다. 이러한 유형론들은 관습이나 제도 혹은 법을 기준으로 한 연역적·2분법적 분류도식인데, 문제는 관습이나 제도 혹은 법은 나라마다 다르며 때에 따라 바뀌기도 하므로 그 범주는 항상 유동적이라는 것이다. 연역적 분류의 이러한 난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귀납적 분류이다. 버바와 나이(Verba & Nie 1972, 46-47)는 시민들이 통상 행하는 정치참여활동 13가지를 망라하여 조사한 뒤, 통계적 요인분석 기법을 사용해 이 활동들을 투표참여, 선거활동, 공공활동 및 사적 접촉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귀납적 분류방법은 밀브레스와 고엘(Milbrath & Goel 1977, 10-21)의 연구에서도 활용되고 있는데, 이들은 버바와 나이의 경우보다 정치참여활동의 범위를 넓혀 조사한 후 요인분석을 통해 투표참여, 정당 및 선거활동, 공공활동, 사적 참여, 항의활동, 통신활동 등 6가지로 유형화한다. 한편 달턴(Dalton 2008, 33-34)은 버바와 나이의 4가지 유형에다가 ‘항의와 논쟁’ 및 ‘인터넷활동’을 덧붙여 6가지로 유형화한다.

다. 기능

정치참여는, 사회참여와 마찬가지로, 상호작용을 통해 참여자 자신에게는 내부효과, 외부 환경에는 어떤 외부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루소(J. J. Rousseau), 밀(J. S. Mill) 및 콜(G. D. H. Cole)의 견해를 종합하여, 페이트만(Pateman 1970: 22-44)은 정치참여의 효과를 교육적 효과, 통합적 효과 및 집단결정의 수용촉진효과 등 3가지로 정리한다. 교육적 효과는 정치참여의 가장 중요한 효과이다. 정치참여를 통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협력을 이끌어 내려면 자신의 사적 이익을 넘어 더욱 폭넓은 공적 문제들을 고려해야만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배우며 능동적인 공공정신이 육성된다. 통합적 효과란 정치참여를 통해 개개 시민들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주인이 아니며, 모두가 평등하게 서로 의존하고 있고 평등하게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공동체 소속감이 증진되는 것을 의미한다. 집단결정 수용촉진효과란 참여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제정된 법은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더욱 쉽게 수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참여의 기능에 대해서는 사회자본론의 입장도 별반 다르지 않다. 퍼트남(Putnam 1993a: 171-176; 2000: 336-349)은 정치참여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고 본다. 외부효과로서, 정치참여는 정부의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의 수요측면에서 시민들은 더 좋은 정부를 기대하며 정치적 관심과 요구를 정부에 표출하고, 정치지도자들의 권력남용을 감시하고 정치적 책임성을 환기시킨다. 정부의 공급측면에서는 공직자와 시민 모두의 민주주의적 가치 확립을 통해 대의정부의 성과를 높인다. 그러나 공공업무를 정치가나 세력가 혹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적 무관심이나 소외감은 정치를 그들의 것으로 만든다. 내부효과로서, 토크빌이나 밀의 견해에 따라, 시민들이 공공업무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어떤 집합적 이익이나 목적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는 반면, 공공업무에 참여하면 여러 사람의 이익을 중시하도록 요구받고 개별적 특수성과는 다른 규칙을 따르도록 요구받게 되어 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 사이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리하여 정치참여는 구성원에게 협력의 습관과 공공정신(참여, 신뢰, 호혜성)뿐 아니라 공공생활을 함께하는 데 필요한 실용적 업무능력을 배양한다. 퍼트남(Putnam 2000: 152-166)에 따르면 이러한 정치참여 효과는 관습적 정치참여 유형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현대의 보편적인 정치참여 유형인 정치항의(political protest)는 관습적 정치참여의 대

안이 아니라 보완이며, 시민사회의 활력과 자유의 요소이다. 이념과 지향점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정치항의 그 자체는 참여자에게 동질성을 강화시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함으로써 사회자본을 창조하기도 한다. 게다가 정치항의 참여자들은 관습적 정치참여에도 보다 적극적이다. 그렇다고 시민참여가 민주주의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그러나 시민참여가 없는 정치는 일종의 국민투표 민주주의(plebiscitary democracy)로 전락할 수도 있다. 또한 풀뿌리 정치참여가 줄어들면 정치는 균형을 잃고 이데올로기적 양극단의 소수집단에 의한 파당의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간단히 말해 정치참여는 민주적 시민의 덕성을 함양하는 내부효과와 정부의 반응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외부효과를 가진다.

3) 호혜성

(1) 개념

영어 'reciprocity'는 연구자에 따라 '호혜성' 또는 '상호성'으로 번역된다. 어의 자체로 호혜성(互惠性)은 상호성(相互性)의 긍정적 측면만을 뜻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양자를 동의어로 간주하면서 주로 호혜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말리노프스키(Malinowski 1932; Gouldner 1960: 169 참조)에 따르면 원시사회에서 행위규범이 준수되는 토대는 '호혜성의 원리(principle of reciprocity)'이다. 그리고 짐멜(Simmel 1950: 387; Gouldner 1960: 162 참조)은 사회적 안정과 유대는 "서비스를 교환하는 호혜성"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고, "사람들 사이의 모든 계약은 등가물을 교환하는 도식에 기초하고 있다"고 한다. 즉 호혜성은 사회적 교환관계의 기초이고, 사회적 행위규범의 기초이다. 그럼 호혜성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살린스(Sahlins 1972: 191)에 의하면, 호혜성(reciprocity)이란 다양한 형태의 모든 교환들(exchanges)을 말한다. 교환의 형태에는 경제적·물질적 교환 즉 재화나 용역의 교환뿐만 아니라, 사회적 교환 즉 의무와 기대의 교환, 감정의 교환도 포함된다. 그리고 굴드너(Gouldner 1960: 170) 역시 호혜성의 개념에 재화나 용역의 교환뿐만

아니라 의무의 교환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코헤인(Keohane 1986: 4-8)은 호혜성을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되갚는 방식으로, 각 당사자의 행위는 상대방의 사전 행위를 조건부로 하는 대략적인 등가물의 교환들”이라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호혜성 개념의 핵심은 조건성(contingency)과 등가성(equivalence)이다. 즉 호혜성은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고,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대략적인(rough) 등가성에 입각한 교환을 말한다.

결국, 호혜성이란 곧 상호교환을 말하고, 이러한 상호교환의 내용으로는 경제적 재화나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회적 의무나 감정의 교환 등 모든 형태의 교환들이 포함된다. 다만 교환의 조건은 다를 수 있는바, 이에 따라 호혜성의 종류가 구분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호혜성의 종류에 대해 살펴본다.

(2) 종류

살린스(Sahlins 1972: 191-196)는 다양한 모든 교환형태의 스펙트럼 상에서, 보답의 즉각성, 보답의 등가성, 그리고 교환의 물질적·비감성적 차원을 기준으로 하여, 스펙트럼의 양극단과 중간점을 취해 호혜성은 ‘일반화된(generalized) 호혜성’, ‘균형적(balanced) 호혜성’ 및 ‘부정적(negative) 호혜성’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물론 현실상의 교환들은 정확한 양극단과 중간점이 아닌 어떤 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일반화된 호혜성이란 편익을 주고받는 거래 선상에서 이타적이라는 평판이 따르는 거래에 해당된다. 그 이념형은 말리노프스키가 “순수 선물”이라고 칭한 것이고, 다른 표현들로는 “공유”, “친절”, “공짜 선물”, “도움”, “관용”, “노블레스 오블리즈” 등이 해당된다. 이 경우, 직접적인 물질적 보답을 바라는 것은 풀사나운 짓이고 기껏해야 암묵적이다. 거래의 물질적 측면은 사회적 측면에 의해 억제된다.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을 제공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도 상대방의 보답의 의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보답은 시간적·양적·질적으로 규정되지 않고, 호혜성에 대한 기대는 일정하지 않다. 다만 공여자가 필요로 하거나 수혜자가 가능할 때에 보답을 해야 하는 확산된 의무(diffuse obligation)를 과한다.

균형적 호혜성은 직접적인 교환과 관련된다. 균형적으로, 보답은 수혜물의 인습적인 등가물이고 지체 없이 이루어진다. 다만 정해진 짧은 기간 내에 등가의 보답을 한다는 계약을 통해 좀 더 느슨하게 적용될 수도 있다. 균형적 호혜성을 지칭하는 표현은 “선물교환”, “상환”, “교역”, “매매” 등이다. 균형적 호혜성은 일반화된 호혜성에 비해 덜 인격적이고 보다 경제적이다. 교환의 당사자들은 뚜렷한 경제적, 사회적 이해를 가지고 서로 조용한다. 거래의 물질적 측면이 적어도 사회적 측면만큼 중요하며, 교환은 계산적이다. 상호관계는 한정된 시간 내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미흡할 때 붕괴된다. 일반화된 호혜성에서는 사회적 관계가 물질적 관계 보다 우세한 반면, 균형적 호혜성에서는 사회적 관계가 물질적 관계의 여하에 달려있다.

부정적 호혜성은 처벌받지 않고 공짜로 얻으려는 것과 관련된다. 이를 나타내는 표현은 “값 후려치기”, “도박”, “속임수”, “절도”, “강탈” 등이다. 부정적 호혜성은 가장 비인격적인 교환이다. 교환 당사자는 서로 상반되는 이해관계에서 만나, 상대방의 손해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속임수나 힘에 의한 착취나 강탈의 이기적인 혜택과 이에 대한 보답으로서 상응한 방법의 양값음이 교환된다. 일반화된 호혜성과 부정적 호혜성은 특히 도덕적인 의미에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고, 이들 양극 사이의 거리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거리이다.

굴드너(Gouldner 1960)에 따르면 호혜성은 3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재화나 서비스를 교환하는 상호 만족적인 교환양식으로서의 호혜성, 둘째, 지위(역할)상 상호 관련된 의무로서의 호혜성, 셋째, 일반화된 규범으로서의 호혜성. 첫째의 호혜성은 경제적 교환양식으로서의 호혜성을 말한다. 그런데 특히 둘째와 셋째의 호혜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지위상의 의무로서의 호혜성은 사회적으로 표준화된 역할 규범에 따라 역할 당사자들에게 부과된 의무이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식 혹은 부부 사이의 상호의무로서의 호혜성 따위를 말한다. 반면에 일반화된 규범적 의무로서의 호혜성은, 역할 당사자들 사이가 아니라, 과거 타인들이 나에게 행한 행위를 기초로 한 타인들에 대한 의무이다. 우리는 타인들과의 이전의 상호작용과정에서 타인들이 우리를 위해 행한 일로 인해 타인들에게 어떤 의무를 지고 있을 수 있다. 일반화된 호혜성 규범은 바로 이러한 종류의 의무를 말한다. 굴드너의 연구는 일반화된 호혜성 규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일반화된 호혜성 규범은 서로 연관된 다음의 두 가지 의무

를 부과한다. (1) 사람들은 자기를 도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 (2) 사람들은 자기를 도운 사람을 헤쳐서는 안 된다. 일반화된 호혜성 규범은 결론적으로 남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면 당신은 남을 도와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호혜성의 규범은 일반적이긴 하나,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다. 이 규범은 과거 타인들로부터 받은 혜택을 조건부로 보답의 의무를 과한다. 그리고 보답의 정도는 받은 혜택의 '대략적인 등가성(rough equivalent)'이다.

또한 코헤인(Keohane 1986: 4-8)은 호혜성을 구체적 호혜성(specific reciprocity)과 포괄적 호혜성(diffuse reciprocity)으로 구분한다. 구체적 호혜성은 특정 당사자들 사이에 교환의 시차(sequence)가 엄격히 정해진 상황에서 등가물을 교환하는 것이다. 교환관계에서 어떤 의무감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로 명백히 규정된다. 구체적 호혜성은 경제학이나 게임이론에서 말하는 호혜성의 전형적인 의미이다. 포괄적 호혜성은 등가성의 규정이 덜 명확하고 교환의 시차가 덜 한정된 교환을 말한다. 이러한 교환관계에서는 의무감(obligation)이 중요하고, 보편적으로 수용된 행위기준을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

사회자본론의 관점에서, 퍼트남(Putnam 1993a: 172, 미주 50)의 호혜성에 대한 개념, 분류 및 기능적 관점은 대체로 위에서 살펴본 살린스, 코헤인 및 굴드너에 의거하고 있다. 이들처럼 퍼트남 역시 호혜성을 균형적(balanced, specific)인 것과 일반화된(generalized, diffuse) 것으로 나누고 있으며, 특히 일반화된 호혜성을 사회자본의 매우 생산적인 요소로서 간주한다.

(3) 기능

균형적 호혜성 및 일반화된 호혜성은 게임이론이나 사회자본론 혹은 여타 사회이론에서 사람들 사이의 협력을 창출하고 사회적 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게임이론을 먼저 살펴본다. '중앙권위체가 없는, 이기주의자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과연 어떤 조건일 때 협력행동이 나타날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기 위해 액슬로드(Axelrod 2006)는 1984년 두 차례에 걸쳐 '컴퓨터 죄수의 딜레마 대회'를 개

최했다. 제출된 전략들은 각각 다른 모든 전략들을 상대로 상호협력이나 배신을 선택하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수없이 반복한 뒤, 주어진 보수행렬에 따라 가장 많은 보수를 획득한 전략이 우승자가 된다. 2개 대회 모두 우승자는 ‘tit for tat(Tit for tat. 맞대응)’ 전략이었다. 이 전략은 호혜성(reciprocity)에 기반한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다. 우선 협력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상대의 대응방식에 따라 맞대응하는 것. 즉 상대가 협력하면 나도 협력하고 상대가 배신하면 나도 배신으로 보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대는 보복이 두려워 협력할 유인이 생긴다. 이 전략이 우승한 이유는 상대를 무찔러서가 아니라, 여러 상대로부터 가장 많은 협력을 이끌어내었기 때문이었다. 협력행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둘 사이의 상호작용이 지속될 때 지금의 배신에 대한 다음의 보복이 두려워서이다. 상호작용할 기회가 없이 흩어져 있는 개인들로부터는 협력이 생길 수 없다. 작은 무리라도 이루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기만 하면 호혜성에 기반하여 협력은 창발된다. 따라서 액슬로드의 협력은 번성하기 위한 핵심요건으로 두 가지를 강조한다. 첫째, 협력이 호혜주의를 바탕으로 할 것. 둘째, 호혜주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 미래의 그림자가 충분히 클 것. 현재에 드리우는 미래의 그림자를 키우는 방법 중의 하나는 상호작용이 보다 오래 지속되도록 하고 서로 더 자주 만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미래의 상호작용의 중요성과 빈도를 증가시키고, 현재의 배반으로서 얻는 이익이 앞으로 남은 전체 상호작용에서 얻을 이익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게 만들어 협력의 안정성을 증가시킨다. 결국, 협력은 호혜주의로부터 생기고, 호혜주의는 지속적인 상호작용으로부터 생긴다. 따라서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사회구조(즉 사회적 네트워크)만 형성되면 호혜성에 기반하여 협력은 창출된다. 나아가 액슬로드는 이러한 호혜성의 효과는 서로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간접적인 평판을 통해서도 작용한다고 본다. 노왁(Nowak 2011: 51-68)은 ‘tit for tat’ 전략의 호혜성을 직접적 호혜성이라 칭하고, 평판을 통한 호혜성을 간접적 호혜성이라 칭하며 후자에 대한 게임 실험을 통해 평판이 협력을 위한 강한 촉진제가 됨을 입증했다. 이리하여 그는 간접적 호혜성의 작동을 위해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과 정보교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게임이론의 시각에서 볼 때, 사람들 사이의 지속적인 직접·간접의 상호작용은 균형적 호혜성에 기초한 협력을 낳는다. 그런데 이러한 맞대응 식의 균형적 호혜성은 협

력의 필요조건이긴 하나 충분조건은 아니다. 양자 간의 균형적 호혜성에 기반한 협력의 유인책은 다수의 행위자들과 공공재를 포함하는 다자간의 상황에서는 효과가 없을 수 있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다자간의 상황에서는 무임승차의 유혹이 생겨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공공재의 생산에 기여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

그렇다면 이제 코헤인(Keohane 1986)의 국제정치적 시각을 반영한 호혜성의 효과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에 따르면, 사회 내에서 협력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사람들은 구체적(균형적) 호혜성을 넘어 포괄적(일반화된) 호혜성에 연루되어야 한다. 이기주의에 기초한 구체적 호혜성은 원시사회에서건 국제사회에서건 갈등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기주의자들조차도 그들이 사회적 교환에 연루된다면 최소한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으려면 과거에 그들이 받은 것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교환관계의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사적 이익에 기초한 구체적 호혜성은 사회적 교환과정의 '되풀이되고 점차 확대되는 특성'으로 인해 상호 경험에 근거한 신뢰를 발생시킬 수 있다. 즉 연쇄적인 채권채무의 존재는 장기적으로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 호혜성에 의한 거래가 지속되면 포괄적 호혜성의 작동을 위한 적합한 상황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교환은 동시적이기 보다 연쇄적으로(sequentially) 발생해야 한다. 만일 동시적 교환만 일어난다면 협력이나 합의는 별로 생겨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쟁점들은 종종 연속적이라서 어떤 주어진 시간에 적절한 맞대응 수단을 찾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동시교환에서는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교환은 어떤 순간에도 균형적이기 때문이다. 거꾸로, 동시적인 교환은 종종 신뢰의 붕괴를 반영한다. 그런데 포괄적 호혜성의 경우, 포괄적 호혜성의 실행자는 협력행위를 통해 즉각적·직접적인 보상을 받지 않는 까닭에, 포괄적 호혜성의 패턴은 오직 사회에 널리 퍼진 의무감(sense of obligation)을 통해 유지될 수 있다. 강한 의무감이 부재한 상태에서 포괄적 호혜성은 그 실행자를 착취의 위험에 노출시킨다. 이 경우, 구체적 호혜성이 그 치유책이 될 수 있다. 구체적 호혜성은, 국제관계에서처럼, 의무규범이 약할 때의 적절한 행위원칙이다. 이렇게 구체적/포괄적 호혜성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고, 이들의 관계는 선형적이 아니라 변증법적이다. 구체적 호혜성은 무정부 상태에서 협력이 창발하게 할 수 있고 포괄적 호

혜성이 발전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 호혜성은 거래관계를 제한하고, 다자간 협상을 복잡하게 만들고, 양자관계에서조차 불화를 야기할 수도 있다. 포괄적 호혜성은 불필요한 갈등의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으나 착취의 위험에 노출된다. 둘 중 어느 호혜성도 완전히 만족적이지 않다면,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고려해봐야 한다.

한편, 굴드너(Gouldner 1960)는 호혜성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파슨스(Parsons 1951)의 기능주의 관점을 도입한다. 파슨스에 따르면 사회체계는 나(Ego)와 남(Alter)이 서로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도에 따라 안정적이다. 그래서 안정된 호혜적 관계가 일단 수립되기만 하면 사회체계는 그것을 유지할 특별한 기제가 없이도 스스로 유지된다. 내가 남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은 남이 나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고, 이렇게 상호 호혜성의 순환과정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굴드너는 특히 일반화된 호혜성의 동기는 단순히 상호간의 욕구충족 뿐만 아니라 내면화된 호혜성의 규범으로부터 유래한다고 본다. 사람들이 이 규범 하에서 살아가는 한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도우면 하나의 의무가 발생한다. 수혜자는 공여자에게 빚을 진 상태이고, 이러한 상태는 수혜자가 빚을 갚을 때까지 지속된다. 따라서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지속되면 이 규범은 일방이 제공하고 타방이 보답할 기간 동안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의무관계로 구조화시킨다. 이러한 미결의 의무관계는 사회체계의 안정에 기여한다. 공여자로서는 그에게 보답의 의무를 가진 사람과 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득책이 아니다. 그리고 수혜자로서는 공여자가 혜택을 더 이상 베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득책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호혜성 규범에 비추어 부도덕한 짓이다. 이러한 결론이 옳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자기의 의무를 다하고 채무를 갚도록 하는 기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서로 빚진 상태로 남아 있을 기제를 찾아보아야 한다. 일반화된 호혜성 규범에 포함된 '대략적인 등가성'은 이러한 기능을 발휘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채가 변제되었는지에 대한 모호성을 남겨두고, 장기간에 걸쳐 누가 누구에게 빚졌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상호관계에서 유연한 도덕적 재제를 가함으로써, 일반화된 호혜성 규범은 사회구조의 유동적인 균열을 메우고 일종의 만능 도덕적 접착제로서 기능한다. 또한 일반화된 호혜성 규범은 '출발 기제(starting mechanism)'로

서 기능한다. 다시 말해 이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개시하는데 도움을 준다. 사람들이 일시적인 접촉을 벗어나 사회적 네트워크나 집단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제가 필요하다. 이것이 ‘출발 기제’이다. 일반화된 호혜성 규범은 이러한 기제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군축회의 참석자들은 각자가 상대방에게 “당신이 먼저”라고 말한다. 그러면 교환관계는 발전하지 않을 수 있다. 호혜성 규범은 이러한 상황에서 난국을 벗어나게 하는 출발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사람들에게 내면화될 때 이 규범은 혜택을 먼저 받은 쪽이 보답해야 할 의무를 과한다. 이리하여 먼저 베푸는 것을 덜 주저하게 만들고 교환이나 사회적 관계를 진전시킨다.

퍼트남(Putnam) 역시 호혜성을 균형적(balanced, specific)인 것과 일반화된(generalized, diffuse) 것으로 나누고 있으며, 특히 일반화된 호혜성을 사회자본의 “시금석”으로 간주하고 이 규범이 통용되는 공동체에서는 기회주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고 집합행동의 딜레마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그(1993: 172; 2000: 134-135)는 일반화된 호혜성의 기능과 관련해서 마이클 테일러(Michael Taylor 1982: 28-29)의 다음 구절을 두 번이나 인용하고 있다: “호혜성의 체계 내에서 각 개인의 행동은 통상 단기적 이타주의와 장기적 자기 이익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 나는 언젠가 당신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하고 불확실하며 계산적이지 않은) 기대감에서 지금 당신을 돕는다. 호혜성은 단기적으로는 이타적인 (자신의 부담으로 타인을 이롭게 하는) 일련의 행동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행동들이 모두 합쳐지면 일반적으로 모든 참여자를 더 좋아지게 만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들 사이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혹은 교환관계는 균형적 호혜성 내지 일반화된 호혜성을 조장하고, 이러한 호혜성은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협력의 기반이 된다. 호혜성이란 쉽게 말해 ‘서로 주거나 받거나’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호혜성의 규범은 상대방의 공여에 대한 보답의 의무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일반화된 호혜성은 ‘사람들은 자기를 도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보편적인 행위 규범 하에서, 일반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의무관계로 구조화시켜 기회주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고 집합행동의 딜레마도 해소할 수 있다.

추후 본 연구의 실증분석 부분에서는 살린스의 일반화된 호혜성 개념에 의거 부산

시민들의 도움활동, 관용성, 노블레스 오블리즈의 현황을 조사하는 한편, 과연 시민 참여의 네트워크가 이러한 일반화된 호혜성을 조장하는지, 그리고 일반화된 호혜성은 신뢰를 조장하는지를 분석해본다.

4) 신뢰

(1) 개념

김경동(1978: 101)에 의하면, 사람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사회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사회학의 기본전제이다. 그리고 바버(Barber 1983: 9)에 따르면, 물질이 물리적 세계의 기본 요소이듯이 신뢰는 인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본 요소이다. 따라서 신뢰의 체계가 무너지면 사회적 동물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보크(Bok 1979: 31)의 표현을 빌면, ‘신뢰가 손상되면 사회는 병들고, 신뢰가 말살되면 사회는 비틀거리다가 붕괴된다’. 한편 던(Dunn 1988)의 연구에 따르면 존 로크의 정치철학에서 시민의 정부에 대한 관계는 계약관계라기 보다 신뢰관계라고도 볼 수 있으며, 하딘(Hardin 1998: 9-10)은 정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없으면 정부는 시민의 복종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사회자본론의 관점에서 신뢰는 사회의 생산적 요소로서 정치·경제·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서 계약과 감시와 같은 거래비용을 줄여주고 집합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함으로써 협력행위를 촉진시켜,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나 경제발전 혹은 사회안정에 기여하는 자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Putnam 1993a, 1993b; Coleman 1988; Grootaert 1996; Fukuyama 1995). 그럼 과연 신뢰란 무엇인가?

신뢰의 개념정의 몇 가지를 먼저 소개한다. 감베타(Gambetta 1988: 217)는 “한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행위자를 감시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행위자나 행위집단이 특정한 행동을 할 것이라 판단하는 주관적 확률”; 루쑤 외(Rousseau et al. 1998: 395)는 “상대방의 의도나 행동에 대한 긍정적 기대에 기반하여 취약성을 감수하려는 의도가 있는 심리적 상태”; 박찬웅(1999: 39)은 “한 행위자가 위험에도 불구하고 다른 행위자가 자신의 기대 혹은 이해에 맞도록 행동할 것이라는 주관적 기대”; 후쿠야마(Fukuyama 1995: 26)는 “어떤 공동체 내에서 일

반적으로 공유하는 규범에 기초하여 그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이 규칙적이고 정직하며 협동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라고 신뢰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이들 개념정의에서 거론된 신뢰의 속성으로는 심리적 상태, 주관적 긍정적 기대, 취약성, 위험성, 감시나 통제의 부재 등이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신뢰의 개념을 분석적으로 이해해보기로 한다.

신뢰의 구조는 하딘(Hardin 1998: 12)과 같이 ‘A는 B가 X할 것을 (혹은 B의 X에 대해) 신뢰한다’라는 표현으로 도식화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신뢰(trust)는 신뢰대상(B)의 어떤 행위(‘X할 것’)나 속성(‘X에 대해’) 등의 신뢰성(X. trustworthiness)을 근거로 하여 신뢰대상에 대해 형성하는 신뢰주체(A)의 어떤 심리상태 혹은 행위정향이다. 신뢰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신뢰주체, 신뢰주체의 심리상태(즉 신뢰의 심리상태), 신뢰대상, 그리고 신뢰대상의 신뢰성(즉 신뢰근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선, 신뢰는 신뢰주체의 어떤 긍정적 심리상태이다. (반면에 불신은 신뢰주체의 어떤 부정적 심리상태이다.) 분석적으로 신뢰는 신뢰주체의 인지적, 감정적, 평가적 정향들로 구성된 심리상태 혹은 행위정향으로서, 신뢰대상의 신뢰성에 대한 인지와 감정에 기반한 신뢰주체의 긍정적 평가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Barber 1983: 9; 김우택, 김지희 2002: 34; Mayer et al. 2007: 349). 그런데 신뢰주체의 이러한 긍정적 평가는 신뢰대상의 신뢰성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과 불합리한 신념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신뢰는 합리성과 불합리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신뢰가 합리적인 판단을 구성요소로 한다는 것은, 신뢰대상의 신뢰성에 대한 신뢰주체의 인지와 감정에 기반한 평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뢰가 불합리한 신념을 구성요소로 한다는 것은, 신뢰대상의 신뢰성은 항상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러한 평가는 확실한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주관적인 신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뢰성은 신뢰대상에 속해 있는 까닭에, 정보나 통제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신뢰주체는 이에 대한 완전한 확실성을 확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신뢰대상이 자연, 사회 혹은 개인이라 할 때, 자연 질서의 이행은 자연에 달려 있고, 사회질서의 이행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달려 있으며, 사회관계에서 나와 관련되는 사람들의 역할이나 책임의 수행은 그 사람들에게 달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주체는 신뢰대상의 신뢰

성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신뢰대상을 완벽하게 감시하거나 통제할 수도 없다. 따라서 신뢰주체의 긍정적 평가는 신뢰대상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배신의 위험에 취약한 상태로 놓여있는 주관적 기대(expectation)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신뢰란 곧 불확실성 속에서의 주관적이고도 긍정적인(혹은 낙관적인) 기대인 것이다. 게다가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된 상황에서의 기대는 신뢰 현상이 아니다. 상대방의 의도나 행동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거나 통제할 수 있다면 굳이 신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이재혁 1998: 312; 박찬웅 1999: 37). 다만 이러한 불확실성은 클 수도 작을 수도 있고, 불확실성의 감소 즉 신뢰성의 증가는 신뢰를 증진시키는 요인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신뢰성은 신뢰대상에 속한 까닭에 이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신뢰주체의 기대에는 불합리한 무조건성(unconditionality)(Seligman 1997: 44) 내지 모험성(bet)(Sztompka 1999: 26)이 포함되어 있다. 야마기시(김의철 등 역 2001, 108-109)는 신뢰(trust)는 신뢰주체의 인격특성이고 신뢰성(trustworthiness)은 신뢰대상의 인격특성이라고 하는데, 무조건성이나 모험성은 바로 신뢰주체의 인격특성에 속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뢰는 신뢰주체의 낙관적 세계관의 소산이기도 하다(Uslaner 2002: 1-8).

다음으로, 신뢰는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신뢰는 관계적(상호 의존적) 개념이다. 신뢰관계에서 신뢰주체(A)는 인간 개인이나 집단이 될 수 있다. 신뢰는 인간의 심리현상이므로 신뢰주체는 일단 인간 개개인이다. 다만 집단 차원에서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집단심리로서 어떤 신뢰대상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집단을 신뢰주체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하나의 민족집단으로서 한국인은 일본인 혹은 미국인에 대해 보편적으로 일정 수준의 신뢰를 공유할 수 있다.

한편, 신뢰는 인간의 심리현상이므로 신뢰주체는 인간 개인이나 집단에 국한되지만, 신뢰대상(B)은 개인이나 집단, 제도나 규범, 혹은 물건이나 자연현상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국회의원, 국회라는 집단, 대의 제도, 다수결의 규범, 혹은 중고 자동차나 낙뢰를 신뢰하거나 앓을 수도 있다.

끝으로, 신뢰대상의 신뢰근거(X)는 신뢰주체가 신뢰대상을 신뢰하는 근거로서, 신뢰대상의 일반적 혹은 구체적 속성, 상태, 행위, 역할 등의 특성(신뢰성.

trustworthiness)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국회에 대한 신뢰는 국회의 대의기능의 속성, 여야 의석구성의 상태, 의원의 행위나 역할 등에 근거해서 형성될 수가 있다. 게다가, 예를 들어, 국회의 대의기능이라는 일반적 속성도 여론수렴기능이나 정책형성기능 혹은 정책결정기능 등 구체적 속성으로 세분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모든 구체적 속성들을 포괄하여 좀 더 추상적이고 종합적인 국회의 역할이나 정체성 등이 신뢰근거가 될 수도 있다. 이 신뢰근거 혹은 신뢰성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주커(Zucker 1986), 그리고 샤피로 외(Shapiro et al. 1992)의 신뢰의 유형분류를 통해 좀 더 고찰해보게 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신뢰의 개념을 종합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신뢰란 신뢰대상에 대한 감시나 통제 내지 정보가 다소간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신뢰대상의 어떤 특성(속성, 상태, 행위, 역할, 정체성 등)을 근거로 신뢰대상에 대해 긍정적(혹은 낙관적) 평가나 기대를 함으로써, 이러한 평가나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취약성을 감수하고 있는 신뢰주체의 심리상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취약성은 궁극적으로 신뢰대상의 신뢰근거(신뢰성)에 대한 불확실성에 기인한 까닭에, 간단히 말해 신뢰란 신뢰주체가 불확실성 속에서 신뢰대상의 어떤 특성(신뢰근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기대하는 심리상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신뢰근거로서의 이러한 특성들은 신뢰대상의 어떤 구체적인 의도, 행위, 속성 등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포괄적·종합적으로 신뢰대상의 보편적인 역할이나 정체성이 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좀 더 포괄적인 시각에서 신뢰란 ‘신뢰주체가 불확실성 속에서 신뢰대상의 어떤 역할(행위)이나 정체성(속성)을 긍정적으로 평가 혹은 기대하는 심리상태’라고 규정한다.

(2) 종류

신뢰를 ‘A는 B가 X할 것을 (혹은 B의 X에 대해) 신뢰한다’는 표현으로 도식화할 때, 신뢰는 A, B 및 X의 조합으로 형성되므로 신뢰의 종류는 무수하다. 따라서 신뢰 연구에 있어서 또 하나의 과제로서 대두되는 것이 신뢰의 유형분류 문제이다. 기존연구들에서 신뢰의 유형분류는 주로 두 가지 기준에 의거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나는 신뢰근거(X)이고 다른 하나는 신뢰대상(B)이다.

우선, 신뢰근거를 기준으로 한 유형분류를 살펴본다. 신뢰근거는 신뢰주체가 신뢰대상을 신뢰하는 근거로서 곧 신뢰대상의 신뢰성(trustworthiness)을 말한다. 주커(Zucker 1986)는 신뢰근거를 기준으로 신뢰를 과정근거적(process-based) 신뢰, 특성근거적(characteristic-based) 신뢰 그리고 제도근거적(institutionally-based) 신뢰로 구분한다. 과정근거적 신뢰란 당사자들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의무를 지킴으로써 쌓은 평판에 근거해 형성되는 신뢰유형이다. 특성근거적 신뢰는 한 개인이 속하는 집단의 귀속적 특성, 예를 들어 가문이나 인종 등의 동질성에 근거해서 형성되는 신뢰유형이다. 그리고 제도근거적 신뢰는 공식적인 제도, 예를 들어 학력이나 자격증, 법적 보증제도 등에 근거해서 형성되는 신뢰유형이다.

한편, 샤피로 외(Shapiro et al. 1992)는 역시 신뢰근거를 기준으로 신뢰의 유형을 제재근거적(deterrence-based), 지식근거적(knowledge-based), 일체감근거적(identity-based) 신뢰로 구분한다. 제재근거적 신뢰란 신뢰주체가 신뢰대상으로부터 배반당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제재나 처벌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에 근거해서 형성되는 신뢰유형이다. 지식근거적 신뢰란 신뢰대상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라는 신뢰주체의 예측능력 즉 신뢰대상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근거로 형성되는 신뢰유형이다. 그리고 일체감근거적 신뢰란 신뢰주체와 신뢰대상 상호간의 일체감, 예를 들어 공동체의식, 공통의 가치나 규범 혹은 목표 등에 근거해서 형성되는 신뢰유형이다.

위에 소개한 신뢰근거에 대한 논의를 좀 더 확장해보자. 두 연구를 종합해보면 다음의 6가지 신뢰근거가 있다: (1) 의무이행에 대한 평판, (2) 귀속적 동질성, (3) 공식적인 보증제도, (4) 제재 가능성, (5) 신뢰대상에 대한 정보나 지식, (6) 상호 일체감. 신뢰대상에 대한 이러한 신뢰근거가 확보된다면 신뢰주체의 신뢰는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신뢰 연구를 위한 2가지 시사점이 발견된다. 첫째로, 신뢰 증진의 기반으로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있는바(Levi 1998; Rothstein 2005; Tarrow 1996), ‘공식적인 보증제도’와 ‘제재 가능성’은 바로 신뢰 증진의 기반으로서 법이나 제도의 역할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로, ‘의무이행에 대한 평판’, ‘신뢰대상에 대한 정보나 지식’, ‘상호 일체감’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러한 신뢰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둘째의 경우는 사회적 네트워크나 ‘시민참여 네트워크’가 신뢰를 조장한다는 사회자본론의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신뢰대상에 따른 신뢰의 유형분류를 살펴본다. 쉘토프카(Sztompka 1999: 41-46)는 사회적 신뢰대상을 기준으로 신뢰를 구체적인 사람들에 대한 신뢰로부터 더욱 추상적인 사회적 대상에 대한 신뢰로 단계적으로 확장되는 동심원으로 분류한다. 신뢰의 동심원은 구체적인 사람들인 가족구성원→지인(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동일사회집단의 구성원(같은 동네 사람들, 같은 공장의 피고용인들, 같은 정당의 당원들 등)→공통속성의 사람들(같은 인종.국가.나이.직업.종교 등의 사람들)에 대한 신뢰로부터, 구체성과 추상성의 경계영역에 위치하는 사회적 범주(성별, 연령, 인종, 종교 등의 분류범주)에 대한 신뢰를 거쳐, 더욱 추상적인 사회적 대상인 사회적 역할(부모, 의사, 교수, 상인 등등)→특정한 사회집단(어떤 특정한 축구팀.내각.직능 집단 등)→제도적 조직(학교, 교회, 행정부, 의회, 법원, 경찰, 기업 등)→규범적 절차(시험제도, 소송절차, 선거제도 등)→기술체계(통신체계, 교통체계, 컴퓨터 네트워크, 금융시장 등)→사회체제나 정치체제(자본주의, 민주주의 등)에 대한 신뢰로 확장된다. 이처럼 신뢰대상에 따른 신뢰의 유형분류도 복잡한 까닭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연구자들은 사회적 신뢰대상들을 더욱 폭넓게 구분하여 대인신뢰와 사회신뢰(Earle and Cvetkovich 1995) 혹은 대인신뢰와 제도신뢰(Newton 2009; 이수인 2011)로 대분류하기도 한다. 이때 대인신뢰(trust in people)는, 쉘토프카의 분류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람들인 가족구성원, 지인, 동일사회집단의 구성원 및 공통속성의 사람들에게 대한 신뢰를 포괄하고, 사회신뢰 혹은 제도신뢰(confidence in institutions)는 추상적인 사회적 범주로부터 사회체제나 정치체제까지를 포괄한다. 또한 대인신뢰는 특수(인)신뢰와 일반(인)신뢰로 중분류 되는바, 이때 특수신뢰는 사적이고 직접적인 면식에 근거한 가족구성원이나 지인 등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신뢰, 일반신뢰는 일반적인 정보에 근거한 여타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포함한다. 또한 특수신뢰는 두터운 신뢰 혹은 구체적 신뢰로 명명되기도 하고, 일반신뢰는 얇은 신뢰 혹은 추상적인 신뢰로 명명되기도 한다. 다만, 사회신뢰 혹은 제도신뢰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일정한 중분류체계가 없이 신뢰대상별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듯하다. 예를 들어 정부에 대한 신뢰는 정부신뢰, 체제에 대한 신뢰는 체제신뢰라 칭한다. 사

회적 신뢰대상에 대한 신뢰는 예를 들어 아래 <표 1>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표 1> 신뢰유형분류

영역	유형	신뢰대상
대인 신뢰	특수(인)신뢰	잘 아는 사람(가족구성원, 친구, 동료, 이웃 등)
	일반(인)신뢰	잘 모르는 사람(일반적 타자)
제도 신뢰	정치공동체 신뢰	국가, 지방자치단체
	체제신뢰	정치체제(민주주의 등), 경제체제(자본주의 등), 기술체계(금융체 계, 교통체계 등)
	집단(혹은 기관)신뢰	마을, 가정 등 일차집단; 정부기관(입법부, 행정부, 경찰 등), 기업, 노조, 언론기관 등 이차집단
	절차신뢰	선거제도, 다수결 제도, 소송절차, 혼인제도 등
	역할신뢰	대통령, 국회의원, 사장, 상인, 교수, 의사 등

(3) 기능

사람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사회가 성립될 수 없다. 현대 사회적 상호작용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 완벽하게 알거나 통제하거나 감시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우정이나 애정 관계, 계약이나 거래 관계, 나아가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은 상대방에 대한 다소간의 불확실성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상대방에 대한 일말의 믿음도 없다면,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지속될 수가 없을 것이다. Hobbes(1985: 184-185)의 표현에 의하면, 자연상태에서는 불신으로부터 전쟁이 일어나고, 상호불신 상태에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은 선수를 치는 것뿐이며, 이리하여 인간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상태에 놓여진다. 말하자면 신뢰는 사람들이 원활한 상호작용을 통해 평화로운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조건인 것이다.

쉴토프카(Sztompka 1999: 102-118)는 신뢰의 기능을 신뢰 당사자들 및 더 넓은 공동체(집단, 지역, 국가 등)에 대한 것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우선, 당사자들 사이에서 신뢰는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 행위를 유발한다. 상대방을 신뢰할 경우 상대방에 대한 의심, 불안, 경계에서 벗어나 상대방에 대해 더욱 솔직하고 개방적이 되고 기꺼

이 교류를 맺고 지속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신뢰주체의 활동성과 자유의 전반적인 수준이 고양되고, 신뢰주체는 조심스럽고 상투적인 일상사에서 벗어나 더욱 혁신적이 된다. 게다가 신뢰주체의 신뢰는 상호 간의 신뢰로 교환되고, 이를 통해 신뢰 당사자들은 신뢰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와 반대되는 결과가 불신⁸⁾으로부터 생겨난다. 불신이 생겨나면 자신의 위험과 취약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적인 비관주의를 발생시킨다. 불신자는 모든 행위를 조심스레 점검하면서, 상대방을 경계하고 의심하며 교류를 주저한다. 결과적으로 불신자의 활동성과 자유의 전반적인 수준이 저하되고, 상투적인 일상사를 따르면서 어떠한 혁신도 회피한다. 게다가 불신은 상호 간의 불신을 낳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해로운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 신뢰는 신뢰주체 뿐만 아니라 신뢰대상에게도 긍정적 효과를 준다. 신뢰를 받음으로써 사회적 감시와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일종의 ‘신용장’을 갖게 되고, 이는 활동의 자유의 폭을 넓힌다. 그리고 어떤 이에게 신뢰를 받는다는 평판은 다른 이들이 신뢰를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다른 거래에서 그의 신뢰성을 높인다. 신뢰를 받는 것은 일반인, 정치인, 학자, 기자 등의 사람뿐만 아니라, 정부, 군대, 경찰 등의 제도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신뢰를 받지 못할 경우, 그 신뢰대상은 지속적인 경계와 의심을 받게 되고 비협조적인 적대감으로 인해 활동성이 축소되고 손발이 묶인다.

다음으로, 신뢰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더 넓은 공동체를 위해서도 중요한 기능을 한다. 첫째, 신뢰는 사람들 사이의 교류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형태의 결사체 참여를 조장한다. 이리하여 사람들 사이의 유대의 네트워크를 풍부하게 하고, 상호교류의 장을 넓히고, 사람들 간의 접촉을 통해 친밀감을 강화시킨다. 다시 말해 신뢰는 뒤르케임이 말한 ‘도덕적 밀도’를 높인다. 둘째, 신뢰는 소통의 확대를 촉진한다. 셋째, 신뢰는 관용성, 이방인의 인정, 문화적·정치적 차이의 인정을 촉진한다. 이리하여 신뢰는 집단들 사이의 적대감과 이방인에 대한 혐오감을 억제하고, 갈등을 순화한다. 넷째, 신뢰문화는 개인의 공동체에 대한 유대를 강화하고, 나아가 타인을 위한 자발적 봉사나 희생조차도 유발한다. 다섯째, 신뢰문화가 존재할 때 거래비용이 뚜렷이 감소하고

8) 신뢰와 불신을 대칭적인 개념(즉 신뢰가 없는 상태가 불신)이 아니라, 사랑과 증오처럼 서로 독립적인 개념(사랑이 없는 상태가 증오가 아님)으로 보는 관점도 있다.

협력의 기회가 증가한다. 반대로 불신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첫째, 불신은 소통의 통로를 닫고 사회구성원들의 고립을 초래한다. 둘째, 그것은 결사체의 붕괴, 사회적 네트워크의 쇠퇴를 가져온다. 셋째, 그것은 방어적 태도, 적대적 상투수단, 루머, 편견, 노골적인 이방인 혐오감을 형성한다. 넷째, 그것은 개인을 소외시키고 공동체를 떠나 다른 대안, 즉 불법적인 갱단이나 일탈적 하위문화와 같은 정체성을 찾도록 한다. 다섯째, 일종의 후광효과로서, 불신풜조가 팽배하면 지속적인 경계의 필요성으로 인해 거래비용이 현저히 증가하고 협력의 기회는 저해된다. 결국, 신뢰가 결핍되면 신뢰가 충족시키지 못한 확실성, 예측성, 질서 등을 위한 기능적 대체물이 필요해진다. 이것들은 운명론, 부패, 경계심의 증대, 과도한 소송, 계토의 형성, 외국 동경 등이다. 한편, 배신은 단기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나, 미래의 신뢰성을 파괴하고 미래의 유익한 거래의 기회를 상실케 한다.

쯔토프카에 따르면, 신뢰의 이러한 기능적 효과가 발생하는 범위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신뢰의 효과가 집단 내부와 집단 외부에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내부적 신뢰문화가 형성된 협동조합이나 대학이 정보나 서비스 등의 제공을 통해 더 넓은 사회의 활동을 돕는 경우이다. 또한 가족주의가 직장이나 사회에서 유사한 가족주의로 확장되는 것도 한 예이다. 다른 하나는, 신뢰가 집단 내부에 치중되어 국지화된, 특수한, 배타적, 분열적인 성격을 갖는 경우이다. 그것은 우리와 그들의 경계를 쌓아 분리시키고, 외부에 적대적이다. 때로 그것은 다른 이의 도덕적 권리나 생존권마저 부정한다. 밴필드(Banfield 1958)가 말하는 ‘비도덕적 가족주의’⁹⁾가 그 전형이다.

한편, 김우택·김지희(2002)는 신뢰의 핵심적 기능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신뢰는 사회관계 및 인간관계의 통제기제를 대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서로 신뢰하지 못할 때 타인의 행위에 대한 감시나 통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신뢰가 존재할 때에는 이러한 통제기제가 필요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둘째, 신뢰는 상호작용에 있어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줄여준다. 즉, 신

9) “핵가족의 단기적인 물질 이익을 추구하고 동시에 다른 모든 사람도 그럴 것으로 가정하라”는 태도 (Putnam 1993a: 88).

뢰가 형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배신과 같은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감시하고 또 배신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할 비용을 줄여준다.

셋째, 신뢰는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개인들 상호간에 신뢰가 구축되면 이들 간의 유대관계가 강화되고, 이에 따라 상호작용의 범위 역시 확대됨으로써 각종 네트워크를 자발적으로 형성하게 된다.

넷째, 신뢰는 협력행위를 가능하게 하고, 또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호 협력은 어디까지나 상대방의 행위 의도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통목표의 달성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다.

다섯째, 신뢰는 서로의 적대감과 갈등을 해소해 주며, 위기가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한다. 즉, 신뢰에 기초한 일체감과 협력의식은 위기의 내역과 그 대처방안에 대한 공통인식을 형성케 함으로써 조직의 단결성을 강화하여 위기대응능력을 높인다.

이러한 5가지는 보편적인 신뢰의 기능이라 할 수 있으나, 신뢰의 유형을 구분해서 볼 때 특히 특수신뢰의 기능에 대한 논란이 있다. 앞에서 쾨츠프카가 ‘국지화되고 배타적·분열적인 성격을 갖는 신뢰’에 대해 언급한 것처럼, 특수신뢰는 신뢰대상과의 사적인 긴밀한 유대를 통해 폐쇄적인 협력과 결속의 요인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그 배타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더 넓은 사회에는 분열의 원인이 되고 오히려 사회적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Granovetter 1973; Fukuyama 1995; Sztompka 1999). 이러한 이유로 인해 후쿠야마(Fukuyama 1995)는 ‘신뢰의 반경범위(radius of trust)’가 특수신뢰에 머물러 있는 사회를 저신뢰사회, 일반신뢰의 수준이 높은 사회를 고신뢰사회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러나 특수신뢰와 일반신뢰를 상호배타적인 관계로 보지 않는 시각도 있다. 유석춘·장미혜(2003: 48-51)는 특수신뢰와 일반신뢰의 상호보완성을 주장하고, 깁슨(Gibson 2001: 61)의 러시아 사회에 대한 분석은 특수신뢰와 일반신뢰 사이의 긍정적 상관관계를 입증하고 있다. 그리고 뉴턴(Newton 2009: 349)은, 현대의 대규모 사회는 필연적으로 두터운 특수신뢰를 결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회에서는 많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서로 모르거나 혹은 공통의 사회적 배경을 갖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일

반신뢰가 또한 중요해진다고 한다. 어쨌든, 신뢰의 기능은 그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둔다.

3. 사회자본의 효과

끝으로 논의해야 할 문제는 사회자본의 효과에 관한 것이다. 사회자본의 효과는 궁극적으로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들, 즉 네트워크, 신뢰, 규범 등의 효과이다. 여기에서는 이들 구성요소들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지적할 점은 사회자본의 효과 문제는 실증연구의 과제라는 것이다. 그런데 실증연구에 있어서는, 사회자본과 그 기능적 효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애매하다는 비판이 줄곧 따라다닌다. 즉, 사회자본이 원인이 되어 어떤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기보다, 그러한 효과가 원인이 되어 사회자본이 증진된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말하자면, 높은 사회자본이 경제성이나 정부성적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이나 정부성적이 높아짐에 따라 신뢰나 호혜성과 같은 사회자본이 증진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뉴턴(Newton 1997: 577-578)의 지적처럼, 사회과학은 이러한 닭과 달걀 사이의 선후관계에 대한 논쟁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한 동일한 현상이 상이한 기능과 결과를 낳거나 혹은 상이한 현상이 동일한 기능과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문제들은 사회자본 연구에서만 제기되는 것이 아니고 대체로 사회과학 일반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아래에서는 사회자본의 기능적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결과들을 소개한다.

1) 경제적 효과

우선 거시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분석을 소개한다. 거시경제적 분석은 네트워크, 신뢰 혹은 호혜성을 바탕으로 한 정보유통, 거래비용의 감소, 계약의 이행 내지 협력의 증대 등에 따른 경제적 성과를 사회자본 효과로 간주한다. 퍼트남(Putnam 1993a)의 연구는 사회자본의 이러한 거시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의 효시라 할 것이다. 이태리

의 20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그의 실증연구에서는 시민참여의 네트워크, 신뢰 및 호혜성의 규범을 바탕으로 하는 시민공동체(civic community)가 형성된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과 비교해 높은 경제발전을 이룬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후쿠야마(Fukuyama 1995)의 연구는 특히 일반신뢰의 수준이 국가의 경제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경험적 자료들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냅과 키퍼(Knack & Keefer 1997)의 29개 시장경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서는, 일반신뢰와 시민규범(일반화된 호혜성 규범)이 경제성장률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특히 신뢰의 영향력은 가난한 나라일수록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결사체참여도는 경제성장률과 무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¹⁰⁾ 반면에, 구 소련·동구권 지역 21개 국가의 1989-1998년 사이의 누적 경제성장률에 대한 사회자본 효과를 분석한 레이저 외(Raiser et al. 2002)의 연구에서는 결사체참여 및 공공제도에 대한 신뢰가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반면, 일반신뢰는 유의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¹¹⁾ 그리고 Rupasingha et al.(2002)의 연구에서는 결사체 활동이 미국 카운티들의 경제성장에 강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¹²⁾ 한편, 로베이(Robey 1999)는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이 발효된(1994년 1월 1일) 후 4년이 지난 시점에서 멕시코의 경제적 성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그 주요 원인으로서 시민사회의 미발달과 사회자본의 결핍을 지적한다.

다음으로 미시적인 분석을 소개한다. 미시적 분석은 대체로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획득이나 접촉이 직업 구하거나 승진 혹은 소득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가정하

10)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의 1981년 조사주기(8개 국가는 1990-1991 조사주기)의 설문조사자료를 바탕으로, 독립변수들 중 신뢰는 일반신뢰에 관한 문항; 시민규범은 ‘자격이 없는데 국가의 혜택을 받는 것’, ‘대중교통의 무임승차’, ‘기회가 된다면 탈세하는 것’, ‘주는 돈을 자기가 갖는 것’, ‘주차된 차에 사고로 손상을 입혔을 때 통보하지 않는 것’ 등 5개 문항의 합성척도; 그리고 결사체 활동은 10가지 종류의 자원결사체활동 및 정치활동의 가입수로 측정함. 그리고 종속변수인 경제성장은 1980-1992년 동안의 연평균 개인소득 성장률과 GDP 대비 투자율을 측정함.

11) 사회자본 변수들의 측정은 세계가치조사의 1990-1991 및 1995 조사주기의 설문조사자료를 바탕으로 함.

12) 1990-1997년 사이의 1인당 소득 성장률을 종속변수로 하고, 각 카운티의 1990년의 10,000명 당 다음의 단체 숫자를 독립변수로 함: “Putnam-type”단체(볼링센터, 퍼블릭 골프 코스, 체육오락단체,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및 “Olson-type”단체(노조, 사업단체, 직업단체, 정치단체). 참고로, 미국의 카운티 숫자는 3000개 이상임.

고, 개인의 네트워크의 크기나 다양성이 이러한 경제적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피터슨 외 (Petersen et al. 2000)는 1985년에서 1994년까지 10년간의 미국의 하이테크 중견기업의 충원과정에서 3만 5천명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실증조사를 통해 백인 종업원의 80%가 사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일자리를 찾은 반면 흑인 종업원은 단지 5%가 그러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그라노베테르(Granovetter 1973)의 연구는 ‘약한 유대’ 혹은 연계형 네트워크가 클수록 정보나 지식의 획득, 그리고 이를 통한 직업의 획득에 유리하다는 것을 실증한 바 있고, 버트(Burt 1992)의 연구는 크고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소유자가 승진을 더 빨리 하고 더 좋은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더욱 넓은 사회적 네트워크는 더욱 폭넓은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 후에는 중요한 고객, 다른 거래업자나 동료 혹은 자금조달처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는 분석도 있다(Fafchamps and Minten 2002; Shane and Stuart 2002; R. A. Baron and Markman 2003). 그리고 복스만 외 (Boxman et al. 1991)는 네델란드의 대기업에 종사하는 1,395명의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에서, 경영자들의 소득이 그들의 기업 외부의 네트워크의 크기와 상당히 관련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¹³⁾ 한편, 한국의 노동시장에 대한 김성훈(2003)의 연구에서는 전문직이나 관리직 취업자와 비교할 때 생산직 취업자가 공식 경로 대신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취업하는 정도가 훨씬 높고, 전문직이나 관리직 취업자와 비교할 때 사무직이나 단순 노무직 취업자가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취업하는 정도가 훨씬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2) 정치적 효과

퍼트남(Putnam 1993a)은 1970년부터 도입된 이태리 지방자치제도의 약 20년간의 성과에 대해, 지방정부의 공공업무 수행의 효율성과 지역주민에 대한 반응성을 측정하는 12가지 지표¹⁴⁾를 사용해서 2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증적인 비교분

13) 경영자들의 기업 외부의 네트워크의 크기는 기업 외부의 접촉망과 회원증의 수로 측정했으며, 경영자들의 교육수준과 경력 및 기업 내 지위를 분석에서 통제함.

14) 내각의 안정성, 예산책정의 신속성, 통계·정보 서비스, 개혁 입법 산출, 입법적 개선사항, 주간보호 시설 설치, 보건소 설립, 산업정책 내용, 농업예산 집행능력, 보건서비스 지출, 주택 및 도시 개발, 관

석을 수행했다. 분석결과, 20개 지방정부의 성과는 서로 많은 차이가 났으며, 정부성과를 결정짓는 요인은 정부조직, 정당이나 이념, 지역경제 수준, 사회적 안정성, 정치적 조화 등이 아니라, 시민들 사이의 신뢰성 그리고 강력한 시민참여의 전통 즉 투표 참여율, 신문구독률, 성가대와 문학서클 혹은 축구클럽의 회원수와 같은 사회자본 요소들이었다. 즉 사회자본이 정부성과를 결정짓는 원인변수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의거 퍼트남은 시민들 사이의 신뢰와 교류를 증진시키는 사회적, 정치적 시민참여의 네트워크를 가장 중요한 사회자본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퍼트남의 연구(1993a)에 대한 분석을 통해 Boix and Posner(1995; 1998)는 사회자본(결사체 활동 및 사회적 신뢰)과 정부성과 사이의 4가지 가능한 인과관계를 제시했다. 그들에 의하면 사회자본은 시민들을 ‘세련된 정치 소비자’로 만드는 한편 시민들의 정치적 요구를 표명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높은 교류와 신뢰의 기술들을 행정관료들이 적용함으로써 행정관료들 사이에서 서로 더욱 협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시민들의 개인주의적 성향을 공동체 지향적인 성향으로 만들어 시민적 덕성을 형성하고; 연대적인 민주주의를 만든다. 한편, 미국 주 정부의 효율성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냅(Knack 2002)은 사회적 신뢰도, 자원봉사 비율 및 사회조사 응답률로 측정된 사회자본이 높은 주일수록 정부성과가 유의하게 높은 반면, 결사체활동 및 비공식적 사교활동은 정부성과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그는 ‘사회적 연계’ 보다도 ‘일반화된 호혜성’과 관련된 사회자본이 정부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론짓는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결과는 사회자본의 경제효과에 대한 그의 다른 연구(Knack & Keefer 1997)의 분석결과와도 일치한다. 한편 라 포르타 외(La Porta et al. 1997)는 1990년 세계가치조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들 간의 비교분석(1인당 국민소득을 통제함)을 통해, 높은 사회적 신뢰도(모르는 사람들 사이의 신뢰)는 낮은 정부 부패율, 높은 관료적 자질, 높은 조세순응률 및 높은 법적 효율성과 강한 긍정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3) 사회적 효과

료의 반응성.

콜만(Coleman 1988)은 가족 내 및 가족 밖의 사회자본¹⁵⁾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 즉 다음 세대의 인적자본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 그리고 퍼트남(Putnam 2000: 287-366)은 미국 50개 주를 대상으로 한 비교분석에서 사회자본¹⁶⁾의 수준이 높은 주들에서 어린이들의 행복지수나 학업성취도가 높고; 청소년들의 폭력성향이 낮으며; 범죄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헤이건과 맥카시(Hagan and McCarthy 1977)의 연구는 비행 청소년들은 대체로 주류 사회와의 접촉이 끊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비행 관련 지식이나 기술을 전달하는 사회관계에 연루되어 있다고 분석하고 있고, 이와 유사하게, 콜롬비아의 청소년 비행에 대한 루비오(Rubio 1996; Halpern 2005: 118 참조)의 연구는 ‘왜곡된 사회자본’이 청소년 비행을 재생산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이웃 환경이 범죄나 비행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들도 많이 있다(Wedmore and Freeman 1984; Levine, Miyake and Lee 1989). 한편, 미국 주들에 대한 비교 조사연구를 통해 Berkman and Kawachi(2000)는 신뢰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들이 높은 주들에 비해 자살($r=.82$), 폭행($r=.61$), 강도($r=.54$)나 절도($r=.45$)의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듯이, 1973년에서 1993년까지의 미국 주들의 살인율을 비교 분석한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낮은 사회자본¹⁷⁾을 가진 주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살인율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alea, Karpati and Kennedy 2002).

한편, 한국공공사회학회가 수행한 ‘마을공동체 의식조사’(2013)의 자료를 분석한 김상돈·전계영(2014)의 연구는 SNS(트위터 및 페이스북)를 통한 이웃연결망의 크기는 마을공동체의식에 긍정적인 인과적 영향을 미치고, 또한 마을공동체의식을 매개로 하여 시민덕목¹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다.

15) 가족 내의 사회자본은 부모-자식 간의 관계, 가족 외의 사회자본은 학부모들 간의 관계로 측정함.

16) 사회자본은 단체활동 참여도, 공공업무 참여도(투표 및 공공회의 참여), 자원봉사 활동, 일상적인 사회활동, 사회적 신뢰(일반인에 대한 신뢰)와 관련된 총 14개 지표로 측정함.

17) 사회자본은 사회적 신뢰도와 1인당 자원결사체 가입률로 측정하고, 분석에서 소득과 도시화 수준을 통제함.

18) 마을공동체의식은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좋아한다”, “이곳은 좋은 동네이다”, “나는 내가 사는 곳을 자랑스럽게 말한다” 등 15가지 문항; 시민덕목은 투표, 탈세, 준법정신, 도움활동, 애국심 등 10가지 문항으로 측정함.

4) 개인적(육체적, 정신적) 효과

일찍이 뒤르케임은 자살이 개인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한 사회의 전체 자살률은 비교적 고정적이면서 이는 사회에 따라 다르다고 관찰했다. 그리고 이러한 자살률은 개인이 속한 사회집단의 결속 정도에 반비례한다고 결론짓는다(Durkheim [1897] 1951: 209). 이는 곧 개인의 사회적 네트워크 즉 사회자본의 특성이 개인의 정신적 내지 신체적 안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심리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낮은 육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적은 사회적 네트워크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고 지적해왔다. 상습적으로 질병을 겪는 사람들은 친밀한 친구나 인간관계가 별로 없고, 또한 이러한 사람들은 그들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크기를 불문하고 조력자가 별로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Sarason, Sarason and Pierce 1990). 다른 많은 연구들도 사람들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크기와 질이 그들의 건강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사회적으로 덜 고립되고 사회적 활동에 더욱 활발히 참여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건강하다고 보고한다(Baum et al. 2000; Veenstra 2000).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강한 사회적 유대를 가진 사람들 보다 어떤 이유에서건 일찍 죽을 확률이 매우 높다(Berkman and Glass 2000). 또한 긍정적인 인간관계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장기적인 연구가 있다. 1950년대에, 무작위로 추출한 일군의 하버드 대학생들에게 그들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한 사례가 있다. 35년 후 그들의 의료기록을 점검한 결과, 그들 부모와의 관계가 친밀하고 정다웠다고 평가한 사람들은 절반 미만(47%)이 중년기에 중병 진단을 받았고, 그들 부모와의 관계가 소원하고 냉랭했다는 사람들은 모두(100%)가 중년기에 중병 진단을 받았다(Russek and Schwartz 1997). 손정락(2005)에 따르면, 플라시보(placebo) 효과란 마음이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고 기대하면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병에서 회복하고 건강해지는 데는 긍정적 기대 즉 신뢰(자신에 대한 신뢰, 의사에 대한 신뢰, 치료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한편, 행복도나 삶의 만족도 역시 개인의 가족관계나 사회관계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 도노반과 할펀(Donovan and Halpern 2003)의 연구에서는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보다는 혼자 사는 사람이, 그리고 이혼한 사람이 더욱 불행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교회에 나가거나 자원결사체의 회원이 되는 것과 같은 사회적 연계가 개인의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Argyle 1987). 브라운과 해리스(Brown and Harris 1978)는 런던 거주 여성을 표본으로 이들의 생활환경 및 우울증 정도에 대한 상세한 면접방법의 조사연구를 시행했다. 연구결과, 친밀하고 신뢰적인 인간관계가 우울증의 개연성을 크게 낮추며, 생활상의 큰 사건이 일어난 해에는 신뢰할 수 있는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없는 여자가 반대의 경우 보다 4배나 더(10% 대 41%) 우울증이 진행되었다고 보고한다. 마케팅 교과목 수강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한 윤성준(2013)의 조사연구에서는, 결속형 사회자본은 심리적 웰빙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연계형 사회자본은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⁹⁾ 한편,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2009)의 자료를 분석한 이민아(2013)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네트워크와 우울증 간에는 U자형의 비선형 관계가 존재하여 사회적 네트워크의 크기가 클수록 우울증이 감소하지만 과도한 크기의 사회적 네트워크(50명 이상)는 다시 우울증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비선형 관계는 주로 일반신뢰의 수준이 낮은 응답자에게서 나타났고 일반신뢰의 수준이 높은 응답자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다.²⁰⁾

종합적으로, 퍼트남(Putnam 2000: 326-335)에 따르면 사회적 네트워크는 우리의 건강이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의 하나로서, 첫째로, 사회적 네트워크는 필요시에 병의 간호, 환자 수송과 같은 가시적 도움을 제공하고, 신체적·심리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안전망을 마련해주며; 둘째로, 사회적 네트워크는 건강에 필요한 규범을 지키도록 도움을 줄 수 있고; 마지막으로, 가장 흥미 있는 사실은 사회적 유대

19) 결속형 사회자본은 “나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거라고 신뢰할 수 있는 약간의 사람들이 있다.” “내가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 등 8개 문항; 연계형 사회자본은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 나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한다.”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 새로운 대화상대를 찾게 해준다.” 등 8개 문항; 심리적 웰빙은 “내 삶의 상황은 훌륭하다.”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등 5개 문항으로 측정함.

20) 우울증은 “귀하는 지난 2주 동안 다음의 증상들 때문에 얼마나 자주 시달렸습니까?”라는 질문 하에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흥미나 재미가 거의 없음’, ‘가라앉는 느낌, 우울감 또는 절망감’ 등 9개 항목에 대해 측정하고, 사회적 네트워크의 크기는 ‘0명’, ‘1-4명’... ‘100명 이상’ 등으로 범주화하여 측정하고, 신뢰는 “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일반신뢰에 관한 문항으로 측정함.

관계는 질병과 싸우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인간의 면역체계를 향상시키는 생리학적 촉매장치로 기여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리자 버크만(Lisa Berkman, Putnam 2000: 327 참조)의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면역력을 감퇴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키며, 사회적 고립은 만성적 스트레스 상황과 유사하다.

5) 사회자본의 부정적 효과

사회자본은 긍정적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개인이나 집단에 바람직한 결과를 초래하는 동일한 메카니즘을 통해 사회자본은 또한 동시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필드(Field 2008: 79-100)는 사회자본이 불평등을 강화하고 반사회적인 행태를 조장하는 두 가지 측면의 부정적 효과가 있다고 본다. 불평등과 관련해서, 사실상 물질적·재정적 자본도 불평등하게 소유되어 있으며 자본가에게는 더욱 큰 혜택을 주는 반면 노동자에게는 그렇지 못하듯이, 사회자본 역시 이러한 불평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사회자본이 불평등을 조장하는 측면은 주로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데에 기인한다. 사람들의 네트워크는 질적, 양적으로 차이가 난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유대관계를 활용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의 유대관계는 다른 사람 보다 더욱 유용하고 풍부하다. 통상 더 나은 경제적, 문화적 자본을 소유한 사람이 더 나은 유대관계 즉 사회자본을 소유한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적인 유대관계의 활용은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증대시킨다. 나아가 부모의 사회자본은 자식에게 전해지고, 이는 세대를 걸쳐 불평등을 지속시킨다. 또한, 사회자본은 반사회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사회적 네트워크에는 네트워크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더 넓은 사회에도 유용한 효과를 가져오는 생산적인 네트워크도 있는 반면, 구성원들에게는 혜택을 가져오지만 더 넓은 사회에는 해를 끼치는 왜곡된 네트워크도 있다. 특히 외부의 접근이 제한된 강한 결속형 네트워크는 더 넓은 사회에는 분열과 손실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밴필드(Banfield 1958)가 지적한 ‘비도적적 가족주의’가 그 전형이다. 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크의 또 다른 예로서는 마피아나 젊은 갱들의 집단이 있다. 한편, 다원민주주의에

서는 다양한 자원결사체가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모든 자원결사체가 사회적 차원에서 신뢰를 조장하고 관용성과 호혜성을 증진시키는 것은 아니다. 자원결사체들 중에는 자신들의 이해를 추구하기 위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인 편협한 이익단체도 있다. 그리고 기업인들끼리 신뢰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가 카르텔을 형성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회자본은 혁신이 아니라 비효율성을 낳는다. 유사한 결과가 정치영역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정치적 네트워크는 유력자의 이익을 위해 활용될 수 있고 파당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사회자본의 이러한 왜곡된 결과는 특히 결속형 네트워크나 특수신뢰와 관련성이 많지만, 다른 한편 결속형 네트워크나 특수신뢰는 자녀의 교육적 성취를 증진시키고, 일자리 찾기의 비용을 감소하고, 사업상의 거래에서 부정의 위험을 감소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포르테스(Portes 1998: 15-18)에 의하면 사회자본은 최소한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부정적 효과를 나타낸다: 외부인에 대한 배타성, 구성원에 대한 지나친 요구, 개인 자유의 제한, 그리고 하향 평준화하는 규범. 우선, 외부인에 대한 배타성의 문제에 있어서, 구성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강한 유대관계 혹은 폐쇄적 네트워크는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한다. 그리고 나아가 배타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더 넓은 사회에는 분열이나 손실을 초래한다. 이는 소위 '파벌의 해악'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네트워크의 외부적 폐쇄성과 배타성에 수반하여 네트워크 내부적으로는 구성원들 사이의 밀접한 인간관계를 통해 다른 구성원이 가진 자원에 대한 무임승차 문제를 일으킨다. 셋째로, 공동체나 집단에 참여하는 것은 반드시 그들의 규범에 따를 것을 요구한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사회통제의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은 감소하게 된다. 이는 소위 '강제할 수 있는 연대'의 부정적 효과이다. 끝으로, 집단의 응집력이 강할수록 개인 구성원의 돌출적인 행동이나 성공은 억압된다. 즉 개인의 성공 신화는 집단의 응집력을 잠식하기 때문에, 집단의 응집력은 개인의 성공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합의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집단규범은 구성원들을 하향 평준화한다.

이렇게 볼 때, 사회자본의 부정적 효과는 주로 결속형 네트워크와 관련된다. 다만 퍼트남이 지적하는 바처럼 현실상 결속형과 연계형 네트워크의 차이는 상대적일 뿐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또한 퍼트남(Putnam 2000: 362-363)에 따르면, 앞에서도 언

급했듯이, 결속형과 연계형 사회자본은 효과를 발휘하는 분야가 다르며, 집단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자본은 그 집단이 직면하는 문제의 성격에 달려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보아 결속형과 연계형 사회자본은 다양한 수준에서 서로 보완적이다. 수많은 사회집단들은 각각이 위치한 사회적 차원에서 자신의 구성원들을 결속시키는 동시에 다른 집단의 구성원들과 서로 연계되기 때문이다.



III. 조사연구방법

1. 조사연구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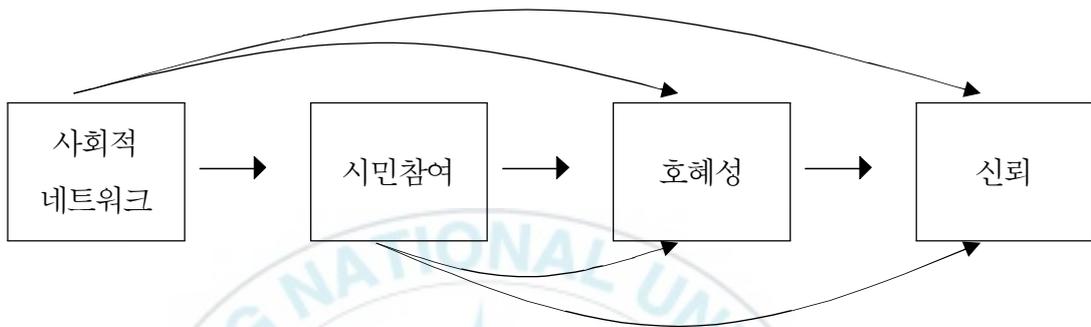
위 제II장에서는 기존연구들을 통해 사회자본의 개념, 사회자본 구성요소,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 사회자본의 기능적 효과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 사회자본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시행하고자 한다. 실증분석에서는, 부산시를 모집단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부산시민의 사회자본 현황과 그 현황의 사회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는 한편, 나아가 사회자본 구성요소들 사이의 관계 및 사회자본의 효과(특히 개인적 효과)를 분석한다.

우선, 사회자본 현황은 사회자본 구성요소인 사회적 네트워크, 시민참여(자원결사체와 정치참여), 신뢰 및 호혜성(특히 일반화된 호혜성)의 현황을 분석하고, 나아가 이러한 현황이 사회경제적 집단들 사이에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고찰해본다.

다음으로, 사회적 네트워크, 시민참여(자원결사체 및 정치참여), 신뢰, 그리고 호혜성(일반화된 호혜성)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다.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회자본론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회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시민참여, 호혜성, 신뢰 등 여타 사회자본 구성요소들을 조장하고[앞의 II-1-5) ‘종합적 논의’ 참조], 또한 시민참여는 호혜성이나 신뢰를 조장하는 것으로 간주한다[앞의 II-2-2) ‘시민참여 네트워크’ 참조]. 한편, 호혜성의 규범과 신뢰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호혜성 즉 교환을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본원리로 간주하고 지속적인 호혜적 교환이 신뢰를 조장하는 것으로 가정한다[앞의 II-2-3)-(3) ‘기능’ 참조]. 이러한 가정들을 근거로 본 조사연구에서는 이들 사회자본 구성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인과관계로 설정하고, 각 원

인변수가 결과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인과관계의 분석모형은 아래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 사회자본 구성요소들의 인과관계 분석모형



끝으로, 사회자본의 효과는 특히 개인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선행 실증연구들은 사회자본이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개인에 대해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를 초래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만 본 조사연구에서는 1회의 설문조사의 한계로 인해 오직 개인의 육체적 건강과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만을 분석한다.

2. 측정방법

여기에서는 사회적 네트워크, 시민참여 네트워크로서의 자원결사체와 정치참여, 호혜성, 그리고 신뢰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지표, 측정변수(문항), 측정척도 등을 소개하며, 이를 요약해 말미의 <표 2>에 정리해둔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들 사회자본 구성요소들은 각각 다양한 종류를 그 외연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적 네트워크에는 ‘강한 네트워크’와 ‘약한 네트워크’가 있고, 자원결사체에는 ‘표출적 결사체’나 ‘도구적 결사체’가 있으며, 신뢰는 ‘대인신뢰’와 ‘제도신뢰’로 대별된다. 사회자본 구성요소들의 이러한 상이한 형태나 유형에 따라 경험적으로 그 현황이나 효과는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연구관심에 따라 어떤 사회자본 구성요소의 일부 형

태나 유형에 한정해서 측정할 수도 있겠으나, 이 경우에는 그 사회자본 구성요소의 전체적인 실상은 간과하게 된다. 전체적인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본 조사연구에서는 가능한 한 각 사회자본 구성요소의 모든 형태나 유형들을 망라하여 측정하고자 하며, 아래에서는 그 방법도 아울러 소개한다.

1)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적 네트워크는 개인들이 형성하고 있는 유대관계의 강도와 크기 즉 개인중심 네트워크(egocentric network)의 강도와 크기의 2가지 지표를 통해 측정한다. 개인 중심 네트워크의 강도는 '강한 네트워크'와 '약한 네트워크'로 구분하고, 그 크기는 개인들이 형성하고 있는 네트워크의 크기를 범주화하여 측정한다.

강한 네트워크는 '귀하는 잘 알고 지내는 친구나 동료(직장이나 모임 등의 동료)가 얼마나 있습니까?' 및 '귀하는 거주지 주변에서 잘 알고 지내는 이웃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의 2개 문항에 대해, 그 크기는 ① 없음, ② 1-2명, ③ 3-5명, ④ 6-10명, ⑤ 11-20명, ⑥ 20명 이상 등 6가지 범주로 서열화하여 측정한다.

약한 네트워크는 '귀하는 수첩이나 휴대폰 등에 기록하여 보관중인 사람들의 전화번호가 몇 개 정도 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그 크기는 ① 20개 미만, ② 21-50개, ③ 51-100개, ④ 101-200개, ⑤ 201-400개, ⑥ 400개 이상 등 6가지 범주로 서열화하여 측정한다. 이 문항은 사실상 유대의 강약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유대관계의 사람들의 수를 포괄하여 묻고 있다. 다만 여기에는 약한 유대관계의 사람들이 포함되므로, 강한 유대관계의 크기를 묻는 위의 문항들과는 차별된다.

2) 시민참여

(1) 자원결사체참여

사회참여의 지표인 자원결사체참여를 측정하기 위해, 측정대상 자원결사체의 종류는 2005-2006 세계가치조사의 문항들을 기초로 하고, 한국의 현실을 감안해 연고단체들을 추가해서 다음의 15가지를 선정했다: 종교단체, 스포츠·취미·친목단체, 예술·

문화단체, 교육·학부모단체, 아파트나 지역의 주민단체, 시민운동단체, 인권·자선단체, 노조, 직업단체, 정당,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사이버단체(카페, 블로그, SNS 등), 기타 단체. 그리고 이에 대한 측정은 2005-2006주기 세계가치조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참여의 강도를 반영하기 위해 ‘①참여 없음’, ‘②소극적 참여(이름만 올려둠)’, ‘③적극적 참여(실제로 활동함)’의 리커트 형 3점 척도를 구성했다.

(2) 정치참여

정치참여의 측정을 위해서는, 정치참여를 우선 관습적 정치참여와 비관습적 정치참여 영역으로 대별한 뒤, 이들 각 영역을 대표하는 참여유형 및 참여형태들을 측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관습적 정치참여는 버바와 나이(Verba & Nie 1972, 46-47) 및 달톤(Dalton 2008, 32-53)을 참고해서 투표참여, 선거활동, 공공활동, 사적 접촉 및 사이버 정치참여의 5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이들 5개 유형을 대표하는 참여형태를 측정변수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투표참여는 그 참여대상을 중앙선거(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시장·구청장·시의원·구의원선거)로 대별하여, 이에 대해 ‘①매번 투표한다’, ‘②대부분 투표한다’, ‘③가끔 투표한다’, ‘④전혀 투표하지 않는다’의 리커트 형 4점 척도로 측정한다. 그리고 선거활동은 ‘공직선거에서 타인에게 투표권유’, ‘공직선거에서 정당이나 후보를 위한 활동’, ‘공직선거와 관련된 집회나 단체 참여’, ‘정치헌금 기부’ 등 4개 활동; 공공활동은 ‘국가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활동’, ‘국가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공직자나 공공기관 접촉(방문, 편지 등)’, ‘정치나 시사 관련 토론회나 설명회 참석’, ‘공공기관 주최의 공청회나 위원회 참석’ 등 4개 활동; 사적 접촉은 ‘개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공직자나 공공기관 접촉(방문, 편지 등)’의 1개 활동; 사이버 정치참여는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정치참여나 선거운동’의 1개 활동을 선정해서, 그 활동 정도에 대해 각각 ‘①전혀 없다’, ‘②몇 번 있다’, ‘③많이 있다’의 3점 척도로 측정한다.

한편, 비관습적 정치참여란 통상 정치항의(political protest)를 말한다. 이 영역의 참여활동은 반즈·카아즈 외(Barnes, Kaase et al. 1979: 57-81)의 연구를 참고해서

‘탄원이나 진정서 서명’, ‘공과금 납부 거부’, ‘불매운동’, ‘집회나 시위’, ‘파업이나 태업’, ‘교통방해’, ‘건물점거나 농성’ 등 7가지 활동을 선정했다. 그런데 정치항의는 일상적인 정치상황에서 그리 흔한 현상은 아니다. 따라서 많은 조사연구(Barnes, Kaase et al. 1979; World Values Survey; 박종민 1995; 류태건 2013)에서는 정치항의의 경험과 아울러 그 의향 즉 항의 잠재성(protest potential)을 함께 측정해왔다. 본 연구에서도 이를 감안해 정치항의에 대해서는 ‘①참여할 의향이 없다’, ‘②참여할 의향이 있다’, ‘③참여한 경험이 있다’의 응답지로 정치항의의 경험 및 의향을 측정한다.

3) 호혜성

호혜성은 ‘일반화된 호혜성’을 측정한다. 일반화된 호혜성은 일종의 만능 도덕적 접착제로서 사회적 협력과 유대를 강화하고 그 결과 사회적 안정과 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초래하는 사회자본으로 강조되고 있다. 위에 소개한 살린스(Sahlins)에 따르면 일반화된 호혜성의 지표는 “공유”, “친절”, “공짜 선물”, “도움”, “관용”, “노블레스 오블리즈” 등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즈는 오히려 일반화된 호혜성 보다 광범위한 개념이지만 그 핵심은 투철한 도덕의식과 공공정신이라 할 수 있다. 본 조사연구에서는 일반화된 호혜성의 지표로서 도움활동, 관용성, 도덕의식 및 공공정신을 측정하기로 하며, 측정문항은 2005-2006 세계가치조사의 문항(V198-V201), 김태준 등(2009)의 설문조사 문항(A12 (4)-(10)), 그리고 오닉스와 불렌(Onyx & Bullen 2000)의 설문항 등을 참조하여 재구성했다.

구체적으로, 도덕의식의 측정은 ‘자격이 없는데 국가의 혜택을 받는 것’, ‘대중교통의 무임승차’, ‘기회가 된다면 탈세하는 것’, ‘주은 돈을 자기가 갖는 것’ 및 ‘뇌물을 주거나 받는 것’의 5개 문항에 대해 각각 리커트 형 10점 척도로 측정한다. 도움활동은 ‘헌혈한 적이 있다’, ‘공공장소에서 남이 버린 쓰레기를 주은 적이 있다’, ‘불우이웃 돕기를 한 적이 있다’ 및 ‘자원봉사 활동을 한 적이 있다’의 4개 문항에 대해 각각 ‘①많이 있다’, ‘②몇 번 있다’, ‘③전혀 없다’의 3점 척도로 측정한다. 관용성에 대해서는 ‘사회는 극단적인 정치적 주장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반대주장에 귀를 기울이

는 것은 시간낭비일 뿐이다’, ‘지지하지 않는 정부가 만든 정책은 꼭 따를 필요가 없다’의 3개 문항; 공공정신에 대해서는 ‘아무도 보지 않으면 법질서를 지킬 필요가 없다’, ‘부정부패를 목격해도 나에게 손해가 안 되면 모른 채 한다’, ‘우리나라에서 법질서를 지치는 사람은 손해를 본다’의 3개 문항을 설정하고 각각 리커트 형 5점 척도로 측정한다.

4) 신뢰

신뢰에 대해서는 각종 신뢰대상에 대한 신뢰의 정도를 측정한다. 측정에 포함할 신뢰대상의 범위는 대인신뢰 영역 및 제도신뢰 영역을 포괄한다. 대인신뢰는 특수신뢰와 일반신뢰의 2개 유형으로 분류되는바, 특수신뢰의 측정대상으로는 가족, 친구, (직장이나 학교 등의) 동료, 이웃 등 4가지; 일반신뢰의 측정대상으로는 처음 만난 사람, 종교가 다른 사람,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 출신 지역이 다른 사람, 다른 나라 사람 등 5가지를 선정했다. 한편, 제도신뢰는 정치공동체신뢰, 체제신뢰, 절차(혹은 규범)신뢰 및 집단(혹은 기관)신뢰의 4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정치공동체신뢰의 대상은 국가공동체(한국)와 지역공동체(부산) 2가지; 체제신뢰의 대상은 민주주의체제 1가지; 절차신뢰의 대상은 공직선거 4가지(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단체장선거, 지방의원선거); 그리고 집단 혹은 기관신뢰의 대상은 중앙공공기관 7가지(청와대, 중앙행정부처, 국회, 법원, 경찰서, 군대, 정당), 지역공공기관 6가지(시청, 시의회, 구청, 구의회, 교육청, 동주민센터), 교육기관 2가지(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및 사회집단 4가지(언론기관, 노동조합, 시민단체, 대기업)를 선정했다. 이리하여 2개 영역, 6개 유형의 35개 신뢰대상이 조사에 포함된다.

35개 신뢰대상에 대한 응답자의 신뢰수준은 다음의 2가지 방법으로 측정한다. 첫째, 신뢰대상의 어떤 구체적인 특성이 아니라 모든 특성들을 아울러 신뢰대상에 대해 형성하는 포괄적인 신뢰수준을 측정하고자 한다. 즉, 신뢰대상의 일반적인 역할이나 정체성에 대해 신뢰주체가 나름대로의 주관적 기준에 의해 판단하는 신뢰수준 그 자체를 측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러한 측정을 위한 설문은 ‘(어떤 신뢰대상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라는 직접적이고 포괄적인 표현을 쓰기로 한다. 둘째, 이러한 표현으

로 설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작적인 표현을 쓰기로 한다. 이 경우에 해당되는 신뢰대상은 국가공동체, 지역공동체, 민주주의체제, 선거 등 4가지이다. 예를 들어, ‘가족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혹은 ‘국회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라는 물음은 그리 애매하지 않지만, ‘한국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혹은 ‘민주주의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라는 설문은 너무 막연하기 때문이다.

한편, 국가공동체 및 지역공동체에 대해서는 각각 3개의 문항으로 측정하는바, 따라서 측정에 포함된 신뢰대상은 35개이나 측정문항은 39개가 된다. 그리고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신뢰대상의 명칭을 그대로 변수명으로 사용한다. 35개 신뢰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국가공동체(국가와 국민) 및 지역공동체(지역과 주민)

국가공동체나 지역공동체란 정치적 혹은 행정적으로 획정된 구역과 이에 속한 사람들을 말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들은 제도신뢰의 대상이다. 이러한 국가 및 지역공동체에 대한 신뢰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의 3가지 종류의 설문을 설정했으며, 응답지는 모두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했다.

- “대체적으로 보아 한국(혹은 부산)은 태어나서 살아갈 만한 나라(지역)라고 생각한다.”
- “나는 한국(혹은 부산)이 자랑스럽다.”
- “대체적으로 보아 한국인(혹은 부산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② 민주주의체제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신뢰의 측정은 “우리나라는 국민이 선거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아 이들에게 국가의 통치를 맡기는 대의민주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의민주주의는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대해,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한다.

③ 선거

선거는 공정성과 대표성을 기본원리로 한다. 이를 감안해 선거에 대한 신뢰의 측정
은 “선거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대표자를 뽑는 일이라고 합니다. 아래 우리나라
라의 각종 공직선거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대표자를 뽑고 있다고 믿으십니
까?”라는 설문 하에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단체장(시장.구청장)선거 및 지방의
원(시.구의원)선거를 제시하고, 모두 리커트 형 4점 척도로 측정한다.

④ 기타

대인신뢰 영역의 전체 9가지 대상, 제도신뢰 영역의 7가지 중앙공공기관과 6가지
지역공공기관 및 6가지 사회집단에 대해서는,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혹은 집
단이나 기관)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리커트 형 4점 척도로 측정한다.

<표 2> 사회자본 구성요소들의 유형, 측정변수명 및 척도

구성요소	유형	측정변수명 (개수)	척도	
사회적 네트워크	강한 네트워크	‘친한 친구나 동료 수’, ‘친한 이웃 수’ (2)	6점	
	약한 네트워크	‘전화번호 수’ (1)		
자원 결사 체	표출적 단체	‘스포츠.취미.친목단체’, ‘예술.문화단체’ (2)	3점	
	도구적 단체	‘시민운동단체’, ‘인권.자선단체’, ‘노조’, ‘직업단체’, ‘정당’ (5)		
	도구.표출적 단체	‘종교단체’, ‘교육.학부모단체’, ‘지역 주민단체’ (3)		
	연고단체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3)		
	기타	‘사이버단체’, ‘기타 단체’ (2)		
시민 참여	정치 참여	투표참여	‘중앙선거 투표’, ‘지방선거 투표’ (2)	4점
		선거활동	‘투표권유’, ‘선거돕기 활동’, ‘선거집회 참여’, ‘정치헌금’ (4)	
		공공활동	‘공적 단체활동’, ‘공적 접촉’, ‘정치토론회 참여’, ‘공청회 참 여’ (4)	
	정치 참여	사적 접촉	‘사적 접촉’ (1)	3점
		사이버 선거활동	‘사이버 정치.선거활동’ (1)	
		정치향의	‘진정서 서명’, ‘공과금 납부 거부’, ‘불매운동’, ‘집회.시위’, ‘파업.태업’, ‘교통방해’, ‘점거.농성’ (7)	
일반화된 호혜성	도덕의식	‘무자격 국가혜택’, ‘무임승차’, ‘탈세’, ‘주은 돈 갖기’, ‘뇌물 수수’ (5)	10점	
	도움활동	‘헌혈’, ‘쓰레기 줍기’, ‘불우이웃 돕기’, ‘자원봉사’ (4)	3점	
	관용성	‘극단주의불허’, ‘반대주장불용’, ‘비지지 정부의 정책불수용’ (3)	5점	

		공공정신	‘안 볼 때 법질서 무시’, ‘무관한 부정부패 무시’, ‘법질서 지키면 손해’ (3)	5점	
신뢰	대인 신뢰	특수신뢰	‘가족’, ‘친구’, ‘동료’, ‘이웃’ (4)	4점	
		일반신뢰	‘초면인’, ‘타종교인’, ‘타정견인’, ‘타지인’, ‘타국인’ (5)		
	제도 신뢰	정치공동체 신뢰	‘국가공동체’(한국), ‘지역공동체’(부산) (2)	5점	
		체제신뢰	‘민주주의’ (1)	4점	
		집단(기관) 신뢰	중앙공공기관신뢰		‘청와대’, ‘중앙행정부처’, ‘국회’, ‘법원’, ‘경찰서’, ‘군대’, ‘정당’ (7)
			지역공공기관신뢰		‘시청’, ‘시의회’, ‘구청’, ‘구의회’, ‘교육청’, ‘동주민센터’ (6)
			사회단체신뢰		‘언론기관’, ‘노동조합’, ‘시민단체’, ‘대기업’ (4)
			교육기관신뢰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2)
절차신뢰	선거신뢰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단체장선거’, ‘지방의원선거’ (4)			

3. 자료수집방법

조사대상 지역은 부산광역시를, 표본추출은 비례층화표집법을, 자료수집은 설문지의 배포수거방법을 택했다. 우선, 20세 이상 부산시민을 모집단으로 하여 전체 표본수를 1,240명으로 정하고, 부산시 16개 구·군(15개 구, 1개 군)의 인구비례에 따라 각 구·군별로 1-4개 동씩 모두 31개 동을 무작위로 추출하고 각 동에서 1개 통을 무작위로 추출한 후, 각 통별로 40명씩을 연령별·성별 비례에 따라 표본수를 할당하였다. 이들에 대한 설문조사는 해당 동장의 협조 하에 해당 통장을 만나 조사방법을 교육한 후, 통장들이 성별·연령별 할당비율에 의거 자기 통의 주민을 임의로 선정하여 설문서를 배포한 후 수거하도록 했다. 2013년 6월 5일-7월5일 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수율이 낮거나 할당비율이 왜곡된 지역에 한해 7월 22일-31일 추가조사를 하였다. 이리하여 회수된 전체 설문지 1,235매 중 답변이 부실한 31매를 제외하고 1,204매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확정하였다.

표본의 분포는 남자 48.7%, 여자 51.3%; 20대 19.7%, 30대 20.3%, 40대 20.1%, 50대 21.3%, 60대 이상 18.6%이다. 그리고 16개 구·군별로는 수영구 3.2%, 남구

9.9%, 동구 3.1%, 중구 3.3%, 영도구 3.3%, 서구 3.1%, 사하구 9.6%, 연제구 6.5%, 동래구 6.3%, 금정구 6.6%, 부산진구 9.7%, 사상구 6.2%, 강서구 3.3%, 북구 9.7%, 해운대구 13.0%, 기장군 3.0%이다.

4. 분석방법

1) 분석방법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조사연구에서는 부산시민의 사회자본 현황과 그 현황의 사회집단 간 차이를 고찰하는 한편, 나아가 사회자본 구성요소들 사이의 관계 및 사회자본 효과(특히 개인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때, 사회자본 현황의 분석은 기술통계, 사회자본 현황의 집단 간 차이의 분석은 분산분석, 그리고 사회자본 구성요소들 사이의 관계 및 사회자본 효과는 회귀분석을 활용하기로 한다.

그런데 본 조사연구에서는 측정대상인 사회자본 구성요소 중 특히 자원결사체참여, 정치참여, 신뢰 및 일반적 호혜성은 다수의 측정변수(문항)들로 측정했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다수의 측정변수들을 요인분석을 통해 유형변수(공통요인)로 축약한 후, 이들 유형변수의 측정값을 기술통계나 분산분석 혹은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관련 측정변수들을 유형변수로 축약하기 위한 요인분석의 절차 및 결과를 소개해둔다. 다만, 서술의 편의를 위해, 사회자본 구성요소들 사이의 관계 및 사회자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회귀분석방법은 해당 부분에서 소개한다.

2) 요인분석

(1) 자원결사체참여

자원결사체참여 관련 15개 측정변수들 중 성격이 불분명한 ‘기타 단체’ 및 ‘사이버 단체’를 제외하고 전체 13개 변수를 투입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한 결과, 4개의

고유값 1.0 이상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아래 <표 3>을 살펴보면, 요인 1에 시민운동 단체, 인권.자선단체, 노조, 직업단체, 정당 등 5개; 요인 2에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등 3개; 요인 3에 종교단체, 교육.학부모단체, 지역 주민단체 등 3개; 요인 4에 스포츠.취미.친목단체, 예술.문화단체 등 2개 변수가 적재되었다. 이를 근거로 13개 자원 결사체들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며, 이들 유형은 그 성분에 비추어 각각 도구적 단체, 연고단체, 도구-표출적 단체 및 표출적 단체로 명명한다.

<표 3> 자원결사체참여 측정변수들의 요인분석 결과

측정변수	성분	1. 도구적 단체	2. 연고 단체	3. 도구.표출 단체	4. 표출적 단체	표준화된 신뢰계수 α
노조		.840	.092	.012	.075	.837
인권자선단체		.761	.140	.276	.164	
시민운동단체		.756	.147	.348	.151	
직업단체		.730	.175	-.166	.156	
정당		.580	.332	.300	-.106	
향우회		.247	.830	.128	.043	.754
종친회		.189	.803	.212	.009	
동창회		.092	.679	-.105	.377	
종교단체		.001	.020	.722	.081	.604
지역주민단체		.175	.283	.696	.151	
교육학부모단체		.266	-.013	.567	.396	
스포츠취미친목단체		.031	.210	.112	.796	
예술문화단체		.226	.014	.265	.747	.622
고유값		2.982	2.110	1.798	1.613	-
설명된 분산(%)		22.941	16.228	13.831	12.411	-

KMO 측도: .840,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5043.385(p=.000)

(2) 정치참여

정치참여 관련 전체 19개 변수를 투입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한 결과, 측정변수 ‘사적 접촉’이 ‘공적 접촉’과 함께 공공활동 요인에 묶였다. 내용상 사적 접촉은 공공 활동과는 이질성이 있어, 이 변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18개 변수를 투입하여 다시 요인분석을 시행한 결과 5개의 고유값 1.0 이상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각각의 요인을 살펴보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인 1에 4개, 요인 2에 5개, 요인 3에 5개, 요인 4에 3개, 요인 5에 2개 변수가 적재되었으며, 특히 변수 ‘사이버

정치.선거활동’(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정치참여나 선거운동)은 ‘선거활동’ 요인에 적재되었다. 이를 근거로 18개 정치참여 형태들을 5가지 유형변수로 축약하고, 각각 그 성분에 따라 공공활동, 과격항의, 선거활동, 온건항의 및 투표활동이라고 명명하며, 이들을 추후 분석대상으로 한다.

<표 4> 정치참여 측정변수들의 요인분석 결과

성분 측정변수	1. 공공활동	2. 과격항의	3. 선거활동	4. 온건항의	5. 투표참여	신뢰계수 α
공청회참여	.837	.023	.182	.063	.072	.843
정치토론회참여	.776	.110	.245	.056	.030	
공적접촉	.756	-.019	.288	.070	.082	
공적단체활동	.708	.076	.342	.132	.071	
점거농성	.086	.864	.048	.039	.032	.807
교통방해	.073	.862	.088	.069	-.001	
파업태업	-.049	.725	.128	.341	-.035	
공과금납부거부	.106	.536	-.016	.428	-.112	
선거돕기활동	.249	.063	.825	.030	.018	.772
선거집회참여	.313	.048	.776	.011	.042	
투표권유	.131	-.076	.630	.266	.225	
사이버.선거활동	.237	.226	.533	.079	-.076	
정치헌금	.378	.139	.507	-.018	.055	.718
불매운동	-.001	.249	.101	.802	.055	
진정서서명	.176	.058	.037	.768	.039	
집회시위	.046	.494	.194	.591	.034	
지방선거투표	.112	-.026	.061	-.001	.931	.879
중앙선거투표	.072	-.010	.074	.071	.930	
고유값	2.827	2.713	2.599	2.002	1.832	-
설명된 분산(%)	15.704	15.072	14.438	11.123	10.179	-

KMO 측도: .838,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8642.707(p=.000)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3) 일반화된 호혜성

일반화된 호혜성 관련 전체 15개 측정변수를 투입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헌혈’은 공통성이 낮아 일단 제외했다. 나머지 14개 변수를 투입하여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고유값 1.0 이상의 5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아래 <표 5>에서 보듯이 ‘도덕의식’ 요인에 5개, ‘도움활동’ 요인에 3개, ‘관용성’ 요인에 2개, ‘공공정신’ 요인에 3개 변수가 적재되었다. 그런데 측정변수 ‘극단주의 불허’는 조사설계

시에 관용성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으로 도입했으나, 요인분석결과 별개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서술의 편의를 위해 아래의 조사결과분석에서는 이를 제외하기로 한다. 그리고 나머지 4개의 요인에 각각 적재된 13개 변수들을 묶어 4가지 일반화된 호혜성 유형변수(도덕의식, 도움활동, 관용성, 공공정신)를 생성하고, 이를 분석한다.

<표 5> 일반화된 호혜성 측정변수들의 요인분석 결과

성분 측정변수	1. 도덕 의식	2. 도움 활동	3. 관용성	4. 공공정신	5. 극단주의 불허	신뢰계 수 α
탈세	.817	.025	-.094	-.055	.155	.820
무자격국가혜택	.791	.004	-.094	.100	.044	
너물수수	.790	-.001	-.102	-.111	.135	
무입승차	.776	.007	-.036	.036	-.021	
주은 돈 갖기	.617	-.046	.260	-.219	-.175	
불우이웃돕기	.022	.877	-.036	.028	.044	.754
자원봉사	-.013	.803	-.064	.070	.068	
쓰레기줍기	-.005	.755	.074	.011	-.153	
반대주장 불용	-.066	-.014	.865	.039	.092	.731
비지정정부정책 불수용	-.046	-.031	.804	.176	.130	
무관한 부정부패 무시	-.058	.098	.352	.775	-.154	.645
법질서 지키면 손해	-.025	.013	-.088	.724	.372	
안 볼 때 법질서 무시	-.093	.061	.550	.608	-.287	
극단주의 불허	.129	-.032	.182	.023	.860	-
고유값	3.171	2.323	2.012	1.123	1.003	-
설명된 분산(%)	22.647	16.590	14.372	8.021	7.164	-

KMO 측도: .722,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4698.606(p=.000)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4) 신뢰

신뢰수준을 측정하는 39개의 측정항목들 중 7개 항목은 5점 척도 그리고 나머지 항목들은 4점 척도로 측정하고 있어, 측정척도를 표준화하여 요인분석을 시행했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항목들 중 ‘대기업’과 ‘군대’가 이론상 이질적인 집락에 묶여 이를 제외하고 다시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표 6> 신뢰 측정변수들의 요인분석 결과

성분 측정변수	중앙공 공기관 신뢰	지역공 공기관 신뢰	공동체 신뢰	일반 신뢰	선거 신뢰	사회단 체신뢰	특수 신뢰	교육기 관신뢰	신뢰 계수 α
국회	.763	.232	.151	.065	.214	.212	.038	-.133	.888
중앙행정부처	.761	.266	.129	.143	.148	-.063	.092	.188	
청와대	.713	.257	.156	.035	.194	-.221	.092	.236	
정당	.674	.236	.142	.153	.214	.323	-.007	-.121	
법원	.669	.268	.107	.070	.184	.181	.033	.265	
경찰	.594	.296	.130	.048	.140	.201	.065	.309	
언론기관	.465	.176	.099	.121	.079	.374	-.033	.360	
구청	.232	.806	.119	.127	.123	-.007	.075	.205	.901
부산시청	.342	.749	.182	.106	.121	-.030	.058	.163	
부산교육청	.289	.722	.181	.091	.138	.247	.061	.060	
동주민센터	.093	.719	.134	.051	-.021	-.053	.147	.348	
부산시의회	.375	.698	.171	.080	.244	.239	.063	-.097	
구의회	.278	.692	.149	.099	.218	.323	.073	-.128	
한국자금심	.103	.120	.771	.052	.069	-.005	.037	.093	
한국생활	.097	.120	.707	.040	.084	-.051	.089	.120	
한국인신뢰	.178	.018	.708	.117	.120	.091	.154	-.045	
부산자금심	.063	.167	.796	-.002	.078	.079	.019	-.015	.757
부산생활	.020	.149	.747	-.016	.059	.040	.033	.040	
부산인신뢰	.099	.056	.737	.151	.114	.090	.096	-.010	
타종교인	.060	.075	.043	.843	.073	.025	.100	.091	.885
타정견인	.093	.100	.039	.841	.100	.080	.093	.097	
타지인	.014	.062	.046	.828	.041	.125	.110	.081	
타국인	.043	.045	.046	.825	-.028	.107	.018	-.011	
초면인	.155	.085	.129	.683	.038	.065	.208	-.053	
단체장선거	.120	.178	.123	.039	.880	.153	.051	-.004	
국회의원선거	.234	.074	.100	.088	.848	-.012	.092	.061	
지방의원선거	.105	.197	.110	.043	.830	.255	.008	-.055	
대통령선거	.238	.128	.122	.021	.686	-.270	.099	.206	
민주주의	.191	-.004	.322	.086	.416	-.095	.061	.063	-
노조	.159	.136	.071	.165	.027	.803	.048	.159	.855
시민단체	.116	.110	.056	.202	.018	.782	.082	.193	
친구	.040	.049	.096	.161	.065	.116	.791	-.005	.686
가족	-.041	.085	.047	-.027	.001	-.014	.696	.096	
이웃	.161	.116	.149	.249	.109	-.061	.591	.029	
동료	.070	.042	.137	.399	.100	.128	.569	.029	
초중고	.245	.260	.081	.114	.067	.277	.134	.726	.835
대학	.330	.237	.103	.131	.133	.354	.089	.629	
고유값	4.139	4.035	3.858	3.782	3.313	2.371	2.030	1.741	-
설명된 분산(%)	11.187	10.907	10.428	10.222	8.953	6.408	5.485	4.706	-

KMO 측도: .911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22519.346(p=.000)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위 <표 6>에서 보듯이 나머지 37개 측정항목들은 고유값 1 이상의 8가지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이들 요인을 그 유형(성분)에 따라 중앙공공기관신뢰, 지역공공기관신뢰, 공동체신뢰, 일반신뢰, 선거신뢰, 사회단체신뢰, 특수신뢰, 교육기관신뢰로 명명한다. 다만, 민주주의 항목은 선거신뢰 요인에 묶였으나 성격상 이를 민주주의신뢰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공동체신뢰는 6가지 측정항목들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으나 이를 국가공동체신뢰와 지역공동체신뢰로 구분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따라서 분석대상인 신뢰유형은 사실상 10가지가 된다.



IV. 분석결과

1. 사회자본 현황

우선 여기에서는 각 사회자본 구성요소의 유형별, 종류별 현황을 빈도분석이나 기술통계를 통해 분석·소개한다.

1) 사회적 네트워크 현황

사회적 네트워크는 개인들이 형성하고 있는 네트워크 즉 개인중심 네트워크(egocentric network)의 강도와 크기의 2가지 지표를 설정하여 측정했다. 네트워크의 강도는 '강한 네트워크'와 '약한 네트워크'로 구분하고, 이들 네트워크의 크기는 범주화하여 측정했다.

우선, 강한 네트워크는 '친한 친구나 동료의 수' 및 '친한 이웃 사람의 수'에 대해 각각 ① 없음, ② 1-2명, ③ 3-5명, ④ 6-10명, ⑤ 11-20명, ⑥ 20명 이상 등 6가지 범주로 서열화하여 측정했다. 분석결과, 아래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친한 친구나 동료의 수'가 2명 이하인 응답자가 8%, 20명 이상인 응답자가 39.8%를 차지하는 가운데, 중위수(중앙값)를 기준으로 볼 때 부산시민들의 친한 친구나 동료의 수는 대체로 11-20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고; '친한 이웃 사람의 수'는 2명 이하인 응답자가 20.8%, 20명 이상인 응답자가 24.3%를 차지하는 가운데, 부산시민들의 친한 이웃 사람의 수는 중위수(중앙값)를 기준으로 볼 때 대체로 6-10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강한 네트워크

단위: 명(%)

	없음	1-2명	3-5명	6-10명	11-20명	20명 이상	합계
친한 친구 동료 수	10 (0.8)	87 (7.2)	161 (13.4)	236 (19.7)	229 (19.1)	478 (39.8)	1201 (100)
친한 이웃 수	85 (7.1)	164 (13.7)	292 (24.3)	220 (18.3)	148 (12.3)	292 (24.3)	1201 (100)
합계	47 (3.9)	126 (10.5)	227 (18.9)	228 (19.0)	188 (15.6)	385 (32.1)	1201 (100)

다음으로, 약한 네트워크는 ‘전화번호 보관 수’에 대해, ① 20개 미만, ② 21-50개, ③ 51-100개, ④ 101-200개, ⑤ 201-400개, ⑥ 400개 이상 등 6가지 범주로 서열화 하여 측정했다. 측정결과, 아래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화번호 보관 수’가 20개 미만인 응답자가 7.7%, 400개 이상인 응답자가 8.4%를 차지하는 가운데, 중위수(중앙값)를 기준으로 볼 때 응답자들의 약한 네트워크의 크기(전화번호 보관 수)는 대체로 51-100개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약한 네트워크

단위: 명(%)

	20개 미만	21-50개	51-100개	101-200개	201-400개	400개 이상	합계
전화번호 보관 수	92 (7.7)	225 (18.8)	296 (24.7)	274 (22.9)	211 (17.6)	101 (8.4)	1199 (100)

2) 시민참여 현황

(1) 자원결사체 참여

자원결사체 참여의 유형별 및 종류별 측정결과를 아래 <표 9>에 소개해 두고, 여기에서는 ‘적극적 참여(실제로 활동함)’만을 참여자로 간주해 그 현황을 살펴본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도 단체에 가입만 하고 활동하지 않는 상태는 참여로 간주하지 않는다.²¹⁾ 말하자면 동창회(명부)에는 졸업만 하면 저절로 가입되기 때문이다.

21)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12: 496. (www.kosis.kr)

우선 조사대상인 13개 종류의 자원결사체에 대해 그 참여율이 높은 순으로 정렬해 보면, 취미친목단체(28.5%)-동창회(19.6%)-종교단체(15.7%)-지역주민단체(13.4%)-종친회(9.6%)-교육학부모단체(9.4%)-향우회(9.2%)-예술문화단체(8.8%)-직업단체(8.3%)-인권자선단체(5.0%)-시민운동단체(4.6%)-노조(3.9%)-정당(3.3%)의 순이다. 이러한 참여율을 자원결사체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표출적 단체 참여율(18.6%)이 가장 높고 도구적 단체 참여율(5.0%)이 가장 낮은 가운데, 도구·표출적 단체(12.8%) 및 연고 단체(12.8%) 참여율이 유사하게 그 중간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모든 자원결사체의 평균 참여율은 12.3%로서, 부산시민의 자원결사체 참여율은 낮은 편이다. 각종 자원결사체들의 구체적인 기능은 서로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보아 자원결사체들은 내부적으로 회원들 간에 협동의 습관과 시민적 품성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시민들의 집단적 판단과 여론형성에 기여하며, 외부적으로는 이익표출과 이익집약을 향상시켜 민주적 정부의 효율성에 공헌한다고 볼 때, 좀 더 다양하고 활발한 자원결사체 활동이 요청된다.

<표 9> 자원결사체 참여율

단위: 명(%)

유형	종류	참여 없음	소극적 참여 (이름만 등재)	적극적 참여 (실제로 활동함)	합계
표출적 단체	취미친목단체	315(26.4)	537(45.1)	339(28.5)	1191(100)
	예술문화단체	621(52.3)	462(38.9)	104(8.8)	1187(100)
	합계	468(39.4)	500(42.0)	222(18.6)	1189(100)
도구· 표출적 단체	종교단체	511(42.7)	497(41.6)	188(15.7)	1196(100)
	교육학부모단체	707(59.9)	363(30.7)	111(9.4)	1181(100)
	지역주민단체	657(55.1)	375(31.5)	160(13.4)	1192(100)
	합계	625(52.6)	412(34.6)	153(12.8)	1190(100)
도구적 단체	시민운동단체	922(77.7)	210(17.7)	55(4.6)	1187(100)
	인권자선단체	906(76.1)	225(18.9)	59(5.0)	1190(100)
	노조	967(81.8)	169(14.3)	46(3.9)	1182(100)
	직업단체	789(66.7)	296(25.0)	98(8.3)	1183(100)
	정당	973(83.2)	157(13.4)	39(3.3)	1169(100)
	합계	911(77.1)	211(17.9)	59(5.0)	1182(100)
연고 단체	동창회	464(39.1)	489(41.2)	233(19.6)	1186(100)
	향우회	799(67.3)	280(23.6)	109(9.2)	1188(100)
	종친회	765(64.8)	303(25.7)	113(9.6)	1181(100)
	합계	676(57.1)	357(30.1)	152(12.8)	1185(100)
총계		670(56.5)	370(31.2)	147(12.3)	1186(100)

(2) 정치참여

정치참여 중 ‘비관습적 정치참여’ 유형인 정치향의는 ‘관습적 정치참여’ 유형들과는 달리 참여의 경험(행위)뿐만 아니라 의향(태도)을 측정하 까닭에, 정치참여는 관습적 정치참여와 비관습적 정치참여(정치향의)로 나누어서 분석, 소개한다.

가. 관습적 정치참여

관습적 정치참여의 유형들에는 투표참여, 선거활동 및 공공활동이 포함된다. 투표참여는 ‘① 매번 투표한다’, ‘① 대부분 투표한다’, ‘② 가끔 투표한다’, ‘③ 전혀 투표하지 않는다’²²⁾의 리커트 형 4점 척도, 그리고 선거활동과 공공활동은 그 활동경험에 대해 ‘① 전혀 없다’, ‘① 몇 번 있다’, ‘② 많이 있다’의 3점 척도로 측정했다. 측정결과를 개괄적으로 소개하고자 기술통계를 통해 측정치의 평균값을 소개한다.

<표 10> 관습적 정치참여 수준

유형	종류	평균	백분위 평균	척도범위
투표 참여	중앙선거투표	2.39	79.67	0-3
	지방선거투표	2.21	73.67	
	합계	2.30	76.67	
선거 활동	투표권유	.51	25.5	0-2
	선거доб기활동	.21	10.5	
	선거집회참여	.21	10.5	
	정치헌금	.15	7.5	
	사이버정치.선거활동	.14	7.0	
	합계	.24	12.0	
공공 활동	공적단체활동	.23	11.5	0-2
	공적접촉	.19	9.5	
	정치토론회참여	.16	8.0	
	공청회참여	.19	9.5	
	합계	.19	9.5	

위 <표 10>에 의거 백분위 평균값을 살펴보면, 투표참여의 평균값은 76.67점으로 투표참여의 수준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활동의 평균값은 12점으로 낮은

22) 응답지 앞의 숫자는 분석 시의 코딩 점수로서 설문지의 응답번호와는 다름. 이하 같음.

편이며, 여기에서 투표권유활동(25.5점)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활동들의 평균값은 8.88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공공활동의 평균값은 9.5점으로 역시 낮다. 즉 관습적 정치참여 활동 중 투표참여의 수준은 높은 편이나, 여타 활동들에 대한 참여수준은 매우 낮다. 정치참여의 기능 역시 각 정치참여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특히 공공활동은 민주적 시민의 덕성을 함양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는 까닭에 그 활동이 제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비관습적 정치참여: 정치향의

정치향의에 대해서는 ‘① 참여할 의향이 없다’, ‘② 참여할 의향이 있다’, ‘③ 참여한 경험이 있다’의 응답지로 정치향의의 경험과 함께 의향을 측정했기에, 평균값을 소개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도수분포를 소개한다. 아래 <표 11>에 의거 정치향의의 경험만을 살펴보면, 온건향의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9.0%, 과격향의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2.3%로서 매우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정치향의 참여경험자의 비율은 다른 나라의 경우도 매우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표 11> 정치향의 참여율

단위: 명(%)

구분		의향 없다	의향 있다	경험 있다	합계
온건향의	진정서서명	496(41.4)	501(41.9)	200(16.7)	1197(100)
	불매운동	633(52.9)	495(41.4)	68(5.7)	1196(100)
	집회시위	854(71.4)	286(23.9)	56(4.7)	1196(100)
	합계	661(55.2)	427(35.7)	108(9.0)	1196(100)
과격향의	공과금거부	900(75.0)	270(22.5)	30(2.5)	1200(100)
	파업태업	993(82.9)	177(14.8)	28(2.3)	1198(100)
	교통방해	1068(89.2)	104(8.7)	25(2.1)	1197(100)
	점거농성	1088(90.7)	83(6.9)	28(2.3)	1199(100)
	합계	1012(84.5)	159(13.2)	27(2.3)	1198(100)

3) 일반화된 호혜성 현황

일반화된 호혜성은 도움활동, 도덕의식, 관용성 및 공공정신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도움활동은 리커트 형 3점 척도, 도덕의식은 10점 척도, 그리고 관용성 및 공

공정신은 5점 척도로 측정했다. 측정결과를 개괄적으로 소개하고자 측정치의 평균값을 소개한다.

아래 <표 12>에 의거 백분위 평균값을 살펴보면, 도움활동은 50.5점, 도덕의식은 84.33점, 관용성은 61점, 그리고 공공정신은 65.8점을 기록하고 있다. 즉 도덕의식이 매우 높고, 도움활동, 관용성 및 공공정신의 수준은 보통 정도라 할 수 있다. 일반화된 호혜성은 ‘사람들은 자기를 도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보편적인 행위규범 하에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의무관계로 구조화시켜 기회주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고 집합행동의 딜레마도 해소할 수 있다. 이러한 일반화된 호혜성이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수준이 더욱 높아질 필요가 있다.

<표 12> 일반화된 호혜성 수준

유형	측정변수	평균	백분위 평균	척도 범위
도움 활동	쓰레기줍기	1.10	55.0	0-2
	불우이웃돕기	1.04	52.0	
	자원봉사	.89	44.5	
	합계	1.01	50.5	
도덕 의식	무자격국가혜택	7.71	85.67	0-9
	무임승차	7.33	81.44	
	탈세	8.07	89.67	
	주는 돈 갖기	6.70	74.44	
	뇌물수수	8.13	90.33	
	합계	7.59	84.33	
관용성	반대주장 불용	2.45	61.25	0-4
	비지지정부의 정책 불수용	2.42	60.50	
	합계	2.44	60.88	
공공 정신	안 볼 때 법질서 무시	3.09	77.25	0-4
	무관한 부정부패 무시	2.90	72.50	
	법질서 지키면 손해	1.91	47.75	
	합계	2.63	65.83	

4) 신뢰 현황

아래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뢰 수준은 30가지 종류의 신뢰대상을 10가지 신뢰 유형으로 분류하여 측정했다. 측정대상이 광범위하고 또한 다양한 까닭에, 이해

의 편의를 위해 먼저 신뢰유형별로 측정결과를 소개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신뢰유형별 신뢰수준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비교, 서술하고자 한다.

(1) 대인신뢰

① 특수신뢰

부산시민의 특수신뢰는 가족, 이웃, 친구, (직장이나 학교 등의) 동료 등 4가지 신뢰 대상에 대한 신뢰도의 산술평균을 통해 측정했으며, 평균값은 100점 만점에 71.25점으로 측정대상인 10가지 신뢰유형 중에서 가장 높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89.67)에 대한 신뢰수준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친구(72.0)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으며, 이웃(62.67)이나 동료(60.67)에 대한 신뢰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 즉 사적인 친밀도가 높은 대상일수록 신뢰수준이 높다.

② 일반신뢰

일반신뢰는 5가지 종류의 이질적인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의 산술평균을 통해 측정했으며, 평균값은 44.27점으로서 측정대상 10가지 신뢰유형 중에서 가장 낮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처음 보는 사람(37.33)에 대한 신뢰수준이 가장 낮고, 이어서 다른 나라 사람(42.67),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45.33), 종교를 달리하는 사람(46.33), 출신지역이 다른 사람(49.67)의 순이다.

특수신뢰와 일반신뢰의 수준을 함께 비교해보면, 특수신뢰는 가족(89.67)-친구(72.0)-이웃(62.67)-동료(60.67) 그리고 일반신뢰는 타지인(49.67)-타종교인(46.33)-타정견인(45.33)-타국인(42.67)-초면인(37.33)의 순으로 신뢰수준이 낮아진다. 어쨌든, 부산시민들의 특수신뢰의 평균수준은 71.25점으로 매우 높은 반면 일반신뢰의 평균수준은 44.27점으로 매우 낮다.

(2) 제도신뢰

③ 국가공동체신뢰

국가공동체신뢰는 한국에 대한 자긍심, 한국에서의 삶에 대한 평가, 한국인에 대한 신뢰 등 3가지 문항을 통해 측정했는데, 그 측정치는 각각 72.0, 67.5, 61.0점으로서

평균 66.83점을 기록하고 있다.

④ 지역공동체신뢰

지역공동체신뢰는 부산에 대한 자긍심, 부산에서의 삶에 대한 평가, 부산사람에 대한 신뢰 등 3가지 문항을 통해 측정했는데, 그 측정치는 각각 67.5, 69.25, 62.8점으로서 평균 66.52점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공동체신뢰 수준(66.52)은 국가공동체신뢰 수준(66.83)과 거의 동일하다. 백분위의 중간값 50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국가 및 지역공동체에 대한 부산시민들의 신뢰수준은 어느 정도 높은 편이다.

⑤ 민주주의체제신뢰

민주주의체제신뢰는 대의민주주의제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측정했는데, 부산시민들의 신뢰수준은 63.5점을 기록하고 있다.

⑥ 선거신뢰

선거신뢰는 4가지 종류의 공직선거에 대한 신뢰도의 산술평균을 통해 측정했으며, 그 값은 54.58점으로 중간 정도의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선거(66.33)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고, 국회의원선거(54.67)와 단체장선거(50.33)가 그 뒤를 이으며, 지방의원선거(47.0)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다.

⑦ 중앙공공기관신뢰

중앙공공기관신뢰는 7가지 주요 중앙공공기관들에 대한 신뢰도의 산술평균을 통해 측정했으며, 그 값은 46.95점으로 중간값 보다 약간 낮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당(37.0)과 국회(38.67)에 대한 신뢰수준이 가장 낮으며, 다음으로는 언론기관(46.67), 법원(49.33) 및 중앙행정부처(50.0)에 대한 신뢰수준이 낮다. 그리고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찰(52.0)과 청와대(55.0)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은 편이다. 특기할 점은 정당과 국회에 대한 신뢰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특히 정당에 대한 신뢰도는 분석에 포함된 모든 신뢰대상 중에서 제일 낮은바, 처음 보는 사람(초면인)에 대한 신뢰도(37.33) 보다는도 낮다.

⑧ 지역공공기관신뢰

지역공공기관신뢰는 6가지 주요 지역공공기관들에 대한 신뢰도의 산술평균을 통

해 측정했으며, 그 값은 53.66점으로 중간값 보다 약간 높다. 구체적으로 구의회(46.33) 및 시의회(47.0)에 대한 신뢰수준이 가장 낮고, 다음으로는 부산시교육청(50.0)에 대한 신뢰수준이 낮다. 그러나 시청(57.0)과 구청(57.33) 그리고 동주민센터(64.33)에 대한 신뢰수준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할 점은, 중앙공공기관신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의기구인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수준이 가장 낮다는 것이다. 한편 지역공공기관신뢰도는 중앙공공기관신뢰도 보다는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향은 미국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주민이 중앙공공기관 보다는 지역공공기관을 자주 접촉하여 친밀감이 높은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다(정치적.행정적 거리감 가설. 정광호 2011: 156).

⑨ 교육기관신뢰

교육기관신뢰는 초중고교와 대학교에 대한 신뢰도의 산술평균을 통해 측정했으며, 그 값은 54.84점으로 중간값 보다 약간 높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중고(57.0)에 대한 신뢰수준이 대학(52.67)에 대한 신뢰수준 보다 높다.

⑩ 사회단체신뢰

사회단체는 노조와 시민단체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했다. 시민단체는 사실상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본 조사에서는 포괄적으로 '시민단체'라는 명목으로 측정했다. 노조와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도의 산술평균은 44.66점으로 낮은 편이다. 구체적으로는 노조가 43.33, 시민단체가 46.0점을 기록하고 있다.

이제 신뢰유형별로 신뢰수준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신뢰유형별 백분위 평균값을 통해 살펴보면, 특수신뢰(71.25)-국가공동체신뢰(66.83)-지역공동체신뢰(66.52)-민주주의체제신뢰(63.5)-교육기관신뢰(54.84)-선거신뢰(54.58)-지역공공기관신뢰(53.66)-중앙공공기관신뢰(46.95)-사회단체신뢰(44.66)-일반신뢰(44.27)의 순으로 신뢰수준이 높다. 특기할 점은 대인신뢰의 두 유형인 특수신뢰와 일반신뢰의 수준이 양 극단을 차지하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유형의 제도신뢰의 수준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가장 높은 신뢰수준을 100, 중간수준을 50 그리고 가장 낮은 수준을 0으로 볼 때, 특수신뢰, 국가공동체신뢰, 지역공동체신뢰 및 민주

주의체제신뢰의 수준이 높은 편이며, 교육기관신뢰, 선거신뢰 및 지역공공기관신뢰의 수준이 중간 정도이고, 중앙공공기관신뢰, 사회단체신뢰 및 일반신뢰의 수준이 낮은 편이다.

<표 13> 신뢰 수준

영역	유형변수	측정변수	평균
대인신뢰	특수신뢰	가족	89.67
		이웃	62.67
		친구	72.0
		동료	60.67
		합계	71.25
	일반신뢰	초면인	37.33
		타종교인	46.33
		타정견인	45.33
		타지인	49.67
		타국인	42.67
		합계	44.27
		제도신뢰	국가공동체신뢰
한국생활	67.5		
한국인신뢰	61.0		
합계	66.83		
지역공동체신뢰	부산자공심		67.5
	부산생활		69.25
	부산인신뢰		62.8
	합계		66.52
체제신뢰	민주주의		63.5
선거신뢰	대통령선거		66.33
	국회의원선거		54.67
	단체장선거		50.33
	지방의원선거		47.0
	합계		54.58
중앙공공기관신뢰	청와대		55.0
	중앙행정기관		50.0
	국회		38.67
	법원		49.33
	경찰		52.0
	정당		37.0
	언론기관		46.67
합계	46.95		
지역공공기관신뢰	부산시청		57.0
	부산의회	47.0	

		부산교육청	50.0
		구청	57.33
		구의회	46.33
		동주민센터	64.33
		합계	53.66
	교육기관 신뢰	초중고	57.0
		대학	52.67
		합계	54.84
	사회단체 신뢰	노조	43.33
		시민단체	46.0
		합계	44.66

2. 집단 간 차이 분석

여기에서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행태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주되는 주요 사회경제적 변수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가구월수입)의 집단별 구분에 따라 각 사회자본 구성요소의 현황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일원분산분석(ANOVA)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일원분산분석은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집단 간 평균값이 서로 다른지를 검정하는 분석방법이다. 사회경제적 변수의 집단들 사이에 유의한 평균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검증(Scheffe 방법)을 통해 어떠한 집단들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해볼 것이나, 다만 표 작성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사후검증 결과의 소개는 생략한다.

1) 사회적 네트워크

아래 <표 14>에 의거 우선 강한 네트워크의 경우를 살펴보면, ‘친한 친구나 동료의 수’는 유의수준 $p < .05$ 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으나, 연령, 교육수준 및 가구월수입의 차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연령에 있어서, 40대와 50대가 여타 연령대(20대, 30대, 60세 이상) 보다 친한 친구나 동료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곧 사회활동이 활발한 40대와 50대가 상대적으로 더욱 친교활동이 활발함을 말해준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중졸 이하 집단이 여타 집단들(고교중퇴나 졸업, 전문대졸이나 대학중퇴, 대졸 이상)에 비해 친한 친구나 동료의 수가 더 적은바, 이는 중졸

이하 집단의 친교활동이 상대적으로 덜 활발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고교중퇴나 졸업 이상의 집단들 사이에서는 친교활동의 크기 즉 친한 친구나 동료의 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가구월수입에 있어서, 수입이 큰 집단일수록 이에 비례해서 친한 친구나 동료의 수가 많아진다. 이는 곧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친교활동이 더욱 활발함을 나타낸다. 한편, ‘친한 이웃의 수’는 유의수준 $p < .05$ 에서 가구월수입에 따른 차이는 없으나, 성별, 연령 및 교육수준의 차이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다. 성별에 있어서, 남자가 여자 보다 친한 이웃의 수가 더 적은 바 이는 곧 여자에 비해 남자가 동네를 벗어나 직장생활에 더욱 치중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연령에 있어서, 연령이 높을수록 친한 이웃의 수가 더 많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이웃과의 교제활동이 활발해짐을 나타내는바, 아마 이웃과 사귄 수 있는 기회인 동네 거주기간이 긴 것이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 교육수준에 있어서, 고졸 이하 집단들(중졸 이하, 고교중퇴나 졸업)이 전문대졸 이상의 집단들(전문대졸이나 대학중퇴, 대졸 이상) 보다 친한 이웃의 수가 더 많은바 이는 곧 고졸 이하 집단들이 이웃과의 교제가 상대적으로 더 활발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음으로 약한 네트워크(전화번호 보관 수)의 크기는 유의수준 $p < .05$ 에서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및 가구월수입의 차이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난다. 성별의 경우, 남자가 여자 보다 약한 네트워크의 크기가 큰바 이는 곧 남자가 여자 보다 활동범위나 교제의 폭이 넓다는 것을 나타낸다. 연령의 경우, 60세 이상의 연령집단이 60세 미만의 연령집단들(20대, 30대, 40대, 50대) 보다 약한 네트워크의 크기가 작은바 이는 곧 60세 이상의 사람들이 그만큼 활동범위나 교제의 폭이 작아짐을 나타낸다. 교육수준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이에 비례해서 약한 네트워크의 크기가 커지며 집단 간 차이도 매우 크다. 이는 곧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활동범위나 교제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을 말해준다. 가구월수입의 경우, 가구월수입이 많은 집단일수록 이에 비례해서 약한 네트워크의 크기가 커지며 집단 간 차이도 매우 크다. 이는 곧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활동범위나 교제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상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집단별 차이 분석에서 특기할 점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상대적으로 여자는 강한 네트워크가 큰 반면 남자는 약한 네트워크가 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강한 네트워크가 커지다가 60대 이상이 되면 약간 작아지는 경향이 있

고, 특히 약한 네트워크는 60대 이상이 되면 상대적으로 더욱 작아지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강한 네트워크 중 친한 친구나 동료의 수는 많아지나 친한 이웃의 수는 적어지며,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약한 네트워크는 상대적으로 매우 커지며;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강한 네트워크(특히 친한 친구나 동료의 수)와 약한 네트워크가 커진다.

<표 14> 사회적 네트워크의 집단별 차이(척도범위: 1-6점)

구분	강한 네트워크				약한 네트워크 (전화번호 보관 수)		
	친한 친구/동료 수		친한 이웃 수				
성별	남자	4.66	F=.323	3.72	F=11.944	3.62	F=8.757
	여자	4.70	p=.570	4.03	p=.001	3.38	p=.003
연령	20대	4.57	F=3.349 p=.010	3.10	F=40.506 p=.000	3.74	F=24.027 p=.000
	30대	4.53		3.35		3.65	
	40대	4.85		4.15		3.74	
	50대	4.85		4.41		3.56	
	60이상	4.61		4.39		2.71	
교육 수준	중졸 이하	4.31	F=4.857 p=.002	4.20	F=17.016 p=.000	2.32	F=51.942 p=.000
	고교 중퇴/졸업	4.76		4.24		3.40	
	전문대졸/대학중퇴	4.63		3.55		3.62	
	대졸 이상	4.79		3.62		3.94	
가구 월수입	149만원 이하	4.20	F=20.860 p=.000	4.01	F=2.458 p=.061	2.70	F=37.344 p=.000
	150-299만원	4.62		3.73		3.46	
	300-499만원	4.76		3.97		3.73	
	500만원 이상	5.24		3.99		4.03	

2) 시민참여

가. 자원결사체 참여

자원결사체 참여도는 ‘참여 없음’은 0점, ‘소극적 참여(이름만 등재)’는 1점, 그리고 ‘적극적 참여(실제로 활동함)’는 2점으로 하는 0-2점 범위의 척도로 측정했다.

아래 <표 15>에 의거 자원결사체의 유형들 중 우선 도구적 단체의 경우를 살펴보면, 유의수준 $p < .05$ 에서 오직 연령에서만 유의한 차이($p = .044$)가 발견된다. 그러나 사후검증을 해보면 5개 연령집단은 하나의 동일집단군을 형성하여 연령집단 간에 뚜렷한 참여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도구적 단체 참여도는 성별, 연

령, 교육수준 및 가구월수입의 차이에 따라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도구.표출적 단체 참여도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및 가구월수입의 차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별의 경우, 남자 보다 여자의 참여도가 월등히 높다. 도구.표출적 단체는 구체적으로 종교단체, 지역주민단체 및 교육학부모단체를 포함하고 있는바, 이러한 단체에는 여자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많이 참여한다고 할 수 있다. 연령의 경우에는, 연령이 높을수록 도구.표출적 단체 참여도가 높아지다가 60세 이상 집단에서는 그 참여도가 미미하게 낮아진다. 교육수준의 경우에는, 오히려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도구.표출적 단체 참여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구월수입의 경우에는, 150-299만원의 집단이 여타 집단 보다 참여도가 낮다.

표출적 단체 참여도는 오직 연령과 가구월수입의 차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령의 경우, 30대의 참여도가 가장 낮고 50대의 참여도가 가장 높은 가운데 여타 연령집단의 참여도가 그 중간수준을 기록한다. 그리고 가구월수입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 집단들의 참여도가 299만원 이하 집단들의 참여도 보다 높다. 즉, 대체적으로 보아, 가구월수입이 높을수록 표출적 단체 참여도가 높다.

연고단체 참여도는 성별, 연령 및 교육수준의 차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성별의 경우, 남자가 여자 보다 월등히 연고단체 참여도가 높다. 연고단체는 구체적으로 동창회, 향우회 및 종친회를 포함하고 있는바, 이러한 단체에는 상대적으로 남자가 더욱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연령의 경우에는, 연령이 높을수록 연고단체 참여도가 높아진다.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귀속적 성향의 단체에 더욱 활발히 참여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교육수준의 경우에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연고단체 참여도가 높아진다. 이 역시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이 귀속적 성향의 단체에 더욱 활발히 참여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상의 4가지 유형의 자원결사체 참여의 집단별 차이 분석에서 특기할 점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상대적으로 여자는 도구.표출적 단체 참여도가 높은 반면 남자는 연고단체 참여도가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도구.표출적 단체 및 연고단체 참여도가 높다.

<표 15> 자원결사체 참여의 집단별 차이 (척도범위: 0-2점)

구분		도구적 단체		도구표출적 단체		표출적 단체		연고단체	
성별	남자	.29	F=1.872	.48	F=64.531	.77	F=1.038	.65	F=37.102
	여자	.26	p=.171	.71	p=.000	.81	p=.309	.46	p=.000
연령	20대	.21	F=2.455 p=.044	.34	F=29.863 p=.000	.81	F=2.952 p=.019	.39	F=22.923 p=.000
	30대	.28		.49		.70		.38	
	40대	.29		.68		.81		.57	
	50대	.32		.78		.87		.68	
	60이상	.25		.70		.76		.75	
교육수준	중졸 이하	.29	F=.669 p=.571	.78	F=12.099 p=.000	.73	F=1.039 p=.374	.64	F=6.437 p=.000
	고교 중퇴/졸업	.27		.66		.77		.62	
	전문대졸/대학중퇴	.30		.56		.82		.50	
	대졸 이상	.25		.50		.81		.48	
가구월수입	149만원 이하	.26	F=.276 p=.843	.68	F=5.779 p=.001	.77	F=4.023 p=.007	.53	F=.646 p=.586
	150-299만원	.28		.52		.74		.53	
	300-499만원	.27		.63		.82		.56	
	500만원 이상	.29		.64		.91		.60	

나. 정치참여

정치참여는 관습적 정치참여 영역과 비관습적 정치참여 영역으로 나누어서 분석. 소개한다.

아래 <표 16>에 의거, 우선 관습적 정치참여 영역을 살펴본다. 유의수준 $p < .05$ 에서, 투표참여도는 연령과 교육수준의 차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연령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투표참여도가 높아지는바 이는 우리나라의 보편적 현상이다. 그리고 교육수준의 경우, 중졸 이하 집단이 여타 집단에 비해 투표참여도가 높은바 이 집단은 소위 '준봉투표'의 경향이 있지 않을지 사료된다.

선거활동은 연령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바, 연령이 높을수록 선거활동에의 참여도가 높다. 이는 곧 연령이 높을수록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말해 준다.

공공활동은 연령과 교육수준의 차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연령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공공활동에의 참여도가 높아진다. 공공활동 뿐만 아니라 대체로 모든 유형의 관습적 정치참여도는 연령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것이 우리나라의 일반적 현상이다. 그리고 교육수준의 경우, 집단 간 그리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F=2.786, p=.040)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공공활동에의 참여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상의 3가지 관습적 정치참여 유형의 집단별 차이 분석에서 특기할 점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연령이 높을수록 투표참여, 선거활동, 공공활동 등 모든 유형의 관습적 정치참여 활동이 활발하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투표참여나 공공활동이 어느 정도 저조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표 16> 관습적 정치참여의 집단별 차이

구분		투표참여 (척도범위: 0-3)		선거활동 (척도범위: 0-2)		공공활동 (척도범위: 0-2)	
성 별	남자	2.28	F=.847	.25	F=1.202	.20	F=.194
	여자	2.32	p=.358	.23	p=.273	.19	p=.660
연 령	20대	1.93	F=42.340 p=.000	.13	F=9.669 p=.000	.08	F=17.858 p=.000
	30대	2.05		.23		.13	
	40대	2.27		.24		.16	
	50대	2.62		.30		.28	
	60이상	2.64		.30		.31	
교 육 수 준	중졸 이하	2.57	F=10.745 p=.000	.24	F=.914 p=.433	.22	F=2.786 p=.040
	고교 중퇴/졸업	2.34		.26		.23	
	전문대졸/대학중퇴	2.10		.24		.17	
	대졸 이상	2.30		.22		.16	
가 구 월 수 입	149만원 이하	2.30	F=2.050 p=.105	.23	F=1.650 p=.176	.20	F=.828 p=.479
	150-299만원	2.23		.24		.18	
	300-499만원	2.33		.24		.19	
	500만원 이상	2.39		.30		.23	

아래 <표 17>에 의거, 비관습적 정치참여 영역을 살펴본다. 우선, 온건항의 참여도는 연령, 교육수준 및 가구월수입의 차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연령의 경우, 20대 및 60대 이상 집단이 여타 연령집단들(30대, 40대, 50대) 보다 상대적으로 참여도가 낮다. 이는 20대와 60대 이상의 연령집단들이 사회.정치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말한다. 한편,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구월수입이 많을수록 온건항의 참여도가 높아진다. 이는 곧 사회계층이 높아질수록 사회.정치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음으로, 과격항의 참여도는 연령과 교육수준의 차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다. 연령의 경우, 사후검증 결과 60대 이상 집단의 참여도가 여타 연령집단들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교육수준의 경우에는, 전체 집단들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사후검증 결과 모든 집단들이 하나의 동일집단군을 형성하고 있어 각 집단 사이에 뚜렷한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2가지 비관습적 정치참여 유형의 집단별 차이 분석에서 특기할 점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여타 연령집단들에 비해 특히 60대 이상 연령집단의 비관습적 정치참여(온건항의 및 과격항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한편,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구월수입이 많을수록 온건항의 참여도가 높아진다.

<표 17> 비관습적 정치참여의 집단별 차이 (척도범위: 0-2)

구분		온건항의		과격항의	
성별	남자	.54	F=.076 p=.782	.18	F=.165 p=.684
	여자	.53		.17	
연령	20대	.50	F=8.095 p=.000	.19	F=3.332 p=.010
	30대	.62		.19	
	40대	.59		.22	
	50대	.58		.18	
	60이상	.38		.11	
교육 수준	중졸 이하	.31	F=12.944 p=.000	.14	F=2.860 p=.036
	고교 중퇴/졸업	.52		.15	
	전문대졸/대학중퇴	.57		.22	
	대졸 이상	.61		.19	
가구 월수입	149만원 이하	.41	F=10.662 p=.000	.14	F=1.133 p=.335
	150-299만원	.50		.17	
	300-499만원	.59		.19	
	500만원 이상	.67		.20	

3) 일반화된 호혜성

아래 <표 18>에 의거 일반화된 호혜성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다. 우선 도덕의식은 유의수준 $p < .05$ 에서 연령, 교육수준 및 가구월수입의 차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연령의 경우, 20대가 30대 이상의 여타 연령집단들 보다 도덕의식의 수준이 낮다. 교육수준의 경우, 중졸 이하 집단이 여타 집단들 보다 도덕의식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월수입의 경우, 149만원 이하 집단이 150만원 이상의 여타 집

단들 보다 도덕의식의 수준이 낮다. 즉 연령이 가장 낮은 20대,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중졸 이하 집단, 그리고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가구월수입 149만원 이하 집단이 동일 사회경제적 변수의 여타 집단들에 비해 도덕의식의 수준이 낮다.

도움활동은 성별, 연령 및 가구월수입의 차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성별의 경우, 여자가 남자 보다 도움활동이 훨씬 활발하다. 연령의 경우, 40대 이상의 집단들이 30대 이하의 집단들 보다 도움활동이 활발하다. 그리고 가구월수입의 경우, 500만원 이상의 집단이 그 미만인 집단들 보다 도움활동이 활발하다. 다만, 이러한 도움활동 수준의 차이는 성별에 따라서는 그 차이가 매우 큰 편이나, 연령과 가구월수입의 집단별 차이는 그리 크지는 않다.

관용성은 연령, 교육수준 및 가구월수입의 차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관용성은 자기 견해와 다른 반대 주장이나 지지하지 않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수용 여부를 통해 측정했었다. 연령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관용성은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특이한 사항으로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사고는 경직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가구월수입이 많아질수록 관용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교육과 소득은 관용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공공정신은 교육수준 및 가구월수입의 차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교육수준의 경우, 대졸 이상의 집단이 그 미만인 집단들 보다 공공정신이 높다. 그리고 가구월수입의 경우, 수입이 많아질수록 공공정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상의 4가지 일반화된 호혜성 유형의 집단별 차이 분석에서 특기할 점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여자가 남자 보다 도움활동이 활발하며; 연령이 많아질수록 관용성은 적어지며;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관용성이 커진다.

<표 18> 일반화된 호혜성의 집단별 차이

구분		도덕의식 (척도범위: 0-9)		도움활동 (척도범위: 0-2)		관용성 (척도범위: 0-4)		공공정신 (척도범위: 0-4)	
성 별	남자	7.61	F=.017	.94	F=20.089	2.47	F=1.886	2.60	F=1.254
	여자	7.59	p=.896	1.08	p=.000	2.40	p=.170	2.66	p=.263
연 령	20대	7.31	F=2.729 p=.028	.95	F=3.030 p=.017	2.67	F=10.292 p=.000	2.51	F=2.062 p=.084
	30대	7.65		.96		2.60		2.61	
	40대	7.67		1.03		2.41		2.65	
	50대	7.72		1.09		2.28		2.69	
	60이상	7.66		1.02		2.21		2.70	
교 육 수 준	중졸 이하	7.29	F=3.158 p=.024	.95	F=.967 p=.407	2.13	F=23.828 p=.000	2.64	F=4.832 p=.002
	고교 중퇴/졸업	7.65		1.03		2.25		2.60	
	전문대졸/대학중퇴	7.53		1.00		2.45		2.50	
	대졸 이상	7.74		1.02		2.75		2.75	
가 구 월 수 입	149만원 이하	7.30	F=3.433 p=.017	1.04	F=3.663 p=.012	2.21	F=9.057 p=.000	2.53	F=3.311 p=.019
	150-299만원	7.69		.96		2.36		2.57	
	300-499만원	7.67		1.02		2.57		2.69	
	500만원 이상	7.66		1.11		2.62		2.75	

4) 신뢰

가. 대인신뢰

아래 <표 19>에 의거 우선 특수신뢰의 수준을 살펴보면 유의수준 $p < .05$ 에서 연령, 교육수준 및 가구월수입의 차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연령의 경우, 특수신뢰의 수준은 60대 이상 집단이 가장 낮고 40대가 가장 높은 가운데, 여타 연령집단들은 그 가운데에 위치한다. 교육수준의 경우, 중졸 이하의 집단이 여타 집단들 보다 특수신뢰의 수준이 낮다. 가구월수입의 경우, 수입이 많을수록 특수신뢰의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특수신뢰의 수준은 이처럼 연령, 교육수준 및 가구월수입의 차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일반신뢰는, 특수신뢰와 마찬가지로, 연령, 교육수준 및 가구월수입의 차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연령의 경우, 일반신뢰의 수준은 50대가 가장 높고 60대 이상이 가장 낮은 가운데, 여타 연령집단들이 그 중간에 위치한다. 교육수준의 경우, 사후검증을 통해 살펴보면 중졸 이하 집단이 여타 집단들에 비해 일반신뢰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가구월수입의 경우, 수입이 많을수록 일반신뢰의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일반신뢰의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특수신뢰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크다.

이상의 2가지 대인신뢰 유형의 집단별 차이 분석에서 특기할 점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연령별로 60대 이상 집단이 여타 연령집단들에 비해 그리고 교육수준별로는 중졸 이하 집단이 여타 집단들에 비해 대인신뢰(특수신뢰 및 일반신뢰)의 수준이 낮다. 60대 이상이 되면 잘 아는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건 잘 모르는 일반인에 대해서건 간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신뢰수준이 낮아진다는 사실이 특기할 만하다.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대인신뢰의 수준이 높아진다.

<표 19> 대인신뢰 유형들의 집단별 차이

구분		특수신뢰 (척도범위: 0-12)		일반신뢰 (척도범위: 0-15)	
성별	남자	8.55	F=.090 p=.764	6.55	F=.898 p=.344
	여자	8.52		6.71	
연령	20대	8.53	F=2.549 p=.038	6.53	F=6.130 p=.000
	30대	8.50		6.31	
	40대	8.78		6.96	
	50대	8.54		7.18	
	60이상	8.28		6.06	
교육수준	중졸 이하	8.16	F=3.637 p=.012	5.53	F=7.216 p=.000
	고교 중퇴/졸업	8.59		6.83	
	전문대졸/대학중퇴	8.43		6.59	
	대졸 이상	8.68		6.79	
가구 월수입	149만원 이하	8.25	F=3.598 p=.013	5.89	F=9.894 p=.000
	150-299만원	8.50		6.46	
	300-499만원	8.60		6.85	
	500만원 이상	8.78		7.38	

나. 제도신뢰

아래 <표 20>에 의거 제도신뢰의 여러 가지 유형들에 있어서의 집단별 차이를 살펴본다.

국가공동체신뢰는 유의수준 $p<.05$ 에서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및 가구월수입의 차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성별의 경우, 여자가 남자 보다 국가공동체신뢰의 수준이 높다. 연령의 경우, 사후검증을 통해 살펴보면 20대와 30대가 동일집단군을 형성하고 40대, 50대 및 60대 이상이 또 다른 동일집단군을 형성한다. 따라서 20대와

30대가 40대 이상 집단들에 비해 국가공동체신뢰의 수준이 낮다고 할 수 있다. 교육 수준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국가공동체신뢰의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국가공동체신뢰는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긍정적 기대수준을 측정하고 있는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에 대한 기대수준이 낮아지는 것이다. 가구월수입의 경우, 149만원 이하 집단이 150만원 이상의 여타 집단들에 비해 국가공동체신뢰의 수준이 높다.

지역공동체신뢰는 성별 및 연령의 차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성별의 경우, 여자가 남자 보다 지역공동체신뢰의 수준이 높다. 그리고 연령의 경우, 30대가 여타 연령집단들에 비해 지역공동체신뢰의 수준이 낮다.

민주주의신뢰는 오직 연령의 차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바, 60대 이상 집단이 여타 연령집단들 보다 민주주의신뢰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선거신뢰는 연령 및 교육수준의 차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연령의 경우, 60대 이상 집단이 여타 연령집단들 보다 선거신뢰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수준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선거신뢰의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중앙공공기관신뢰는 성별, 연령 및 교육수준의 차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성별의 경우, 여자가 남자 보다 중앙공공기관신뢰의 수준이 높다. 연령의 경우, 중앙공공기관신뢰의 수준은 30대가 가장 낮고 60대 이상이 가장 높은 가운데, 기타 연령 집단들이 그 중간을 차지한다. 교육수준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중앙공공기관신뢰의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지역공공기관신뢰는 중앙공공기관신뢰와 마찬가지로 성별, 연령 및 교육수준의 차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성별의 경우, 중앙공공기관신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자가 남자 보다 지역공공기관신뢰의 수준이 높다. 연령의 경우, 중앙공공기관신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역공공기관신뢰의 수준은 30대가 가장 낮고 60대 이상이 가장 높은 가운데, 기타 연령집단들이 그 중간을 차지한다. 교육수준의 경우, 역시 중앙공공기관신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지역공공기관신뢰의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교육기관신뢰는 연령 및 가구월수입의 차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연령의 경우, 교육기관신뢰의 수준은, 중앙 및 지역공공기관신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30대

가 가장 낮고 60대 이상이 가장 높은 가운데 기타 연령집단들이 그 중간을 차지한다. 가구월수입의 경우, 500만원 이상 집단이 그 미만 집단들 보다 교육기관신뢰의 수준이 높다.

끝으로 사회단체신뢰는 성별, 연령 및 가구월수입의 차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성별의 경우, 여자가 남자 보다 사회단체신뢰의 수준이 높다. 연령의 경우, 60대 이상 집단이 여타 연령집단들 보다 사회단체신뢰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가구월수입의 경우, 500만원 이상 집단이 그 미만 집단들 보다 사회단체신뢰의 수준이 높다.

이상의 8가지 제도신뢰 유형의 집단별 차이 분석에서 특기할 점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여자가 남자 보다 여러 가지 유형의 제도신뢰 수준이 높다. 연령은 8가지 모든 제도신뢰 유형에 있어서 유의한 집단 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기할 점은 60대 이상 연령집단이 제도신뢰 유형 중 사회단체신뢰의 수준이 가장 낮고 여타 모든 유형의 제도신뢰 수준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교육수준은 높을수록 국가공동체신뢰, 선거신뢰, 중앙공공기관신뢰 및 지역공공기관신뢰 등 대부분의 제도신뢰의 수준이 낮아진다.

<표 20> 제도신뢰 유형들의 집단별 차이

구분		국가공동체신뢰 (척도범위: 0-8)		지역공동체신뢰 (척도범위: 0-8)		민주주의신뢰 (척도범위: 0-4)		선거신뢰 (척도: 0-12)	
성 별	남자	5.46	F=6.278	5.32	F=10.670	2.55	F=.342	6.55	F=.008
	여자	5.69	p=.012	5.61	p=.001	2.52	p=.559	6.56	p=.927
연 령	20대	5.30	F=17.054 p=.000	5.64	F=6.300 p=.000	2.48	F=2.430 p=.046	6.57	F=5.109 p=.000
	30대	5.06		5.12		2.50		6.13	
	40대	5.79		5.59		2.55		6.66	
	50대	5.72		5.32		2.48		6.32	
	60이상	6.05		5.70		2.70		7.17	
교 육 수 준	중졸 이하	6.01	F=9.564 p=.000	5.57	F=1.516 p=.209	2.61	F=1.273 p=.282	7.18	F=3.296 p=.020
	고교 중퇴/졸업	5.75		5.57		2.58		6.61	
	전문대졸/대학중퇴	5.38		5.35		2.47		6.45	
	대졸 이상	5.36		5.41		2.51		6.36	
가 구 월 수 입	149만원 이하	5.91	F=4.655 p=.003	5.65	F=2.511 p=.057	2.62	F=1.034 p=.377	6.92	F=1.498 p=.213
	150-299만원	5.49		5.40		2.55		6.46	
	300-499만원	5.45		5.36		2.48		6.49	
	500만원 이상	5.66		5.62		2.54		6.52	

(계속)

구분		중앙공공기관신뢰 (척도범위: 0-21)		지역공공기관신뢰 (척도범위: 0-18)		교육기관신뢰 (척도범위: 0-6)		사회단체신뢰 (척도범위: 0-6)	
성 별	남자	9.58	F=5.369 p=.021	9.44	F=5.343 p=.021	3.29	F=.000 p=.987	2.58	F=5.980 p=.015
	여자	10.10		9.89		3.29		2.77	
연 령	20대	9.67	F=8.163 p=.000	9.76	F=3.707 p=.005	3.28	F=3.247 p=.012	2.86	F=5.165 p=.000
	30대	8.85		9.12		3.11		2.68	
	40대	10.15		9.53		3.29		2.83	
	50대	9.83		9.73		3.28		2.62	
	60이상	10.85		10.28		3.51		2.35	
교 육 수 준	중졸 이하	11.02	F=6.830 p=.000	10.45	F=3.726 p=.011	3.41	F=1.535 p=.204	2.47	F=1.405 p=.240
	고교 중퇴/졸업	10.11		9.79		3.35		2.71	
	전문대졸/대학중퇴	9.53		9.47		3.18		2.63	
	대졸 이상	9.38		9.40		3.27		2.73	
가 구 일 수 입	149만원 이하	10.32	F=1.152 p=.327	9.83	F=.749 p=.523	3.28	F=2.791 p=.039	2.44	F=6.625 p=.000
	150-299만원	9.76		9.65		3.30		2.76	
	300-499만원	9.72		9.48		3.21		2.56	
	500만원 이상	9.79		9.85		3.52		2.98	

3. 사회자본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

사회자본론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회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시민 참여, 호혜성의 규범, 신뢰 등 여타 사회자본 구성요소들을 조장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논리전개에 대해, 네트워크가 호혜성이나 신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호혜성이나 신뢰가 네트워크의 형성을 조장한다는 반론도 있다. 그런데 사회현상에서는 원인과 결과가 서로 꼬리를 물 수 있으나, 굳이 발생의 선후를 따지자면 사회관계나 사회적 네트워크가 앞선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신뢰나 규범은 개인에게 선천적으로 내재된 본성이 아니라 사회관계에서 생겨나는 사회관계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팩스톤(Paxton 2007: 50, 54)은 대부분의 관련 연구들은 인과관계를 네트워크로부터 신뢰나 규범의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그 타당성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고 한다. 한편, 호혜성의 규범과 신뢰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액슬로드(Axelrod), 살린스(Sahlins), 코헤인(Keohane) 및 굴드너(Gouldner)는 호혜성 즉 교환을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본원리로 간주하고 지속적인 호혜적 교환이 신뢰를 조장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견해들

을 바탕으로 여기에서는 네트워크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네트워크가 과연 시민참여나 신뢰 혹은 호혜성을 생성하는지를 분석하는 한편, 또한 호혜성의 규범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호혜성의 규범이 신뢰를 증진시키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통계분석방법으로는 다중회귀분석을 도입하며, 회귀모형의 정립방법은 각각의 회귀분석 시에 소개한다.

1) 사회적 네트워크가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

우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개인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크기와 강도가 시민참여, 신뢰 및 호혜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다중회귀모형에서 종속변수는 요인분석을 통해 분류된 자원결사체, 정치참여, 일반화된 호혜성 및 신뢰의 각 유형변수들이다. 그리고 독립변수는 ‘강한 네트워크’와 ‘약한 네트워크’이며, 특히 회귀분석 시 이들 두 독립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상호간의 영향을 통제하기로 한다. 아울러, 사람들의 여러 가지 태도나 행위에 보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변수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가구월수입)을 통제변수로 도입해서, 이들의 영향 역시 배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수 강한 네트워크 및 약한 네트워크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순수한 영향력을 알아보기로 한다. 명목척도인 성별은 여성을 기준범주로 하는 더미변수를 사용하며, 각 회귀모형은 아래와 같은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절편, 회귀계수 생략).

자원결사체참여, 정치참여, 일반화된 호혜성 및 신뢰의 각 유형변수 =
강한 네트워크+약한 네트워크+성별+연령+교육수준+가구월수입+ε

회귀분석결과, 모든 회귀모형의 검정통계량(F)은 유의확률 $p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들로 판명되었으며,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아래 표들에 결정계수(R²), 검정통계량(F) 및 표준회귀계수(베타)를 소개해두고, 표준회귀계수를 중심으로 각 종속변수에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본다.

(1) 자원결사체참여에 미치는 영향

아래 <표 21>은 강한 네트워크와 약한 네트워크가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및 가구월수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4가지 유형의 자원결사체 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종합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4가지 유형을 종합한 전체 자원결사체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의 여타 회귀분석 결과의 소개에서도 개별적인 유형 및 모든 유형들을 종합한 회귀모형의 분석결과를 함께 소개한다.) 표에 소개된 표준회귀계수를 보면, 강한 네트워크는 도구적 결사체(.113), 도구·표출적 결사체(.116), 표출적 결사체(.178), 연고단체(.193) 등 모든 유형의 결사체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약한 네트워크는 오직 표출적 결사체(.132) 참여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여타 유형의 결사체 참여에는 유의성은 없으나 모두 긍정적 방향으로 어느 정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4가지 결사체 유형 전체를 종합해서 분석해보면, 강한 네트워크(.257)가 약한 네트워크(.109) 보다 긍정적 영향력이 2.5배 정도나 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판단이 가능하다. 첫째, 네트워크의 강약을 불문하고 개인의 네트워크가 큰 사람들일수록 여러 가지 유형의 자원결사체 참여 활동이 활발하다. 둘째, 그러나 약한 네트워크 보다 강한 네트워크가 큰 사람들이 자원결사체참여활동이 훨씬 활발하다.

<표 21> 사회적 네트워크가 자원결사체참여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도구적 결사체	도구·표출 결사체	표출적 결사체	연고단체	4개 유형 종합
강한네트워크	.113**	.218***	.178***	.193***	.257***
약한네트워크	.068	.061	.132***	.062	.109**
여자=0	.050	-.225***	-.033	.191***	-.016
연령	.037	.231***	.039	.222***	.163***
교육수준	-.016	-.053	.041	-.045	-.022
가구월수입	.004	.033	.013	.069*	.033
F	5.308***	46.268***	15.095***	35.531***	29.249***
R2	.028	.197	.074	.159	.141

* p<.05 ** p<.01 *** p<.001

(2)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아래 <표 22>에 소개된 표준회귀계수를 보면, 강한 네트워크는 공공활동(.206), 선거활동(.150) 및 투표참여(.129)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과격항의(-.028)와 온건항의(-.015)에는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약한 네트워크는 과격항의(.072) 및 온건항의(.106)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여타 유형의 정치참여에도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5가지 유형의 정치참여활동 전체를 종합해서 분석해보면, 강한 네트워크(.141)의 긍정적 영향력이 약한 네트워크(.105) 보다 좀 더 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판단이 가능하다. 즉, 강한 네트워크와 약한 네트워크 사이에 정치참여의 성향이 다른바, 약한 네트워크가 큰 사람일수록 ‘비관습적 정치참여’ 유형인 항의활동에 적극적인 반면 강한 네트워크가 큰 사람일수록 항의활동에는 오히려 부정적이면서 ‘관습적 정치참여’ 유형의 활동에 적극적이다.

<표 22> 사회적 네트워크가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공공활동	과격항의	선거활동	온건항의	투표참여	5개 유형 종합
강한 네트워크	.206***	-.028	.150***	-.015	.129***	.141***
약한 네트워크	.039	.072*	.039	.106**	.047	.105**
여자=0	.013	.015	.030	-.009	-.039	-.002
연령	.206***	-.051	.148***	.018	.382***	.221***
교육수준	.019	-.004	.018	.104**	.075*	.064
가구월수입	.028	.027	.053	.091**	.065*	.083**
F	22.308***	2.229*	12.119***	9.180***	37.397***	20.305***
R2	.105	.011	.060	.046	.162	.099

* p<.05 ** p<.01 *** p<.001

(3) 일반화된 호혜성에 미치는 영향

아래 <표 23>의 표준회귀계수를 보면, 강한 네트워크는 도움활동(.213)과 공공정신(.087)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약한 네트워크는 도움활동(.150)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통계적 유의성을 불문하고, 강한 네트워크가 관용성에 대해 부정적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한 네트워크이건 약한 네

트위크이건 그 크기가 클수록 여타 모든 유형의 일반화된 호혜성에 긍정적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결국, 4개 유형의 일반화된 호혜성 전체를 종합해서 분석해보면 강한 네트워크(.133)와 약한 네트워크(.128)는 모두 일반화된 호혜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력의 크기는 비슷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판단이 가능하다. 첫째, 네트워크의 강약을 불문하고 네트워크가 클수록 대체적으로 일반화된 호혜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둘째, 그리고 일반화된 호혜성의 유형 중 특히 도움활동과 공공정신에 더욱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표 23> 사회적 네트워크가 일반화된 호혜성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도덕의식	도움활동	관용성	공공정신	4개 유형 종합
강한 네트워크	.019	.213***	-.018	.087**	.133***
약한 네트워크	.043	.150***	.047	.050	.128***
여자=0	-.026	-.131***	.033	-.034	-.074*
연령	.141***	.102**	-.072*	.137***	.119**
교육수준	.093*	.060	.152***	.100**	.181***
가구월수입	.056	-.031	.070*	.060	.061
F	4.611***	25.692***	13.618***	8.160***	20.561***
R2	.024	.118	.067	.041	.102

(4) 신뢰에 미치는 영향

아래 <표 24>에는 독립변수인 강한 네트워크나 약한 네트워크가 종속변수인 10가지 신뢰유형들에 대해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만을 소개해두었다. 표에 제시된 표준회귀계수를 살펴보면, 강한 네트워크는 특수신뢰(.140), 일반신뢰(.065), 국가공동체신뢰(.087) 및 지역공동체신뢰(.064)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약한 네트워크는 일반신뢰(.094) 및 국가공동체신뢰(.067)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특수신뢰(.060)에도 유의성은 없으나 어느 정도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강한 네트워크이건 약한 네트워크이건 네트워크의 크기는 국가나 지역공동체신뢰 이외의 여타 유형의 제도신뢰(중앙공공기관신뢰, 지역공공기관신뢰, 민주주의신뢰, 선거신

뢰, 교육기관신뢰 및 사회단체신뢰)에는 유의한 영향력이 없다. 그리고 10가지 신뢰 유형 전체를 종합해서 분석해보면, 강한 네트워크와 약한 네트워크 모두 긍정적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약한 네트워크(.094)의 영향력은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반면 강한 네트워크(.039)는 유의성이 없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판단이 가능하다. 첫째, 강약을 불문하고 네트워크가 큰 사람들일수록 대인신뢰(특수신뢰 및 일반신뢰)의 수준이 높다. 그런데 강한 네트워크가 큰 사람일수록 특수신뢰의 수준이 높은 반면 약한 네트워크가 큰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일반신뢰의 수준이 높다. 이는 곧 강한 네트워크와 특수신뢰, 그리고 약한 네트워크와 일반신뢰 사이의 연관성을 나타낸다. 즉, 친구나 동료 등 친밀한 사람들과 교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친밀한 사람들에 대한 특수신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다양한 사람들과 폭넓은 교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타자에 대한 일반신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둘째, 제도신뢰의 경우, 강한 네트워크이건 약한 네트워크이건 네트워크의 크기는 오직 공동체신뢰에만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고 여타 유형의 제도신뢰에는 유의한 영향력이 없다. 네트워크의 크기가 대인신뢰와 공동체신뢰에 공히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까닭은, 국가나 지역공동체는 곧 대인신뢰(특수신뢰 및 일반신뢰)의 모든 대상들 즉 친밀한 사람들이나 일반인들로 구성되어 양자 사이에는 신뢰대상의 유사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여타 제도신뢰의 대상 즉 중앙공공기관, 지역공공기관, 민주주의, 선거, 교육기관 및 사회단체는 대인신뢰의 대상과 이러한 유사성이 없다. 셋째, 10가지 신뢰유형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강한 네트워크와 약한 네트워크 모두 긍정적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약한 네트워크(.094)의 영향력은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반면 강한 네트워크(.039)는 유의성이 없었다. 이는 곧 다양한 사람들과 폭넓은 교제를 하는 사람들일수록 다양한 신뢰대상(사람이나 제도)에 대해 보편적으로 신뢰수준이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반면에, 강한 네트워크가 큰 사람들은 이러한 보편적인 신뢰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할 수 있다.

<표 24> 사회적 네트워크가 신뢰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특수신뢰	일반신뢰	국가공동체 신뢰	지역공동체 신뢰	10개 유형 종합
강한 네트워크	.140***	.065*	.087**	.064*	.039
약한 네트워크	.060	.094**	.067*	.040	.094*
여자=0	.017	-.031	-.064*	-.090**	-.070*
연령	-.014	.067*	.163***	-.005	.078*
교육수준	.033	.057	-.057	-.034	-.010
가구월수입	.056	.132***	-.036	-.033	.015
F	7.675***	10.372***	12.793***	3.380**	3.557**
R2	.040	.053	.062	.017	.022

* p<.05 ** p<.01 *** p<.001

주: 유의한 영향관계가 없는 여타 6개 신뢰유형에 대한 분석결과 소개 생략

2) 시민참여가 호혜성 및 신뢰에 미치는 영향

특히 퍼트남(Putnam)의 연구에 따르면 시민참여는 호혜성 및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감안해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9가지 시민참여 유형들이 4가지 일반화된 호혜성 유형 및 10가지 신뢰 유형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 보고자 한다. 회귀모형에서는 4가지 일반화된 호혜성 유형 및 10가지 신뢰 유형 각각을 종속변수로, 9가지 시민참여 유형들 모두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통제변수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가구월수입)을 도입한다. 각 회귀모형은 아래와 같은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절편, 회귀계수 생략).

각 유형별 일반화된 호혜성 및 신뢰 = 도구적 단체+표출적 단체+도구.표출적 단체+연고단체+공공활동+과격항의+온건항의+선거활동+투표참여+성별+연령+교육수준+소득수준+ε

회귀분석결과, 10가지 신뢰 유형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회귀모형들 중에서 ‘민주주의신뢰’의 검정통계량(F=1.145)은 p<.05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회귀모형은 분석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여타 모든 회귀모형의 검정통계량(F)은 유의확률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들로 판명되었으며,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아래 표들에 결정계수(R2), 검정통계량(F) 및 표준회귀

계수(베타)를 소개해두고, 표준회귀계수를 중심으로 각 종속변수에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본다.

(1) 일반화된 호혜성에 미치는 영향

서술의 편의를 위해 여기서는 변수의 숫자가 적은 종속변수(일반화된 호혜성 4개 유형)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영향을 서술한다.

<표 25> 시민참여가 일반화된 호혜성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 종속변수	도덕의식	도움활동	관용성	공공정신	4개 유형 종합
공공활동	-.004	.169***	.017	.048	.099*
선거활동	-.001	.145***	.020	-.042	.018
투표참여	.069*	.146***	.080*	.109**	.147***
온건향의	.087**	-.051	.092**	.025	.083*
과격향의	-.085**	.009	-.126***	-.125***	-.140***
도구적단체	-.145***	.081**	-.071*	.017	-.048
도구표출단체	-.078*	.177***	-.081*	.045	.029
표출적단체	-.014	.149***	.015	.028	.086*
연고단체	-.060	.030	-.064	.049	-.026
성별(여자=0)	-.010	-.097**	.032	-.037	-.050
연령	.155***	-.018	-.075	.082*	.052
교육수준	.106**	.078*	.137***	.087*	.179***
가구월수입	.050	-.010	.085**	.078*	.089**
F	6.180***	17.764***	9.820***	5.745***	10.885***
R2	.075	.185	.112	.069	.128

* p<.05 ** p<.01 *** p<.001

위 <표 25>의 도덕의식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회귀모형에서 독립변수들의 표준회귀계수를 살펴보면, 온건향의(.087) 및 투표참여(.069)가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과격향의(-.085), 도구적 단체(-.145) 및 도구표출적 단체(-.078)가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온건향의 활동이나 투표참여가 활발할수록 도덕의식이 높아지나, 과격향의나 도구적 단체 및 도구.표출적 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도덕의식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이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유형의 시민참여 활동이 도덕의식을 증

진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도덕의식을 저하시키는 활동도 있다. 또한 과격항의와 온건항의는 모든 호혜성 유형에 대한 영향관계가 상반될 정도로 그 성격이 서로 다르다. 과격항의활동은 국가나 사회로부터 받고 있는 어떤 부당한 대우(배신)에 대한 맞대응(배신)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격항의 참가자들은 오히려 도덕의식에 대한 냉소주의를 공유할 수 있다. 한편, 도구적 단체는 조직활동을 수단으로 하여 조직 외부를 대상으로 어떤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이다. 도구적 단체의 이러한 특수이익 추구 성향이 회원들의 도덕의식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한편 도구.표출적 단체 활동도 아마 어느 정도의 도구적 성향으로 인해 역시 도덕의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나 그 영향력의 크기는 도구적 단체 활동의 약 절반이다.

위 <표 25>의 도움활동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회귀모형에서 독립변수들의 표준회귀계수를 살펴보면, 공공활동(.169), 선거활동(.145), 투표참여(.146), 도구적 단체(.081), 도구.표출적 단체(.177), 표출적 단체(.149) 등 거의 모든 유형의 시민참여가 도움활동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격항의활동이나 연고단체활동도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그 영향의 방향은 긍정적이다. 다만 온건항의활동만이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의아심으로 이 유형에 속하는 구체적인 활동 3가지를 분리해서 회귀분석을 해보았다. 아래 <표 19>에서 보듯이, 온건항의 유형을 구성하는 진정서 서명, 불매운동 및 집회시위의 3가지 구체적 활동종류 중 오직 불매운동이 도움활동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불매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일수록 도움활동에 인색하다. 그러나 이 온건항의 유형의 불매운동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민참여활동은 도움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최소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표 26> 온건항의 종류별 '도움활동'에 대한 영향분석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베타	t	유의 확률
	B	표준 오차			
공공활동	.144	.027	.170	5.412	.000
과격항의	.018	.028	.021	.621	.535
선거활동	.123	.024	.150	5.061	.000

온건 향의	진정서서명	-7.472E-05	.027	.000	-.003	.998
	불매운동	-.059	.030	-.072	-2.000	.046
	집회시위	.008	.033	.009	.236	.813
	투표참여	.122	.025	.151	4.893	.000
	도구적단체	.066	.025	.081	2.702	.007
	도구표출단체	.144	.026	.176	5.452	.000
	표출적단체	.120	.024	.148	5.042	.000
	연고단체	.024	.025	.029	.935	.350
	성별(여자=0)	-.161	.050	-.099	-3.221	.001
	연령	-.001	.002	-.019	-.510	.610
	교육수준	.060	.027	.079	2.255	.024
	가구월수입	-.003	.012	-.008	-.258	.797
F=15.544 p=.000 R2=.186						

위 <표 25>의 관용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회귀모형에서 독립변수들의 표준회귀 계수를 살펴보면, 온건향의(.092) 및 투표참여(.080)가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과격향의(-.126), 도구적 단체(-.071) 및 도구.표출적단체(-.081)가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온건향의 활동이나 투표참여가 활발할수록 관용성이 높아지나, 과격향의 활동이나 도구적 단체 및 도구.표출적 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관용성은 저하된다. 이러한 영향관계는 앞에서 살펴본 도덕의식의 경우와 매우 유사한 것이 특징적이다. 영향력의 크기는 다르나, 도덕의식의 경우에도 동일한 유형의 시민참여 활동들이 동일한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위 <표 25>의 공공정신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회귀모형에서 독립변수들의 표준회귀 계수를 살펴보면, 투표참여(.109)가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과격향의(-.125)가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여타 7가지 유형의 시민참여 활동은 유의한 영향력이 없다. 투표참여는 일종의 공공정신의 표출인 까닭에 투표참여에 적극적일수록 공공정신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과격향의의 경우, 한국에서 지난 20여년간 과격향의활동을 유발한 주요 요인은 낮은 정부신뢰도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는데(류태건 2013: 65), 과격향의 참여자들의 낮은 정부신뢰도가 공공정신 저하와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 한편, 여타 독립변수들은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선거활동을 제외하고는 모두 긍정적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보아 시민참여는, 과격향의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공공정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아, 시민참여가 일반화된 호혜성에 미치는 영향은 이들의 유형에 따

라 다른 가운데 다음과 같은 경향이 나타난다. 첫째, 시민참여 유형 중 투표참여는 모든 유형의 일반화된 호혜성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둘째, 공공활동, 온건항의 및 표출적 결사체 참여는 대체적으로 일반화된 호혜성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셋째, 이와 반대로 과격항의 활동은 거의 모든 유형의 일반화된 호혜성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도구적 단체 참여도 대체적으로 일반화된 호혜성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넷째, 거의 모든 유형의 시민참여 활동은 일반화된 호혜성 유형 중 도움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연고단체 참여는 일반화된 호혜성에 아무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9가지 시민참여 유형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본다면, 과격항의 활동 및 도구적 단체 참여의 부정적 영향과 연고단체 참여의 무영향을 예외로 하고 대체적으로 시민참여활동은 일반화된 호혜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

(2) 신뢰에 미치는 영향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회귀모형 ‘민주주의신뢰’의 검정통계량(F= 1.145)은 $p < .05$ 에 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분석에서 제외한다. <표 27>의 표준회귀계수를 중심으로 9가지 시민참여유형이 각 신뢰유형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다.

<표 27> 시민참여가 신뢰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특수 신뢰	일반 신뢰	국가 공동체 신뢰	지역 공동체 신뢰	중앙 공공기관 신뢰	지역 공공기관 신뢰	선거 신뢰	교육기관 신뢰	사회단체 신뢰	10개 유형 종합
공공활동	.004	-.032	.000	-.018	.101*	.064	.061	.038	-.125**	.010
선거활동	-.045	-.071	-.010	.000	-.131**	-.114**	-.115**	-.039	.055	-.068
투표참여	.146***	.084*	.099**	.132***	.111**	.150***	.114**	.134***	.099**	.202***
온건항의	-.025	.095*	-.115**	-.107**	-.050	-.020	-.038	.012	.063	-.031
과격항의	.019	-.039	.007	.032	-.055	-.047	-.045	-.018	.010	-.029
도구적단체	.018	.020	.016	.018	.018	.055	.023	-.016	.164***	.059
도구표출단체	.079*	.099*	.043	.003	.051	.053	.050	-.028	-.061	.028
표출적단체	.028	.033	.101**	.082*	-.045	-.011	-.006	.010	-.032	.025
연고단체	.036	.038	.029	.013	.013	-.050	.033	-.015	-.061	-.007
여자=0	.036	.005	-.069*	-.097**	-.056	-.042	.011	.002	-.060	-.052
연령	-.061	.005	.072	-.058	.035	-.012	-.023	.051	-.091*	-.009
교육수준	.038	.081*	-.032	-.024	-.041	-.047	-.037	.001	-.017	.003
가구월수입	.066	.143***	-.027	-.013	-.009	-.002	-.022	.030	.041	.016

F	3.717***	6.458***	5.984***	3.430***	4.534***	3.772***	2.945***	2.032*	4.762***	3.990***
R2	.047	.078	.071	.042	.056	.046	.036	.025	.057	.056

* p<.05 ** p<.01 *** p<.001

주: 민주주의신뢰 소개 생략

정치참여 유형 중, 공공활동은 중앙공공기관신뢰(.101)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사회단체신뢰(-.125)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여타 유형의 신뢰에는 유의한 영향력이 없다. 공공활동은 ‘국가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활동’, ‘국가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공직자나 공공기관 접촉(방문, 편지 등)’, ‘정치나 시사 관련 토론회나 설명회 참석’, ‘공공기관 주최의 공청회나 위원회 참석’ 등 4개 활동에의 참여도를 통해 측정했었다. 다시 말해, 공공기관과 관련되는 활동에의 참여도를 측정한 것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중앙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공공활동은 지역공공기관신뢰(.064)에도 유의성은 없으나 어느 정도 강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에 대응되는(비판적인) 기관은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는바, 공공활동 참여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수준은 낮아진다.

선거활동은 중앙공공기관신뢰(-.131), 지역공공기관신뢰(-.114) 및 선거신뢰(-.115)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여타 유형의 신뢰에는 유의한 영향력이 없다. 선거활동은 ‘공직선거에서 타인에게 투표권유’, ‘공직선거에서 정당이나 후보를 위한 활동’, ‘공직선거와 관련된 집회나 단체 참여’, ‘정치헌금 기부’ 등 4개 활동에의 참여도를 통해 측정했었다. 이들 측정지표는 공직선거나 공직 수행기관(즉 공공기관) 및 정당에 대한 응답자의 관심도 그리고 이에 따른 인지도를 반영한다. 측정결과, 그에 대한 관심도나 인지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공직선거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참여는 특수신뢰(.146), 일반신뢰(.084), 국가공동체신뢰(.099), 지역공동체신뢰(.132), 중앙공공기관신뢰(.111), 지역공공기관신뢰(.150), 선거신뢰(.114), 교육기관신뢰(.134), 사회단체신뢰(.099) 등 예외 없이 모든 유형의 신뢰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투표참여는 신뢰 현상에 보편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의 호혜성 관련 분석에서도 투표참여는 모든 유형의

일반화된 호혜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바 있다. 투표참여가 신뢰와 일반화된 호혜성에 이처럼 보편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무엇인가? 명확한 이유를 밝히기가 쉽지는 않으나, 추론을 해볼 수는 있다. 투표참여는 국가공동체나 지역공동체의 공공사무를 수행할 대표자를 선출하는 공공활동으로서, 대표자나 대표기관의 공공사무 수행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내포하고 있다. (반대로, 투표불참이나 정치적 무관심은 이러한 기대를 내포하고 있지 않다.) 한편, 신뢰의 본질은 상대방의 행태나 속성에 대한 ‘긍정적 기대’이고, 일반화된 호혜성은 상대방의 의무 이행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표자나 대표기관에 대한 긍정적 기대의 표명행위인 투표참여에 적극적인 사람일수록 보편적으로 상대방(사람이나 제도)에 대한 긍정적 기대(신뢰와 일반화된 호혜성)의 수준도 높다고 추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인과관계의 논리는 역으로도 성립된다. 즉, 일반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 기대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투표참여 수준도 높다.)

온건항의참여는 일반신뢰(.095)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국가공동체신뢰(-.115) 및 지역공동체신뢰(-.107)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온건항의참여는 ‘불매운동’, ‘진정서서명’ 및 ‘집회시위’에의 참여도를 통해 측정했다. 이러한 온건항의활동은 대체로 서로 잘 모르는 일반인들 사이의 집합행동이다. 따라서 일반인들과의 집합행동에 동참할수록 일반인들에 대한 동료의식이 높아지고, 이는 일반인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킨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온건항의에 참여할수록 국가 및 지역공동체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국가 및 지역공동체에 대한 신뢰는 각각 다음의 3가지 문항의 합성척도를 사용해서 측정했다: ‘대체적으로 보아 한국(혹은 부산)은 태어나서 살아갈 만한 나라(지역)라고 생각한다.’/ ‘나는 한국(혹은 부산)이 자랑스럽다.’/ ‘대체적으로 보아 한국인(혹은 부산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로, 온건항의와 국가 및 지역공동체 신뢰의 측정 문항들 사이의 상관계수를 소개하면 아래 <표 28>과 같다. 이 표를 살펴보면, 온건항의와 공동체신뢰의 측정 문항들은 1개 경우를 제외하고 서로 모두 부정적 상관관계에 있다. 신뢰의 본질은 긍정적 기대로서, 공동체신뢰 관련 문항들은 한국이나 부산 그리고 한국인이나 부산 사람에 대한 긍정적 기대 수준을 묻고 있다. 온건항의에 참여하는 사람일수록 이들 대상에 대한 기대수준이 낮아지는 것이다. 혹 국가나 지역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

는 문제나 불의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공동체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저하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표 28> 온건항의 및 공동체신뢰의 측정변수들 사이의 상관계수

	한국살기	부산살기	한국자랑	부산자랑	한국인 신뢰	부산인 신뢰
진정서서명	-.022	-.027	-.043	-.023	-.030	.007
불매운동	-.125**	-.069*	-.128**	-.109**	-.086**	-.066*
집회시위	-.078**	-.062*	-.108**	-.069*	-.022	-.017

* <.05 ** <.01

과격항의참여는 어떠한 유형의 신뢰에도 유의한 영향력이 없다. 과격항의참여는 ‘점거농성’, ‘교통방해’, ‘파업태업’ 및 ‘공과금납부거부’의 참여도를 통해 측정했는데, 통계적 유의성은 없어도 전체적으로 보아 과격항의활동은 신뢰에 부정적 영향관계를 보이고 있다.

사회참여 유형 중, 도구적 단체 참여는 오직 사회단체신뢰(.164)에만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본 조사연구에서 분류한 ‘도구적 단체’에는 노조, 인권자선단체, 시민운동단체, 직업단체 및 정당이 포함된다. 그리고 ‘사회단체’에는 노조와 시민단체가 포함된다. ‘도구적 단체’와 ‘사회단체’의 유사성으로 인해 도구적 단체 참여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사회단체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도구.표출적 단체 참여는 오직 대인신뢰인 특수신뢰(.079)와 일반신뢰(.099)에만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도구.표출적 단체 유형에는 종교단체, 지역주민단체, 교육학부모단체가 포함된다. 이러한 단체들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주로 친목 및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이다. 따라서 이러한 친목 및 봉사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사람일수록 대인신뢰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표출적 단체 참여는 국가공동체신뢰(.101)와 지역공동체신뢰(.082)에만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표출적 단체 유형에는 취미친목단체와 예술문화단체가 포함된다. 이러한 표출적 단체란 그 조직 자체 내에서의 자기만족적인 활동을 통해 회원들 사이의 친목이나 흥미를 추구하는 결사체이다. 아마 유사한 사람들끼리의 공동체적

인 활동이 더 넓은 공동체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연고단체참여는 어떠한 유형의 신뢰에도 유의한 영향력이 없다. 연고단체 유형에는 향우회, 종친회 및 동창회가 포함된다. 이러한 단체활동은 신뢰를 증진시키지도 감소시키지도 않는, 즉 신뢰 현상과는 무관한 활동이라고 할 것이다.

이상에서 9가지 유형의 시민참여가 10가지 유형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처럼 다수의 유형들로 분류해서 양자의 영향관계를 살펴보면, 시민참여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의 유형에 따라 선택적이며 모든 유형의 시민참여가 모든 유형의 신뢰에 일률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시민참여의 신뢰에 대한 영향관계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치참여 유형들은 신뢰에 대해 서로 상반되는 영향관계를 보이고 있는바, 선거활동과 항의활동(온건항의 및 과격항의)은 통계적 유의성을 불문하고 많은 유형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투표참여는 모든 유형의 신뢰에 대해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투표참여는 행태학적 관점에서 통상 시민의 정치적 의사표출 내지 정치 효능감의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추후, 투표참여의 신뢰(및 일반화된 호혜성)와 관련된 행태학적 의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둘째, 연고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자원결사체 유형들(표출적 단체, 도구.표출적 단체 및 도구적 단체)은 신뢰에 대해 대체적으로 약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셋째, 선거활동과 항의활동의 부정적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보아 시민참여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으나, 투표참여를 예외로 하고 그 영향력이 그리 크지는 않다.

3) 일반화된 호혜성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4가지 일반화된 호혜성 유형들이 10가지 신뢰 유형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회귀모형에서는 10가지 신뢰 유형 각각을 종속변수로, 4가지 일반화된 호혜성 유형들 모두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통제변수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가구월수입)을 도입한다. 따라서 각 회귀모형은 아래와 같은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절편, 회귀계수 생략).

각 유형별 신뢰= 도덕의식+도움활동+관용성+공공정신+성별+연령+교육수준+소득수준+ε

회귀분석결과, 10가지 신뢰 유형 각각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10가지 회귀모형들 중에서 ‘선거신뢰’ 회귀모형의 검정통계량(F=1.395)은 p<.05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회귀모형은 분석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여타 모든 회귀모형의 검정통계량(F)은 유의확률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들로 판명되었으며,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아래 <표 29>에 각 회귀모형의 결정계수(R²), 검정통계량(F) 및 표준회귀계수(베타)를 소개해두고, 표준회귀계수를 중심으로 일반화된 호혜성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다.

도덕의식은 특수신뢰(.126)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일반신뢰(-.061)와 시민단체신뢰(-.100)에는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도덕의식의 측정은 ‘자격이 없는데 국가의 혜택을 받는 것’, ‘대중교통의 무임승차’, ‘기회가 된다면 탈세하는 것’, ‘주는 돈을 자기가 갖는 것’ 및 ‘뇌물을 주거나 받는 것’의 5개 문항의 합성척도로 측정했다. 이러한 도덕의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즉 도덕기준이 엄격한 사람일수록,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특수신뢰의 수준이 유의하게 높아지고, 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일반신뢰나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의 수준이 유의하게 낮아지며 여타 유형의 신뢰의 수준도 유의성은 없으나 대체로 낮아진다.

도움활동은 특수신뢰(.115), 국가공동체신뢰(.129) 및 지역공동체신뢰(.122)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도움활동은 ‘공공장소에서 남이 버린 쓰레기를 주운 적이 있다’, ‘불우이웃 돕기를 한 적이 있다’ 및 ‘자원봉사 활동을 한 적이 있다’의 3개 문항의 합성척도로 측정했다. 따라서 도움활동은 곧 남에 대한 배려행위를 측정한 것인바, 이는 공동체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관용성은 국가공동체신뢰(-.071)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관용성에 대해서는 ‘반대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시간낭비일 뿐이다’, ‘지지하지 않는 정부가 만든 정책은 꼭 따를 필요가 없다’의 2개 문항의 합성척도로 측정했다. 이들 문항에 대해 반대의 입장이 강할수록 관용성이 높은바, 관용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국가공동체(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다.

공공정신은 일반신뢰(.132), 국가공동체신뢰(.149), 중앙공공기관신뢰(.112), 지역공공기관신뢰(.102), 시민단체신뢰(.102) 및 민주주의신뢰(.088)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특수신뢰(.064), 지역공동체신뢰(.052), 교육기관신뢰(.061) 등 여타 유형의 신뢰에도 어느 정도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공공정신에 대해서는 ‘아무도 보지 않으면 법질서를 지킬 필요가 없다’, ‘부정부패를 목격해도 나에게 손해가 안 되면 모른 채 한다’, ‘우리나라에서 법질서를 지치는 사람은 손해를 본다’의 3개 문항의 합성척도로 측정했다. 이러한 공공정신은 여러 유형의 신뢰에 대해 보편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판명된 것이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화된 호혜성 유형들 중 도움활동과 공공정신은 대부분의 유형의 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도덕의식은 특수신뢰에는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여타 유형의 신뢰에는 유의성을 불문하고 대체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관용성은 대체적으로 보아 신뢰에 유의한 영향력이 없다.

<표 29> 일반화된 호혜성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특수 신뢰	일반 신뢰	국가 공동체 신뢰	지역 공동체 신뢰	중앙공공 기관신뢰	지역공공 기관신뢰	교육기관 신뢰	시민단체 신뢰	민주주의 신뢰	10개 유형 종합
도덕의식	.126***	-.061*	-.036	-.015	-.047	-.003	-.041	-.100**	.042	-.016
도움활동	.115***	.015	.129***	.122***	-.037	.011	.043	.020	-.020	.080*
관용성	.001	.038	-.071*	-.027	-.024	-.031	.049	.030	.029	-.002
공공정신	.064	.132***	.149***	.052	.112**	.102**	.061	.102**	.088**	.117**
여자=0	.040	-.029	-.055	-.071*	-.066*	-.049	.012	-.053	.015	-.057
연령	-.025	.060	.090**	-.024	.099**	.038	.086*	-.100**	.047	.045
교육수준	.014	.053	-.063	-.040	-.049	-.050	-.023	-.009	-.021	-.015
가구월수입	.086**	.164***	-.024	-.019	-.001	.002	.052	.040	-.029	.030
F	6.792***	8.947***	10.580***	3.912***	4.643***	2.609**	2.844**	5.367***	2.496*	3.684***
R2	.050	.065	.073	.028	.034	.019	.021	.039	.018	.032

* p<.05 ** p<.01 *** p<.001

주: 선거신뢰 소개 생략

4. 사회자본 효과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사회자본은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개인에 있어서 여러 가

지 긍정적 효과를 초래한다. 본 조사연구에서는 1회의 설문조사의 한계로 인해 오직 개인의 육체적 건강과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사회자본 구성요소들 즉 사회적 네트워크, 자원결사체, 정치참여, 일반화된 호혜성 및 신뢰는 서로 그 특성이 다르고 따라서 기능적 효과도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이들 구성요소들 각각의 효과를 따로 분석하고자 한다. 다만, 위에서는 각 사회자본 구성요소들의 유형들을 분류하여 분석했으나, 여기에서는 유형들을 분류하지 않고 종합하여 분석한다. 예를 들어, 자원결사체는 도구적 단체, 표출적 단체, 도구·표출적 단체 및 연고단체 등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해서 분석해왔으나, 이들은 상위의 개념인 ‘자원결사체’라는 공통요인을 내포하고 있는 까닭에 이들을 모두 종합해서 ‘자원결사체’라는 하나의 합성척도를 구성해서 분석하기로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치참여, 신뢰 및 일반화된 호혜성의 경우도 하나의 합성척도를 구성해서 분석하게 된다. 신뢰도분석을 통해 각 사회자본 구성요소의 유형들 사이의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을 살펴보면, 신뢰계수(cronbach's α)는 자원결사체 4개 유형들이 .702, 정치참여 5개 유형들이 .626, 신뢰 10개 유형들이 .812, 그리고 일반화된 호혜성 4개 유형들이 .354로 산출된다. 일반적으로 신뢰계수가 .60 이상이면 측정항목들의 신뢰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판단하는바, 일반화된 호혜성의 경우에는 그것이 낮다. 따라서 일반화된 호혜성은 분석에서 제외한다.

한편, 개인의 행복감의 측정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귀하는 요즈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라는 질문에, ‘①매우 행복하다’, ‘②행복한 편이다’, ‘③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및 ‘④전혀 행복하지 않다’의 4점 척도; 개인의 건강상태는 “요즈음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에, ‘①매우 건강하다’, ‘②건강한 편이다’, ‘③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및 ‘④전혀 건강하지 않다’의 4점 척도를 구성했다.

통계분석방법은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한다. 회귀모형에서는 개인의 ‘행복감’과 ‘건강상태’를 각각 종속변수로, 각 사회자본 구성요소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통제변수로 성별(여성=0), 연령,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가구월수입)을 도입한다. 이리하여 다중회귀모형은 아래의 6가지로 정립된다(절편, 회귀계수 생략).

- 모형 1 및 2 (네트워크 모형):

행복감 = 강한 네트워크+약한 네트워크+성별+연령+교육수준+가구월소득+ε
 건강상태 = 강한 네트워크+약한 네트워크+성별+연령+교육수준+가구월소득+ε

- 모형 3 및 4 (시민참여 모형):

행복감 = 결사체참여+정치참여+성별+연령+교육수준+가구월소득+ε
 건강상태 = 결사체참여+정치참여+성별+연령+교육수준+가구월소득+ε

- 모형 5 및 6 (신뢰 모형):

행복감 = 신뢰+성별+연령+교육수준+가구월소득+ε
 건강상태 = 신뢰+성별+연령+교육수준+가구월소득+ε

회귀분석결과, 모든 회귀모형의 검정통계량(F)은 유의확률 $p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들로 판명되었으며,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아래 표들에 결정계수(R²), 검정통계량(F) 및 표준회귀계수(베타)를 소개해두고, 표준회귀계수를 중심으로 각 종속변수에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본다.

1) 사회적 네트워크의 효과

아래 <표 30>에 의거, 개인의 사회적 네트워크(강한 네트워크 및 약한 네트워크)가 개인의 행복감 및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다. 표준회귀계수를 살펴보면, 행복감에 대해 강한 네트워크(.122)가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약한 네트워크는 유의한 영향력이 없고;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강한 네트워크이건 약한 네트워크이건 유의수준 $p < .05$ 에서 유의한 영향력이 없다. 따라서 사회적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오직 강한 네트워크가 클 경우에 개인의 행복감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통제변수들이 행복감 및 건강상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소개한다. 우선 행복감에 대해서는, 여자(-.099)가 남자에 비해, 교육수준(.069)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소득수준(.132)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욱 행복감을 느끼는 가운데, 소득수준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 다음으로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연령이 낮을수록(-.144), 교육수준(.113)이 높을수록 그리고 소득수준(.080)이 높을수록 더욱 건강하다고 느끼는 가운데, 연령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 통제변수들의 이러한 영향력은 당

연히 아래의 여타 사회자본 구성요소들의 영향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므로, 아래에서는 소개를 생략한다.

<표 30> 사회적 네트워크가 개인의 행복감 및 건강상태에 미치는 효과

독립변수 \ 종속변수	행복감	건강상태
강한 네트워크	.122***	.051
약한 네트워크	.045	.055
여자=0	-.099**	.046
연령	-.021	-.144***
교육수준	.069*	.113**
가구월수입	.132***	.080*
F	15.067***	18.087***
R2	.072	.085

* p<.05 ** p<.01 *** p<.001

2) 시민참여의 효과

아래 <표 31>에 의거 시민참여(자원결사체참여 및 정치참여)가 개인의 행복감이나 건강상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다. 표준회귀계수를 살펴보면, 자원결사체참여는 행복감(.088) 및 건강상태(.110)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정치참여는 행복감이나 건강상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자원결사체참여가 활발할수록 개인의 행복감이나 건강상태가 증진되는 효과가 있으나, 정치참여는 이러한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31> 시민참여가 개인의 행복감 및 건강상태에 미치는 효과

독립변수 \ 종속변수	행복감	건강상태
자원결사체 종합	.088**	.110**
정치참여 종합	-.031	.028
여자=0	-.097**	.064*
연령	-.027	-.164***
교육수준	.080*	.117**
가구월수입	.159***	.095**
F	11.303***	17.873***

R2	.061	.094
----	------	------

* p<.05 ** p<.01 *** p<.001

3) 신뢰의 효과

아래 <표 32>에 의거 신뢰가 개인의 행복감이나 건강상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다. 표준회귀계수를 살펴보면, 신뢰는 행복감(.296)과 건강상태(.232)에 공히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그 영향력도 매우 큰바, 연령이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력(-.170)이나 소득수준(가구월수입)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149) 보다도 크다. 앞에서 소개한 선행연구들도 신뢰가 개인의 행복감이나 건강상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신뢰는 불확실성 속에서의 긍정적 기대를 뜻하고, 또한 신뢰는 우슬라너(Uslaner 2002: 1-8)가 지적하듯이 낙관적 세계관의 소산이기도 하다. 신뢰의 이러한 긍정적, 낙관적 성향이 개인의 행복감 및 건강상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 분석결과만을 놓고 볼 때도 신뢰는 사회자본의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라 할 것이다.

<표 32> 신뢰가 개인의 행복감 및 건강상태에 미치는 효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행복감	건강상태
신뢰 종합		.296***	.232***
여자=0		-.091**	.070*
연령		-.037	-.170***
교육수준		.064	.082*
가구월수입		.149***	.097**
F		30.821***	29.009***
R2		.139	.122

* p<.05 ** p<.01 *** p<.001

V. 결론

사회자본은 사회관계가 형성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에 연계된 타인의 부, 권력, 정보, 명성, 정서적 공감 등의 경제적 내지 상징적 자원이기도 하고 사회적 네트워크가 조장하는 참여활동, 신뢰, 규범 등의 행태적 자원이기도 하다. 그런데 개인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연계된 타인의 물질적·상징적 자원은 상호간의 신뢰나 호혜성의 규범이 없으면 활용할 수가 없는 까닭에, 본 연구에서는 신뢰나 호혜성의 규범을 사회적 네트워크에 연계된 물질적·상징적 자원 보다 더욱 근본적인 사회자본 구성요소로 간주하고, 사회적 네트워크, 시민참여, 호혜성의 규범 및 신뢰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고찰했다. 또한 사회자본 구성요소들의 관계에 대해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원인으로 그리고 참여활동, 신뢰, 규범 등의 행태적 자원을 그 결과로 보는 인과적 관점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으나, 신뢰나 호혜성은 사회관계적 개념으로서 사회관계가 없으면 신뢰나 호혜성이 생성될 수도 없고 또한 존재이유도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 연구자들의 대체적인 관점에 따라 일단 사회관계와 사회관계의 네트워크를 독립변수로, 신뢰나 호혜성의 규범 등의 행태적 자원을 종속변수로 간주하고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과정에서 가장 난처한 문제는 이들 사회자본 구성요소들은 모두가 그 외연으로 각각 다양한 종류를 포함하고 있는 유개념(類概念)이라는 것이다. 즉 사회적 네트워크의 종류는 강한 네트워크, 약한 네트워크, 폐쇄적 네트워크, 개방적 네트워크 등이 있고, 자원결사체의 종류는 종교단체, 취미·친목단체, 예술·문화단체, 시민운동단체, 노조, 직업단체, 정당, 동창회, 향우회 등등이 있고, 신뢰는 신뢰대상에 따라 무수한 종류의 신뢰가 있다. 그리고 이들은 동일 사회자본 구성요소에 속하더라도 그 특성이 서로 다르고, 그 결과 사회자본 구성요소들의 기능적 효과나 구성요소들 사이의

관계는 그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자본 구성요소들의 어떤 보편적인 기능적 효과나 그들 사이의 보편적인 관계를 탐색하는 데에 많은 애로가 있다.

본 연구의 실증연구 부분에서는 가능한 한 각 사회자본 구성요소의 외연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종류를 망라하여 조사한 뒤, 이들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분석했다. 이리하여, 사회적 네트워크는 강한 네트워크와 약한 네트워크의 두 가지 유형, 자원결사체는 4가지 유형, 정치참여는 5가지 유형, 일반화된 호혜성은 4가지 유형, 그리고 신뢰는 10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 분석대상이 되었다. 예상되는 일이지는 하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회자본 구성요소들의 현황이나 그들 사이의 관계는 유형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부산시 조사자료의 분석에 따르면, 예를 들어 사회자본 구성요소들인 시민참여와 신뢰의 경우, 시민참여의 한 유형인 투표참여의 현황은 76.67점을 기록하는 가운데 투표참여는 모든 유형의 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시민참여의 또 다른 유형인 선거활동의 현황은 12.0점을 기록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유형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과격항의 활동이나 도구적 단체 참여는 여타 유형의 시민참여와는 달리 대체로 일반화된 호혜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선거활동과 온건항의활동은 대체로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별 차이를 무시하고 사회자본 구성요소의 외연에 속하는 다양한 유형들에 대한 보편적 현황이나 보편적 영향관계를 도출하는 일은 무리가 따른다. 그렇다고 일부 유형만을 선별적으로 조사·분석한다면 일반화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유형별 차이를 무시하고 모든 유형들을 종합하여 분석한다면 유형별 정보는 상실하게 된다. 결국 사회자본을 측정하는 모든 경험적 연구들은 사회자본 구성요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유형들 사이의 차별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떤 일반성을 도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는 간단한 작업이 아니다.

사회자본에 대한 실증연구에서 제기되는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희망적인 사항은 경험적인 사회자본 현상은 전반적으로 보아 이론적 전망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즉, 본 실증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네트워크는 보편적으로 시민참여, 일반화된 호혜성 및 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시민참여 역시 일부 유형들의 부정적 영향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일반화된 호혜성이나 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나아가 사회자본의 효과를 분석해 보아도 자원결사체참여나 신뢰는 개인의 행복감 및 건강상태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특히 신뢰의 영향력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본 실증연구에 따르면 객관적 사회자본(혹은 구조적 사회자본)은 행태적 사회자본(혹은 인지적 사회자본)을 조장하고, 또한 이들 사회자본은 개인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초래하는 것이 입증된다. 이는 선행연구들을 통해서도 들어난 사실이고, 나아가 선행연구들은 사회자본의 여타 경제적, 정치적 효과들을 입증하고 있다. 결국 사회자본은 국가나 지역 혹은 개인의 발전을 위한 주요한 자원이라 할 수 있다.

남은 과제는 이러한 사회자본을 실용적·정책적 차원에서 어떻게 확충하고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자본의 중요성은 사회자본이 결핍된 사회를 상상해보면 쉽게 이해된다. 사람들 사이의 불신풍조, 이웃과의 교류 단절, 호혜적 규범이 무너진 거래관계, 토론과 타협의 부재, 상호 배타적 집단 이기주의, 지역적·이념적 단절, 신뢰받지 못하는 정부... 이러한 것들이 사회자본 결핍을 나타내는 증후군이다. 주관적 사회자본인 신뢰나 호혜성을 직접적으로 증진시킬 방법은 없다. 신뢰나 호혜성과 같은 주관적·행태적 사회자본은 객관적 사회자본인 사회적 네트워크를 근원으로 한다고 볼 때, 우선 개인과 집단 사이의 의사소통과 교류를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사회 내에 많이 형성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보자. 우리나라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여전히 국민이나 주민과의 상호 의사소통을 단절하고 있다. 즉 “불통”이다. 신뢰나 호혜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항의활동이나 선거활동이 아닌 여타 유형의 정치참여가 더욱 활성화되거나 다양한 분야에서 거버넌스가 활성화된다면 정부의 효율성과 반응성이 제고되고, 국민이나 주민의 정부신뢰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 사이에 보다 많은 대화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면 끼리끼리의 특수신뢰가 좀 더 보편적인 일반신뢰로 확장되어 토론과 타협의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역 간, 이념 간, 세대 간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단절을 가로지르는 다양한 지역 간 네트워크, 세대 간 네트워크, 이념집단 간 네트워크 등이 구축되어 의사소통과 교류가 확대된다면, 지역이나 세대 그리고 이념집단 사이의 호혜적 규범이나 신뢰가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층간 소음 등 이웃 간의 갈등문제는 대화와 교류의 결핍에서 온다. 이웃 간의 네트워크인 반상회의 활성화

를 통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 그리고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의 주민참여 프로그램은 주민들 간의 호혜적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다. 길거리나 지하철 혹은 버스에서 부딪혔을 때 서로 미안하다는 인사를 건네고, 아파트 단지나 엘리베이터에서 서로 웃으며 인사만 하더라도 사회나 동네 분위기는 달라질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사회관계의 문제이다. 사회관계에 배태된 사회자본은 보다 인간적이고 협력적인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참고문헌>

- 공유식.김혁래.박길성.유홍준 편저. (1994). 『신경제사회학의 이해』. 역사비평사.
- 김경동. (1978; 1997). 『현대의 사회학』. 박영사.
- 김병준. (1994). 『한국지방자치론-지방정치.자치행정.자치경영』. 서울: 법문사.
- 김상돈.전계영. (2014). “SNS 이웃연결망이 시민덕목에 미치는 영향-마을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분석.” 『공공사회연구』 4(1): 37-65.
- 김석준. (1985). “자발적 결사체 이론을 한국사회에 적용하기 위한 예비적 시도-자발적 결사체 분류도식의 제안.” 『사회발전연구』 1권 1호. 제주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김성훈. (2003). “취업자의 사회연결망 활용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노동경제논집』 26(3): 209-230.
- 김용학. (2004). 『사회연결망 이론』. 박영사.
- 김우택.김지희. (2002). “신뢰의 개념과 신뢰연구의 맥락.” 김우택.김지희(편). 『한국사회의 신뢰와 불신의 구조-미시적 접근』. 도서출판 소화.
- 김태준 외. (2009). 『한국의 사회적 자본 실태 분석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류태건. (2012). “정치참여와 정치신뢰-그 유형의 다양성과 관계성.” 『21세기 정치학회보』 제22집 1호, 271-306.
- (2013). “한국사회 정치향의 변화추이와 영향요인 분석.” 『21세기 정치학회보』 제23집 2호, 47-73.
- 박종민. (1994). “한국에서의 비선거적 정치참여.” 『한국정치학회보』 28집 1호, 163-182.
- (1995). “정치향의 사회심리적 조건.” 『한국정치학회보』 29집 1호, 377-396.
- 박찬웅. (1999). “신뢰의 위기와 사회적 자본.” 『사회비평』 19, 33-64.
- 성경룡.박준식.정동일 편저. (2012). 『지역창조의 사회학-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하여』. 소화.

- 손정락. (2005). “신뢰와 건강.” 『한국심리학회지』 11(특집호): 85-95.
- 야마기시(山岸俊男). 김의철.박영신.이상미 역. (1998). 『신뢰의 구조-동서양의 비교』. 서울: 교육과학사
- 유석춘.장미혜. (2003). “사회자본과 한국사회.” 유석춘.장미혜.정병은.배영. (공편역) 『사회자본: 이론과 쟁점』. 도서출판 그린.
- 윤성준. (2013). “사회적 자본의 효과에 관한 네트워크적 접근: Bonding vs. Bridging.” 『e-비즈니스연구』 14(1): 203-224.
- 이민아. (2013).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와 우울: U자형 관계와 대인신뢰의 조절효과.” 『한국사회학』 47(4): 171-200.
- 이수인. (2010). “일반신뢰와 정부신뢰의 관계와 성별차이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학』 44(4): 162-203.
- (2011). “정서적 가족주의와 문화적 가치가 일반신뢰와 특수신뢰에 미치는 영향.” 『경제와 사회』 통권 제92호: 169-204.
- 이승종. (1993). 『민주정치와 시민참여』. 서울: 삼영.
- 이재혁. (1998). “신뢰의 사회구조화.” 『한국사회학』 32(여름호): 311-335.
- (2006). “신뢰와 시민사회: 한미 비교연구.” 『한국사회학』 40(5), 61-98.
- 정광호. (2011). 『정부신뢰』. 서울: 법문사.
- 통계청. (2012). 『한국의 사회지표』. www.kosis.kr.
- 황익주. (2012). “문화적 취향과 사회계층의 분화.” 오명석 엮음. 『사회과학명저 재발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Aguilera, M. B. (2003). The impact of the worker: how social capital and human capital influence the job tenure of formerly undocumented Mexican immigrants. *Sociological Inquiry*, 3(1): 52-83.
- Anheier, Helmut K. & Kendall, Jeremy. (2002). Interpersonal Trust and Voluntary Associations.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3: 343-326.
- Argyle, M. (1987). *The Psychology of Happiness*. London: Methuen.
- Axelrod, Robert. (1984).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New York: Basic Books.

- (2006).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revised edition). New York: Basic Books. (Robert Axelrod. 이경식 옮김. 2009. 『협력의 진화. 이기적 개인의 틱포택 전략』. 시스테마.)
- Banfield, Edward. (1958). *The Moral Basis of a Backward Society*. Chicago: The Free Press.
- Barnes, Samuel H., Max Kaase et al. (1979). *Political action: Mass participation in five western democracies*.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 Barber, Bernard. (1983). *The Logic and Limits of Trust*.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 Baron, R. A. and G. D. Markman. (2003). "Beyond Social Capital: The Role of Entrepreneurs' Social Competence in Their Financial Succes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8(1): 41-60.
- Baum, F. E., R. A. Bush, C. C. Modra, C. J. Murray, E. M. Cox, K. M. Alexander and R. C. Potter. (2000). "Epidemiology of Participation: An Australian Community Study."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54(6): 414-423.
- Berkman, L. F. and T. Glass. (2000). Social Integration, Social Networks, Social Support, and Health. in Berkman, L. F. and I. Kawachi (eds.). (2000). *Social Epidemi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erkman, L. F. and I. Kawachi (eds.). (2000). *Social Epidemi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oix, C. and D. N. Posner. (1995). Making social capital work: a review of Robert Putnam's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Draft review.
- Boix, C. and D. N. Posner. (1998). "Social Capital: Explaining Its Origines and Effects on Government Performanc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8: 686-693.

- Bok, S. (1979). *Lying: Moral choice in public and private life*. Hassocks: The Harvester Press.
- Bourdieu, Pierre. (1986). "The Forms of Capital." pp. 241-258 in John G. Richardson(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New York: Greenwood.
- Bourdieu, Pierre & Loic Wacquant. (1992). *An Invitation to Reflexive Soci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oxman, E. A. W., P. M. de Graaf and H. D. Flap. (1991). "The Impact of Social and Human Capital on the Income Attainment of Dutch Managers." *Social Networks*, 13: S51-73.
- Brown, G. and T. Harris. (1978). *Social Origins of Depression*. London: Tavistock.
- Burt, Ronald S. (1992). *Structural Holes: The Social Structure of Competi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1998). "The Gender of Social Capital." *Rationality and Society*. 10(1): 5-46.
- Coleman, James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S120.
- (1990). *Foundation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ssachusetts, and London, England: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Coleman, James S. and T. B. Hoffer. (1987). *Public and Private Schools: The Impact of Communities*. New York: Basic.
- Dalton, Russell J. (2008). *Citizen Politics: Public Opinion and Political Parties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Washington: CQ Press.
- Delhey, J. and K. Newton. (2005). "Predicting Cross-national Levels of Social Trust: Global Pattern or Nordic Exceptionalism?"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1(4): 311-327.
- Donovan, N. and D. S. Halpern (2003). *Life Satisfaction: The State of*

Knowledge and Implications for Government. Prime Minister's Strategy Unit. www.pm.gov.uk.

- Dunn, John. (1988). "Trust and Political Agency." In Diego Gambetta, ed. *Trust: Making and Breaking Cooperative Relations*. Oxford: Basil Blackwell.
- Durkheim, E. ([1897] 1951). *Suicide*. J. A. Spalding (trans.). Toronto: Free Press/Collier-Macmillan.
- Earle, T. and Cvetkovich, G. T. (1995). *Social Trust: Toward a Cosmopolitan Society*. New York: Praeger.
- Emirbayer, Mustafa & Jeff Goodwin. (1994). "Network Analysis, Culture, and the Problem of Agenc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9(6): 1411-1454.
- Esser, Hartmut. (2008). "The Two Meanings of Social Capital." in Dario Castiglione, Jan W. Van Deth & Guglielmo Wolleb (eds.). *The Handbook of Social Capita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Fafchamps, M. and B. Minten. (2002). "Returns to Social Network Capital among Traders." *Oxford Economic Papers*, New Series, 54(2): 173-206.
- Field, John. (2008). *Social Capital* (2nd ed.). New York: Routledge.
- Fukuyama, Francis.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구승희 역. 『트러스트』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6.)
- (2002). Social Capital and development: The coming agenda. *SAIS Review* 22(1): 23-37.
- Galea, S., A. Karpati and B. Kennedy. (2002). "Social Capital and Violence in the United States, 1974-1993." *Social Science and Medicine*, 55(8): 1373-1383.
- Gambetta, Diego. (1988). "Mafia: the price of trust." pp. 158-175. in Diego

- Gambetta, (ed.). *Trust: Making and Breaking Cooperative Relations*. Oxford: Blackwell.
- Gibson, James L. (2001). "Social Networks, Civil Society, and the Prospects for Consolidating Russian's Democratic Transi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5(1): 51-69.
- Gordon, C. Wayne and Nicholas Babchuk. (1959). "A Typology of Voluntary Associatio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4: 22-29.
- Gouldner, Alvin W. (1960). "The Norm of Reciprocity: A Preliminary State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5(2): 161-178.
- Granovetter, Mark.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6): 1360-1380.
- (1974). *Getting a Job: A Study of Contact and Careers*. Harvard University Press.
- (1985). "Economic Action and Social Structure: The Problem of Embedded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 481-510.
- Grootaert, Christiaan & Thierry Van Bastelaer. (2002). *Understanding and Measuring Social Capital, A Multidisciplinary Tool for Practitioners*.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Hagan, J. and B. McCarthy. (1997). *Mean Streets: Youth Crime and Homelessnes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lpern, David. (2005). *Social Capital*. Cambridge: Polity Press.
- Hardin, R. (1998). "Trust in Government." In Valerie Braithwaite and Margaret Levi (eds.). *Trust and Governance*. pp.9-27.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Hobbes, Thomas. (1985). *Leviathan*. London: Penguin Books.
- Huntington, Samuel P. & Joan M. Nelson. (1976). *No Easy Choice: Political Particip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Samuel P. Huntington & Joan M. Nelson. 김학준 역. 1981. 『정치

참여의 논리와 현실-개발도상국가의 어려운 선택』. 일조각.)

Inglehart, Ronald. (1990).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1995). "Public Support for Environment Protection: Objective Problems and Subjective Values in 43 Societies."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28(1): 57-72.

-----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1998). *Human Values and Beliefs: A Cross-Cultural Sourcebook*.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1999a). "Postmodernization Erodes Respect for Authority, but Increase Support for Democracy." in Pippa Norris(ed.). *Critical Citizens: Global support for democratic government*.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1999b). "Trust, Well-being and Democracy." pp. 88-120 in *Democracy and Trust*. M. E. Warren(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Keohane, Robert O. (1986). "Reciproc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0: 1-27.

Knack, S. (2002). "Social Capital and the Quality of Government: Evidence from the Stat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6(4): 772-785.

Knack, S., and Keefer, P. (1997). "Does Social Capital Have An Economic Payoff? A Cross-Country Investiga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2(4): 1251-1288

La Porta, R., F. Lopez-de-Silanes, A. Shleifer and R. W. Vishny. (1997). "Trust in Large Organizat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87

- (Papers and Proceedings): 333-338).
- Levi, M (1996). "Social and Unsocial Capital. A Review Essay of Robert Putnam's Making Democracy Work." *Politics & Society*. 24(6): 45-55
- (1998). "A State of Trust." pp. 77-101 in *Trust and Governance*. V. Braithwaite and M. Levi (ed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Levi, M., & Stoker, L. (2000). "Political Trust and Trustworthines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3: 475-507
- Levine, R. V., K. Miyake and M. Lee. (1989). "Places Rated Revisited: Psycho-social Pathology in Metropolitan Areas." *Environment and Behaviour*, 21(5): 531-553.
- Lin, Nan. (1999a). Building a Network Theory of Social Capital. *Connections* 22: 28-51.
- (1999b). Social Networks and Status Attainment. *Annual Review of Sociology* 23:467-88.
- (2000). Inequality in Social Capital. *Contemporary Sociology* 29(6): 785-795.
- (2001).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linowski, Bronislaw. (1932). *Crime and Custom in Savage Society*. London: Paul, Trench, Trubner.
- Mankiw, N. Gregory. (2004). *Principles of Economics*, 3rd Edition. Mason, Oh: Thomson/South-Western. (N. Gregory Mankiw. 김경환.김종석 옮김. 2005. 『맨큐의 경제학』. 교보문고.)
- Mayer, R. C., Davis, J. H., & Schoorman, F. D. (1995). "An integrative model of organizational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 709-734.
- (2007). "An Integrative Model of Organizational Trust: Past, Present, and Futur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2: 344- 354.

- Milbrath, L. W. & M. L. Goel. (1977). *Political Participation: How and Why Do People Get Involved in Politics?* Chicago: Rand McNally.
- Muller, Edward N. (1982). "An Explanatory Model for Differing Types of Participation."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10.
- Newton, Kenneth. (1999). Social and Political Trust in Established Democracies. in Norris, Pippa. ed. *Critical Citizens: Global support for democratic government*.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2001). "Trust, Social Capital, Civil Society, and Democracy."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22, No 2: 201-214.
- (1997). Social Capital and Democracy. *Th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0(5): 575-586.
- (2009). "Social and Political Trust." in R. J. Dalton & H.-D. Klingemann(eds.).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Behavior*.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Nowak, Martin A. and Roger Highfield. (2011). *Supercooperators: Altruism, Evolution, and Why We Need Each Other to Succeed*. New York: Free Press.
- Onyx, Jenny & Paul Bullen. (2000). "Measuring Social Capital in Five Communities."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36(1).
- Ostrom, Elinor. (1990).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strom, Elinor & T. K. Ahn. (2003). "Introduction" in Elinor Ostrom & T. K. Ahn(eds.). *Foundations of Social Capital*. Northampton, MA: An Elgar Research Collection.
- Parry, Geraint, George Moyser and Neil Day. (1992). *Political participation and democracy in Brita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rsons, Talcott. (1951). *The Social System*.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Ltd.

- Pateman, Carole. (1970). *Participation and democratic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xton, Pamela. (1999). "Is Social Capital Declining in the United States? A Multiple Indicator Assessmen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5(1): 88-127.
- (2002). "Social Capital and Democracy : An Interdependent Relationship."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7(2): 254-277.
- (2007). "Association Memberships and Generalized Trust: A Multilevel Model Across 31 Countries." *Social Forces* 86(1): 47-76.
- Petersen, T., I. Saporta and M. Seidel. (2000). "Offering a job: meritocracy and social network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6(3)
- Portes. Alejandro. (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1): 1-24.
- Putnam, R. D. (1993a). *Mar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안청시 외 역.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서울: 박영사. 2000.)
- (1993b)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13: 35-42.
- (1995a). "Tuning In, Tuning Out: The Strange Disappearance of Social Capital in America." *Political Science & Politics*. 28(4): 664-683.
- (1995b).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1): 65-78.
-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정승현 역. 『나 홀로 볼링』. 페이퍼로드. 2009.)
- (2002). *Better together, The report of the Saguaro Seminar: Civic*

- Engagement in America*. Cambridge, MA: Saguaro Seminar.
- Putnam, Robert D. and Lewis M. Feldstrin. (2003). *Better Together: Restoring the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Raiser, Martin, Christian Haerpfer, Thomas Nowotny and Claire Wallace. (2002). "Social Capital in Transition: A First Look at the Evidence." *Czech Sociological Review*, Vol. 38, No. 6: 693-720.
- Robey, J. S. (1999). "Civil Society and NAFTA: Initial Results."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65: 113-125.
- Rothstein, B. (2001). "Social Capital in the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 *Politics & Society* 29(2):207-241.
- (2005). *Social Traps and the Problem of Trus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usseau, Denise M., Sim B. Sitkin, Ronard S. Burt and Colin Camerer. (1998). "Not So Different After All: A Cross-Discipline View of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23, No.3. 393-404.
- Rubio, M. (1996). *Social Capital, Education and Delinquency in Colombia. (Capital Social, Educacion y Delincuencia Juvenil en Columbia.)* Santa Fe de Bogota: Centro de Estudios sobre Desarrollo Economico Universidad.
- Rupasingha, Anil, Stephan J. Goetz and David Freshwater. (2002). "Social and institutional Factors as determinants of economic growth: Evidence from the United States counties." *Papers in Regional Science*, 81(2): 139-155.
- Russek, L. G. and G. E. Schwartz. (1997). Perceptions of Parental Caring Predict Health Status in Midlife: A 35-Year Follow-up of the Harvard Mastery of Stress Study. *Psychosomatic Medicine*, 59(2): 144-149.
- Salamon, Lester M. and Helmut K. Anheier. (1997). *Defining the Nonprofit Sector: A Cross-national Analysis*. Manchester: Manchester.

- Salamon, Lester M. (1999). *America's Nonprofit Sector: A Primer 2nd Edition*. Foundation Center. (Lester M. Salamon. 이형진 역. 2000. 『NPO란 무엇인가』. 아르케.)
- Sahlins, Marshall. (1972). *Stone Age Economics*. Chicago: Aldine-Atherton.
- Sarason, B. R., I. G. Sarason and G. R. Pierce. (1990). *Social Support: An Interactional View*. Chichester: John Wiley.
- Scott, John. (2000). *Social Network Analysis: A Handbook*. London: Sage.
- Seligman, A. B. (1997). *The Problem of Trus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hane, S. and T. Stuart. (2002). "Organizational Endowments and the Performance of University Start-ups." *Management Science*, 48(1): 154-170.
- Shapiro, D. L., B. H. Sheppard and L. Cheraskin. (1992). "In Theory: Business on a Handshake." *Negotiation Journal*, October, pp. 365-377.
- Simmel, Georg. (1950). *The Sociology of Georg Simmel*, translated and edited by Kurt H. Wolff. Glencoe, Ill.: Free Press.
- Stolle, Dietlind. (1998). "Bowling Together, Bowling alone: The Development of generalized Trust in voluntary associations." *Political Psychology* 19(3):497-525.
- (2001). An Analysis of the importance of institutions, families, personal experiences and group membership. in Paul Dekker & Eric M. Uslaner. eds. *Social Capital and Participation in Everyday Life*. London: Routledge.
- (2009). "Social Capital." pp. 655-674 in R. J. Dalton & H.-D. Klingemann(eds.).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Behavior*.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Sztompka, Piotr. (1999). *Trust: A Sociological Theory*.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Tarrow, S. (1996). "Making Social Science Work across Space and Time: A Critical Reflection on Robert Putnam's Making Democracy Work."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0: 389-397.

Taylor, Michael. (1982). *Community, Anarchy, and Libert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Uphoff, Norman. (2000). "Understanding Social Capital: Learning From the Analysis and Experience of Participation." In Partha Dasgupta and Ismail Serageldin, eds. *Social Capital: A Multifaceted Perspective*.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Uslaner, Eric M. (1999). "Democracy and Social Capital." Mark E. Warren (ed.). *Democracy and Trust*.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2002). *The Moral Foundations of Trus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Veenstra, G. (2000). "Social Capital, SES and Health: An Individual Level Analysi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50(5): 619-629.

Verba, Sidney and Norman H. Nie. (1972). *Participation in America: Political Democracy and Social Equality*. New York: Harper and Row.

-----, Norman H. Nie, and Jae-on Kim. (1978). *Participation and Political Equality: A Seven-Nation Comparis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Warren, Mark E. (2001). *Democracy and Associ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Wedmore, K. and H. Freeman (1984). "Social Pathology and Urban Overgrowth." in H. Freeman (ed.) *Mental Illness and the Built Environment*. London: Churchill Livingstone.

Wessels, Bernhard. (1997). "Organizing capacity of societies and modernity." In Jan W. van Deth. *Private Groups and Public Life*. London:

Routledge.

Woolcock, Michael. (1998).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Toward a Theoretical Synthesis and Policy Framework." *Theory and Society* 27: 151-208.

Wrong, Dennis. (1961). "The Oversocialization Concept of Man in Modern Sociolog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6: 183-193.

Zucker, L. (1986). "Production of Trust: Institutional Sources of Economic Structure, 1840-1920."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8: 53-111.



부록 : 설문지



<부산시 사회적 자본 측정> 설문조사

본 조사는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SSK)'의 일환으로, 부산시의회의 협조 하에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조사 목적은 서로 믿고 협력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한 것이며, 조사 결과는 부산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및 정책을 제안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본 조사를 통해 얻는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며, 또한 무기명으로 실시되고 통계적으로 처리되므로 응답자의 개인적인 답변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각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 6월

조사 및 연구책임자: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류 태 건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일이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051) 629-5469

조사요원 기입란 (*응답자께서는 적지 마세요)

조사요원: _____

수거지역: _____ 동 _____ 통

수거일자: __월 __일

질문지 ID (전산 입력자 기입):

--	--	--	--	--

[응답 요령] 각각의 물음에 대해 귀하께서 해당되시는 응답항목에 ○ 혹은
✓ 표시를 하시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귀하의 요즈음 생활상태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1.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귀하는 요즈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①매우 행복하다 ----②행복한 편이다
----③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④전혀 행복하지 않다
2. 요즈음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①매우 건강하다 ----②건강한 편이다
----③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④전혀 건강하지 않다
3. 과거 몇 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요즈음 귀하의 생활형편이 더 나아졌습니까, 못해졌습니까?
----①매우 나아졌다 ----②조금 나아졌다 ----③비슷하다
----④조금 못해졌다 ----⑤매우 못해졌다
4.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귀하는 요즈음 삶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매우 만족한다 ----②만족하는 편이다 ----③그저 그렇다
----④불만족하는 편이다 ----⑤매우 불만족한다

다음은 여러 대상들에 대한 귀하의 신뢰 정도를 여쭙겠습니다.

5. 대체적으로 보아,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공정하게 대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려 한다'는 데에 완전히 찬성하면 1, '나를 공정하게 대해 준다'는 데에 완전히 찬성하면 10이라 할 때, 귀하의 견해는 1~10 사이의 어디쯤에 해당하십니까 그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1	2	3	4	5	6	7	8	9	10
“나를 이용하려 한다” (←더욱 찬성)					“나를 공정하게 대해 준다” (더욱 찬성→)				

6. 대체적으로 보아,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을 도우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한다'는 데에 완전히 찬성하면 1, '남을 도우려 한다'는 데에 완전히 찬성하면 10이라 할 때, 귀하의 견해는 1~10 사이의 어디쯤에 해당하십니까 그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1	2	3	4	5	6	7	8	9	10
“자기의 이익만을 위한다” (←더욱 찬성)					“남을 도우려 한다” (더욱 찬성→)				

7. 인간관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체적으로 보아 어느 쪽의 입장이신지 선택해 주십시오.

----①믿을 수 있다 ----②조심해야 한다

8. 대체적으로 보아 한국은 태어나서 살아갈 만한 나라라고 생각한다.

----①정말 그렇다 ----②어느 정도 그렇다 ----③그저 그렇다
----④별로 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9. 대체적으로 보아 부산은 태어나서 살아갈 만한 지역이라고 생각한다.
----①정말 그렇다 ----②어느 정도 그렇다 ----③그저 그렇다
----④별로 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10. 나는 한국이 자랑스럽다.
----①정말 그렇다 ----②어느 정도 그렇다 ----③그저 그렇다
----④별로 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11. 나는 부산이 자랑스럽다.
----①정말 그렇다 ----②어느 정도 그렇다 ----③그저 그렇다
----④별로 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12. 대체적으로 보아 한국인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①정말 그렇다 ----②어느 정도 그렇다 ----③그저 그렇다
----④별로 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13. 대체적으로 보아 부산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①정말 그렇다 ----②어느 정도 그렇다 ----③그저 그렇다
----④별로 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14. 우리나라는 국민이 선거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아 이들에게 국가의 통치를 맡기는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의민주주의는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바람직하다 ----②어느 정도 바람직하다
----③그저 그렇다 ----④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⑤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15. 선거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대표자를 뽑는 일이라고 합니다. 아래 우리나라의 각종 공직 선거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대표자를 뽑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해당 응답란에 표시해 주십시오.

선거 종류		응답란			
		①매우 그렇다	②어느 정도 그렇다	③별로 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중앙 선거	(1) 대통령 선거				
	(2)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	(3) 단체장 (시장·구청장) 선거				
	(4) 지방의원 (시·구의원) 선거				

16.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해당 응답란에 표시해 주십시오.

		응답란			
		①매우 신뢰한다	②신뢰 하는 편이다	③신뢰 하지 않는 편이다	④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1) 가족					
(2) 이웃					
(3) 친구					
(4) 직장 동료(학생은 동료 학생들)					
(5) 처음 만난 사람					
(6) 종교가 다른 사람					
(7)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					
(8) 출신 지역이 다른 사람					
(9) 다른 나라 사람					

17. 귀하께서는 아래의 우리나라 기관이나 단체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해당 응답란에 표시해 주십시오.

기관 종류		응답란			
		①매우 신뢰한다	②신뢰 하는 편이다	③신뢰 하지 않는 편이다	④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공공 기관	(1) 청와대				
	(2) 중앙 행정부처				
	(3) 국회				
	(4) 법원				
	(5) 경찰서				
	(6) 군대				
	(7) 정당				
기타	(8) 언론기관(신문, 방송)				
	(9) 초·중·고등학교				
	(10) 대학교				
	(11) 노동조합				
	(12) 시민단체				
	(13) 대기업				

18. 귀하께서는 아래의 부산 지역의 기관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해당 응답란에 표시해 주십시오.

기관 종류		응답란			
		①매우 신뢰한다	②신뢰 하는 편이다	③신뢰 하지 않는 편이다	④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1) 부산시청					
(2) 부산시 의회					
(3) 부산시 교육청					
(4) 거주지 구청					
(5) 거주지 구의회					
(6)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					

다음은 사회규범에 대한 귀하의 견해를 여쭙겠습니다.

19. 귀하께서는 아래와 같은 5가지 행위들이 얼마나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당화 될 수 없다'는 데에 완전히 찬성하면 1, '정당화 된다'는 데에 완전히 찬성하면 10이라 할 때, 귀

하의 견해는 1~10 사이의 어디쯤에 해당하십니까 응답란에서 각각 그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행위	응답란									
	'정당화 될 수 없다' ↔ '정당화 된다'									
	1	2	3	4	5	6	7	8	9	10
(1) 자격이 없는데 국가의 혜택을 받는 것										
(2) 대중교통의 무임승차										
(3) 기회가 된다면 탈세하는 것										
(4) 주은 돈을 자기가 갖는 것										
(5) 뇌물을 주거나 받는 것										

20. 귀하께서는 지난 2, 3년 동안 아래의 활동을 하신 적이 얼마나 있으신지 응답란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활동	응답란		
	① 많이 있다	② 몇 번 있다	③ 전혀 없다
(1) 헌혈한 적이 있다			
(2) 공공장소에서 남이 버린 쓰레기를 주운 적이 있다			
(3) 불우이웃 돕기를 한 적이 있다			
(4) 자원봉사 활동을 한 적이 있다			

21. 아래의 각 주장에 대해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응답란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주장	응답란				
	① 매우 찬성함	② 약간 찬성함	③ 보통	④ 별로 찬성안함	⑤ 전혀 찬성안함
(1) 사회는 극단적인 정치적 주장을 용인해서는 안된다					
(2) 반대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시간낭비일 뿐이다					
(3) 지지하지 않는 정부가 만든 정책은 꼭 따를 필요가 없다					
(4) 아무도 보지 않으면 법질서를 지킬 필요가 없다					
(5) 부정부패를 목격해도 나에게 손해가 안되면 모른체 한다					
(6) 우리나라에서 법질서를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본다					

다음은 귀하의 사회참여 및 정치참여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22. 귀하께서는 정치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십니까?

- ①매우 관심이 있다 ----②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
----③별로 관심이 없다 ----④전혀 관심이 없다

23. 귀하께서는 중앙선거(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에서 얼마나 자주 투표하십니까?

- ①매번 투표한다 ----②대부분 투표한다
----③가끔 투표한다 ----④전혀 투표하지 않는다

24. 귀하께서는 지방선거(시장·구청장·시의원·구의원선거)에서 얼마나 자주 투표하십니까?

- ①매번 투표한다 ----②대부분 투표한다
----③가끔 투표한다 ----④전혀 투표하지 않는다

25. 가장 진보적인 사람을 1, 가장 보수적인 사람을 10 이라고 할 때, 귀하께서는 어디쯤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번호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	2	3	4	5	6	7	8	9	10
←보다 진보적					보다 보수적→				

26.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모임이나 단체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계십니까?

단체 종류	응답란		
	①참여 없음	②소극적 참여 (이름만 올려둠)	③적극적 참여 (실제로 활동함)
(1) 종교 단체(교회, 절 등)			
(2) 스포츠·취미·친목 단체			
(3) 예술·문화 단체			
(4) 교육·교사·학부모 단체			
(5) 아파트나 지역의 주민단체			
(6) 시민운동 단체			
(7) 인권·자선 단체			
(8) 노동조합			
(9) 직업 단체			
(10) 정당			
(11) 동창회			
(12) 향우회			
(13) 종친회			
(14) 사이버 단체(카페, 블로그, SNS 등)			
(15) 기타 단체			

27. 귀하께서는 지난 몇 해 동안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활동 종류	응답란		
	①전혀 없다	②몇 번 있다	③많이 있다
(1) 공직선거에서 타인에게 투표권유			
(2) 공직선거에서 정당이나 후보를 위한 활동			
(3) 공직선거와 관련된 집회나 단체 참여			
(4) 정치헌금 기부			
(5) 국가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활동			
(6) 국가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공직자나 공공기관 접촉(방문, 편지 등)			
(7) 개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공직자나 공공기관 접촉(방문, 편지 등)			
(8)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정치참여나 선거운동			
(9) 정치나 시사 관련 토론회나 설명회 참석			
(10) 공공기관 주최의 공청회나 위원회 참석			

28. 아래와 같은 활동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참여한 경험 혹은 참여할 의향이 있으신지를 여쭙겠습니다.

활동 종류	응답란		
	①참여할 의향이 없다	②참여할 의향이 있다	③참여한 경험이 있다
(1) 탄원이나 진정서 서명			
(2) 공과금 납부 거부			
(3) 불매운동			
(4) 집회나 시위			
(5) 파업이나 태업			
(6) 교통방해			
(7) 건물점거나 농성			

다음은 귀하의 사회관계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29. 귀하께서는 잘 알고 지내는 친구나 동료(직장이나 모임 등의 동료)가 얼마나 있습니까?

- ①없음 ----②1-2명 ----③3-5명
 ----④6-10명 ----⑤11-20명 ----⑥20명 이상

30. 귀하께서는 거주지 주변에서 잘 알고 지내는 이웃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 ①없음 ----②1-2명 ----③3-5명
 ----④6-10명 ----⑤11-20명 ----⑥20명 이상

31. 귀하께서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하며,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척이 얼마나 있습니까?

- ①없음 ----②1-2명 ----③3-5명
 ----④6-10명 ----⑤11-20명 ----⑥20명 이상

32. 귀하께서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하며,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친구나 동료가 얼마나 있습니까?

- ①없음 ----②1-2명 ----③3-5명
 ----④6-10명 ----⑤11-20명 ----⑥20명 이상

33. 귀하는 다음의 사람들과 한 달에 평균 몇 번 정도나 만나십니까? (적어 주세요)

	만남 횟수
(1) 친구	월 평균 ()회 정도
(2) 친척	월 평균 ()회 정도
(3) 주변 이웃	월 평균 ()회 정도

34. 귀하는 다음의 사람들과 전화, 편지, 이메일, SNS 등등을 통해 한 달에 평균 몇 번 정도나 연락을 주고받습니까? (적어 주세요)

	연락 횟수
(1) 친구	월 평균 ()회 정도
(2) 친척	월 평균 ()회 정도
(3) 주변 이웃	월 평균 ()회 정도

35. 귀하는 수첩이나 휴대폰 등에 기록하여 보관 중인 아는 사람들(친척, 친구, 동료, 이웃, 사회적

지인 등의 전화번호가 몇 개 정도 되십니까?

- ①20개 미만 ----②21-50개 ----③51-100개
 ----④101-200개 ----⑤201-400개 ----⑥400개 이상

36. 귀하께서는 다음의 여러 가지 집단구성원으로서 얼마나 소속감을 느끼십니까?

	응답란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	④별로 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가족구성원으로서 나의 가정에 소속감을 느낀다					
(2) 나는 동민으로서 거주하는 동네에 소속감을 느낀다					
(3) 나는 구민으로서 거주하는 구(區)에 소속감을 느낀다					
(4) 나는 시민으로서 부산시에 소속감을 느낀다					
(5) 나는 국민으로서 한국에 소속감을 느낀다					
(6) 나는 인류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에 소속감을 느낀다					

끝으로, 조사결과를 해석하기 위한 몇 가지 사항을 여쭙겠습니다.

37.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남 ----②여

38. 귀하의 연령은 얼마입니까? (적어 주세요) 만 ___세

39.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 ①불교 ----②기독교(개신교) ----③천주교(가톨릭)
 ----④원불교 ----⑤천도교 ----⑥유교

----⑦기타(무엇:) ----⑧없다

40. 귀하는 현재 거주지에서 얼마 동안이나 사셨습니까? (적어 주세요)
약 _____년

41. 귀하를 포함해서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은 모두 몇 명입니까? (적어 주세요)
_____명

42. 귀하의 혼인상태는 무엇입니까?
----①미혼 ----②기혼 ----③이혼/별거 ----④사별

43. 현재 거주하시는 집의 형태는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됩니까?
----①단독주택 ----②다세대주택 ----③연립주택
----④아파트 ----⑤빌라/맨션 ----⑥기타 (무엇:)

44. 현재 거주하시는 집은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됩니까?
----①자가 ----②전세 ----③월세/사글세
----④기타 (무엇:)

45. 귀하께서 지지하는 정당은 무엇입니까?
----①새누리당 ----②민주당 ----③진보정의당
----④통합진보당(진보당) ----⑤기타 ----⑥없다

46. 귀하의 교육수준은 무엇입니까?
----①초등학교 졸업 또는 그 이하
----②중학교 중퇴 또는 졸업
----③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
----④전문대 졸업 또는 대학중퇴
----⑤대학교 졸업 또는 그 이상

47. 귀댁의 가족 전체의 월평균 총 수입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100만원 미만 -----②100~149만원
- ③150~199만원 -----④200~249만원
- ⑤250~299만원 -----⑥300~399만원
- ⑦400~499만원 -----⑧500~999만원
- ⑨1000만원 이상

48. 귀하의 가족은 대체적으로 보아 우리 사회에서 다음 중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상층 -----②중의 상층 -----③중의 중층
- ④중의 하층 -----⑤하층

49.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직업 없음
- ②가사(전업주부)
- ③관리직(5인 이상 기업체 경영주나 간부, 5급 이상 공무원 등)
- ④사무직(회사원, 비서, 은행원, 6급 이하 공무원 등)
- ⑤판매직(도소매 자영업, 판매원, 종업원, 행상, 노점상 등)
- ⑥서비스직(요식, 숙박업의 자영업자 및 종업원, 운전기사, 조리사, 이미용사, 청소부 등)
- ⑦생산직(생산감독, 기술자, 정비사, 단순노무자, 광부 등)
- ⑧농림수산업, 광업
- ⑨전문직(의사, 약사, 교원, 연구원, 변호사, 언론인, 체육인, 예술가, 종교인 등)
- ⑩학생
- ⑪기타 (무엇:)

바쁘신 중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